

2013. 9

충남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과제 발굴 연구용역



충청남도

제 출 문

충청남도지사 귀하

이 보고서를 「충남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과제 발굴 연구 용역」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9

 충남발전연구원

원 장 강 현 수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2. 과업의 범위	5
3. 연구체계	7
제2장. 조사 개요	9
1. 조사 배경 및 목적	11
2. 조사 및 분석 방법	11
3. 조사 내용 및 쿼터	13
4. 응답자 특성	15
제3장.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과 향후 과제	17
1.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요약	19
2. 분야별 주요 조사 결과 분석	21
3.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 및 과제	32
4. 인권의식 실태조사의 한계와 향후 과제	33
5. 다른 시도의 인권계획 분석	33
6. 충청남도 인권증진 기본계획 구상(안)	41

제4장. 조사결과 분석	49
1. 충남의 전반적 인권의식 평가	51
2. 충남의 인권 침해와 차별	59
3.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110
4. 충남의 인권교육 및 행정	172
5. 인권현황과 정책	190
■ 부록 : 설문지	205

표목차

<표1-1> 인권의 3세대 구분	4
<표2-1> 설문조사 구성 내용	13
<표2-2> 조사쿼터	14
<표2-3> 응답자 특성	16
<표3-1> 자유권적 인권 침해의 심각성 인식	22
<표3-2> 사회권적 인권 침해의 심각성 인식	22
<표3-3>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주요 과제	34
<표3-4>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주요 과제	36
<표3-5> 울산 동구 인권기본계획 세부 사업	38
<표3-6> 서울 성북구 인권계획 추진 방향	39
<표3-7>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세부사업(안)	42

그림목차

<그림1-1> 과업의 공간적 범위	6
<그림1-2> 연구의 체계	7
<그림3-1>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 및 과제	32
<그림3-2> 충청남도 인권증진 비전과 전략(안)	41
<그림3-3>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추진 체계	43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인권의 개념

■ 인권의 개념과 구성 내용

○ 인권의 개념

-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인 이상 누구나 가진다고 추정되는 권리

○ 인권의 구성 내용

- '모든 사람'이 가진다고 여겨지는 만큼 인권은 모든 인류 구성원에게 보편 타당함
- 인권은 발생의 근원이 인간 자체, 즉 '인간성(humanity)'에게 있음
- 인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이 인권의 대상이 됨
- 인간의 삶은 특정 사회 및 사회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특정 사회와 사회관계가 전제되어야 함
- 따라서 인권은 인간의 삶의 토대가 되는 지역에 근거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구성원이 보편타당하게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추구되어야 함

■ 인권 개념의 발전과 확장

○ 초기 인권의 실천 영역은 법의 영역이었음

- 일반적으로 법은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제일의 장치로 간주되었음
- 인권법과 인권조약, 그리고 협정이 강조됐음
- 인권 업무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판단을 내리거나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 이러한 방식은 인권의 확립과 보호에 상당한 공헌, 그러나 인권 범위의 제한, 실천의 한계 규정이라는 단점도 존재

○ 법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영역으로 인권 개념의 확장

- 인권의 1세대에서 3세대로의 확장

	제1세대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2세대 (경제적·사회적 권리)	제3세대 (집단적·연대적 권리)
세대 명칭	공민권과 정치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집합적 권리
기원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학, 개발학, 녹색이념
주요 예	투표·집회·언론의 자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고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법적 보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 주거, 의료, 고용, 적정 소득, 사회보장 등에 대한 권리	경제개발과 성장에 대한 관리
행위자	법률상당소, 국제사면위원회, 인권감시단, 난민사업	복지국가, 제3섹터, 민간의 시장 복지	경제개발기구, 지역사회개발 계획, 그린피스 등
지배적 분야	법	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옹호, 난민사업, 보호시설, 조사자, 교도소 개혁 등	사회복지서비스, 복지국가운영, 정책개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개인 및 정신적 개발
과업에서 의 규정	자유권적 인권	사회권적 인권	

〈표 1-1〉 인권의 3세대 구분

- 본 과업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인권(자유권적 인권)뿐만 아니라, 확장된 개념으로 사회권적 인권까지 포괄하는 것이 필요

■ 인권의 작동 방식

-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방식
 - 평등과 차별금지
 - 법과 규정에 근거한 접근 방식
 - 자율성과 자기결정
 - 인도주의와 평화적 방식
 - 민주적 원칙 : 참여와 책임성(정치적 책임성과 법적 책임성)
 - 공동체의 배려와 사회 전체의 복리 고려

2) 충청남도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배경 및 목적

- 충청남도 도민의 전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충남의 구성원으로서 인권관련 국제적 법률과 규약,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보장인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인 인권을 보장받고 요구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이유로 제한되거나 차별받고 있음
- 충청남도는 도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2012년 5월 「충청남도 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위 조례 제6조에는 ‘도민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
-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인권의식 실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활용이 필요한 배경
-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본계획의 방향성 설정이 목적

2.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조사 기준연도 : 2013년

2)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행정구역 전체

- 충청남도의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충청남도 행정구역 전체로 함
- 단 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과 예측의 기본단위는 최소 시·군단위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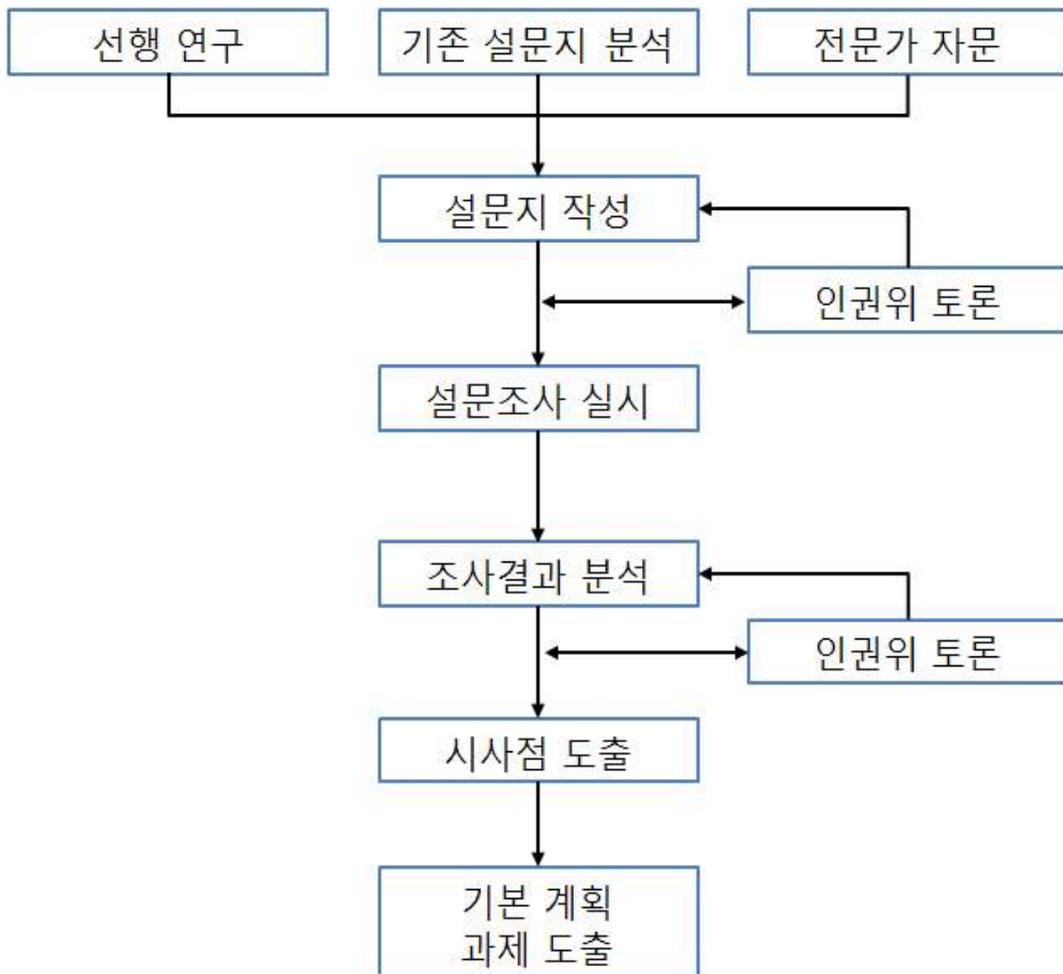
〈그림 1-1〉 과업의 공간적 범위

3) 내용적 범위

■ 조사 내용

- 충남의 전반적 인권의식, 충남 인권 침해와 차별, 인권취약계층 인권 상황, 충남 인권 교육 및 행정, 인권 현안과 정책
- 조사내용의 시사점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발굴

3. 연구의 체계



〈그림 1-2〉 연구의 체계

제2장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 배경

■ 충남의 인권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대두

- 충남도민은 헌법 및 법률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누리고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으나, 현실은 성별, 종교, 나이, 장애, 국적 등의 이유로 인권이 제한되거나 차별받고 있음
- 충청남도는 2012년 5월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위 조례 제6조 근거에 의거 '도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민의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시행해 도의 인권상황과 도민의 욕구를 파악할 필요성 대두

2) 조사 목적

■ 충남의 인권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

- 충청남도는 도민의 인권의식 실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충남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본 조사를 시행함
- 충남도민 인권의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도 인권기본계획에 담을 과제 설계

2. 조사 및 분석 방법

1) 조사 방법

■ 충남 도민 인권의식 조사 방법

-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남녀

- 유효표본
 - 총 1,328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13년 5월 22일 ~ 2013년 6월 18일
- 표본추출
 - 충청남도 15개 시군별 성·연령·인구비례 표본 할당 후 무작위 층화표본추출
- 신뢰도
 - 95% 신뢰 수준에 $\pm 2.69\%$ (응답률 50%, 유효표본 1,328)

2)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rding-Key-in-Programm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 for win에 의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평균값(mean) 등의 통계분석이 시행
- 지역(시/군)별, 성별, 연령별 변수에 따른 다양한 교차분석을 시행

3. 조사 내용 및 쿼터

1) 조사 내용

■ 설문조사 구성 내용

분야	조사항목
충남의 전반적 인권의식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충남도의 인권의식 비교 ✦ 충남도에서 추진해야 할 인권 영역
충남의 인권 침해와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의 인권 침해의 심각성 ✦ 충남도의 소수자 인권의 존중 정도 ✦ 충남도의 인권침해 요인 및 차별 발생 원인 ✦ 충남도에서의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 ✦ 인권 침해 및 차별 발생 시 조치 경험 및 대응 방안
충남 인권소외계층의 인권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인권소외 계층에 대한 일상생활 인식 ✦ 충청남도 인권소외 계층에 대한 경제활동 인식 ✦ 충청남도 인권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인식 ✦ 충청남도 인권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인식 ✦ 충청남도 인권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참여 인식
충남의 인권 교육 및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교육의 경험 및 필요성 ✦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기관 ✦ 인권 교육의 담당자 및 프로그램 ✦ 충남도의 인권보장 노력 여부와 보장 정도 ✦ 충남도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의 인지도 및 핵심 기관
인권 현안과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권적 정책에 대한 의견 ✦ 사회권적 정책에 대한 의견

〈표 2-1〉 설문조사 구성 내용

2) 조사 쿼터

■ 전체 표본 수(1,328표본)를 충청남도 시군별 인구비율에 따라 할당함.

지역 (시군)	표본 수	비율(%)	지역 (시군)	표본 수	비율(%)
천안시	308	23.19	금산군	61	4.59
공주시	83	6.25	부여군	57	4.29
보령시	67	5.05	서천군	51	3.84
아산시	154	11.60	청양군	55	4.14
서산시	87	6.55	홍성군	61	4.59
논산시	83	6.25	예산군	61	4.59
계룡시	55	4.14	태안군	56	4.22
당진시	89	6.70	계	1,32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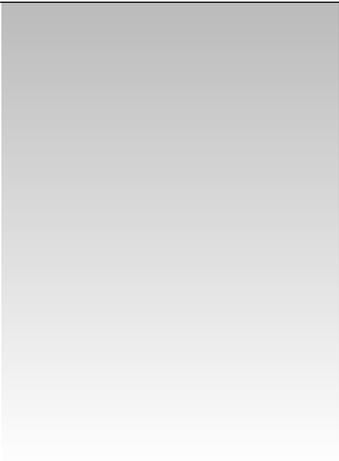
〈표 2-2〉 조사 쿼터

4.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1,328	100.0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69.7
	군 지역	402	30.3
성별	남자	661	49.8
	여자	667	50.2
연령	~ 29세	209	15.7
	31세 ~ 64세	1,001	75.4
	65세 이상	118	8.9
혼인 상태	기혼	989	74.5
	비혼(미혼, 이혼, 사별)	339	25.5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66	5.0
	중학교 졸업 이하	106	8.0
	고등학교 졸업	660	49.7
	대학교 재학이상	496	37.4
직업	전문직/자유직	60	4.5
	일반사무직/관리직	314	23.6
	판매직/서비스직	396	29.8
	생산직/기술직	84	6.3
	농업·어업	168	12.7
	가정주부·학생	281	21.2
	무직	0	0.0
	기타	25	1.9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1,328	100.0
연간가구소득	3천만 원 미만	353	26.6
	3천만 원 ~ 4천만 원 미만	436	32.8
	4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305	23.0
	5천만 원 ~ 6천만 원 미만	118	8.9
	6천만 원 이상	116	8.7
충청남도 거주 시작	1979년 이전	1,234	92.9
	1980 ~ 1994년	76	5.7
	1995 ~ 2004년	14	1.1
	2005년 이후	4	0.3
출생지	충청남도	918	69.1
	대전/충청북도	117	8.8
	서울 및 수도권	147	11.1
	기타	146	11.0

〈표 2-3〉 응답자 특성



**제3장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과
향후 과제**

1.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요약

1)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개요

- 기간·대상: 19세 이상 충청남도 거주 성인남녀 총 1,328명(13. 5.22. ~ 6.18.)
- 방법·인원: 모집단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면접조사
- 분석방법: 통계패키지(SPSS)를 이용한 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값
- 조사분야: 충남의 전반적 인권의식, 충남 인권 침해와 차별, 인권취약계층 인권 상황, 충남 인권 교육 및 행정, 인권 현안과 정책

2)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요약

■ 결과 요약

- **충남의 전반적 인권의식의 전국 비교**
 -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및 평가는 전국과 비교해서 유사
 - 제도적 정비 차원의 경우 전국의 경우보다 낮다고 인식
 - 그러나 인권 개선은 전국보다 높다는 결과
- **인권 침해와 원인**
 - 자유권적 인권침해보다는 사회권적 인권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
 - 인권약자 인권의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인식
 - 인권침해 원인은 경제력, 학력, 성별, 나이, 출신지역 등의 원인 제시
 - 인권 침해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해서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충청도민은 인식
- **인권 침해 시 대응 양상**
 - 인권 침해 시 많은 사람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거나, 당사자와 직접 해결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음

- 향후 인권 침해 발생할 경우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 대응 의지 표명
- 이와 같은 결과는 대응 의지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대응 절차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론 가능

○ 인권취약 계층 인권 상황 인식

- 충청도민은 인권취약계층인 노인,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가족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
- 인권취약 계층은 일상생활, 경제, 복지, 교육, 사회참여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 인식

○ 충남의 인권교육

- 인권 교육 경험은 얕으나 인권교육 의향과 필요성에 긍정적 인식
- 교육 주체와 대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인식 수준을 보임

○ 충남의 인권행정

- 행정의 인권보장, 노력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평가
-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나 부정적 의견도 많음
- 충남에서 시행 중인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음

2. 분야별 주요 조사 결과 분석

1) 충남 도민 인권의식 평가

■ 충남의 인권의식 내용

- 충남도의 인권 존중과 인권 상황에 대한 긍정 응답비율은 전국과 비교해서 유사하지만, 긍정적 응답 비율은 낮은 편임
 - 충남도민은 인권존중 정도를 묻는 질문에 한국사회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긍정적 응답한 비율은 35.32%이고, 충남에서는 33.21%가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
 -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존중에 대해 충남도민은 한국사회에서 인권약자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2.59%이고, 충남에서는 21.69%만이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해서 부정적 응답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낮음
- 주관적 판단으로 3년 전에 비해 인권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국사회에 대해서는 31.53%가, 충남은 48.57%가 인권이 개선되었다는 긍정의견을 표명
 - 충남도민의 절반가량은 충남의 인권 상황이 지난 3년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음
- 인권 존중 법체계 인지에 대해 전국(헌법, 72.21%)에 비해 충남(조례, 39.39%)의 인지 비율 낮음
- 충남 도민은 충청남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인권의 영역은 '인권약자 권리보호' (27.56%), '건강하고 안정적 삶의 보장' (24.85%), '쾌적하고 안전한 삶' (18.98%) 순으로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음

2) 충남도민의 인권 침해와 차별 조사

■ 인권침해와 차별

○ 자유권적 인권 침해의 심각성 인식

(단위: %)

신체구금		개인정보공개		양심 자유 침해		집회 자유 제한		노동권 침해	
심각	양호	심각	양호	심각	양호	심각	양호	심각	양호
6.27	25.75	25.68	23.31	17.78	32.00	19.05	29.67	23.34	30.49

〈표 3-1〉 자유권적 인권 침해의 심각성 인식

- 충남도민은 신체구금, 양심의 자유 침해, 집회의 자유제한, 노동권 침해 등 전통적인 인권개념인 자유권적 인권 침해 양상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비율이 부정적 응답비율보다 높음

○ 사회권적 인권 침해의 심각성 인식

(단위: %)

환경권 침해		불공평한 교육		사회복지 제한		건강권 제한		주거권 제한	
심각	양호	심각	양호	심각	양호	심각	양호	심각	양호
23.34	29.98	35.15	18.45	28.39	16.93	32.46	19.34	20.78	27.56

〈표 3-2〉 사회권적 인권 침해의 심각성 인식

- 인권의 확장된 개념인 사회권적 인권 침해에 대해서 충남도민은 비교적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불공평한 교육, 사회복지 제한, 건강(부적절한 질병치료) 등의 인권침해 양상이 심각하다고 인지

○ 인권약자 및 일반도민 인권존중 의식

- 충남도민은 인권약자와 일반도민의 인권존중 의식을 묻는 질문에 아동(41.34%), 청소년(39.01%), 일반도민(36.30%), 여성(32.98%), 복지시설 생활자(28.41%) 순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
- 이에 반해 외국인 노동자(51.73%), 비정규직 노동자(48.49%), 전과자(47.75%), 다문화 이주여성(42.25%), 장애인(40.66%), 노인(37.54%), 노동자(35.17%), 구금 시설 수감자(36.97%) 순으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 충남도민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인권침해나 사회적 차별이 발생한다고 생각함
 - 인권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충남도민은 경제적 지위(33.33%)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의견을 피력
 - 이외에도 학력 및 학벌(12.29%), 성별(7.69%), 나이(7.54%)순으로 인권침해의 원인에 대해 응답
 - 1순위+2순위를 합한 응답에서는 앞에서 제기된 원인 이외에도 '출신지역'이 인권침해나 차별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응답
- 인권 침해나 차별 발생 시 조치사항
 -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취했던 행동을 살펴보면 전체의 53.4%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
 - 그 밖에 해당기관 당사자 문제제기(31.27%), 인터넷에 부당한 호소(8.16%) 순으로 응답
 - 한편 인권 침해나 차별 발생한다면 취할 행동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38.82%가 해당기관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 한다고 응답, 행정기관의 진정(12.05%), 수사기관에 신고(11.14%), 인터넷에 부당함 호소(11.60%) 순으로 응답하였고,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0.98%에 불과

3) 충남도민의 인권취약계층 상황 인식

■ 인권취약계층의 인권상황

- 노인의 인권 상황
 - 충남도민들은 노인들의 일상 영역에서의 외로움이나 고독의 문제 (55.57%)를 가장 심각하게 여겼고, 적절한 여가 활동 어려움(50.33%), 대중교통의 이용 불편(50.30%) 등의 문제에 대해 과반 수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 65세 이상 노인들은 스스로 이와 같은 항목 대해 외로움과 고독(74.58%), 여가활동의 어려움(72.03%), 대중교통 이용 불편(66.95%)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

- 충남도민은 노인들의 경제상황에서 과반수가 구직의 어려움(54.22%)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고, 45.03%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음.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응답자로 한정했을 경우 78.82%가 구직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73.73%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본적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응답
- 충남도민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노인들이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시설이나 프로그램 부족하다는 의견을 45.63%로 가장 제시, 복지관 시설이 부족하다는 비율은 43.15%에 이룸.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들은 63.56%가 생활을 위한 주거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고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고, 62.72%가 운동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62.71%가 복지시설이 부족하다고 응답
- 노인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참여 영역에 대해서 충남도민은 41.49%가 노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현안을 논의 장소부족(37.72%)과 공공시설 입장 차별(37.72%)도 높은 비율로 응답. 반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교육프로그램 부족에 64.40%, 모임장소 부족에 57.62%, 공공시설 입장 차별에 50.85% 등 도민 전체 의견보다 높은 비율로 사회참여 여건이 어렵다고 응답

○ 청소년의 인권 상황

- 충남도민들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학교, 친구, 선후배들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46.53%가 생각하고 있고, 여가 및 문화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6.99%를 차지했음.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도시지역 보다는 군 지역 거주자들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도시지역보다 군지역의 응답 비율이 10% 이상 높게 나타남.
- 경제영역에서 충남의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임금 체납,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지급 등 부당함을 겪고 있다는 것에 긍정하는 비율(37.05%)이 부정하는 비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 청소년들은 교육영역에서 보충·야간학습 강요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65%이고, 학교운영에 청소년 의사 반영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3.22%임. 그리고 이와 같은 응답은 도시지역보다 군지역이 더 높게 나타남

○ 장애인의 인권 상황

- 충남도민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51.20%가 이동편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어폭력(46.61%)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

- 장애인들은 경제영역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구직 어려움(47.22%)을 겪고 있고, 직장 내에서는 승진이나 임금 차별(50.83%)을 받고 있다고 과반 수 이상이 응답
- 충청도민은 복지영역에서 48.04%가 장애인의 수요에 비해 복지기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관의 운영 시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과반수(51.51%)를 넘음
- 교육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교육시설 부족(51.35%)하다고 생각하고, 일반학교에서 장애인을 위한 교육편의시설 부족하다는 의견은 50.53%에 달함
-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영역에서는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투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42.31%를 차지하였고, 또한 장애인들은 식당이나 목욕탕 등 대중시설 출입 거절을 당한다는 의견도 39.69%에 이룸

○ 다문화가족 여성의 인권 상황

- 충청도민은 다문화가족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외모(47.27%)와 국적에 의한 차별(40.96%)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함
- 경제영역에서 다문화가족 여성은 구직 어려움(48.72%)을 겪을 것이고, 승진이나 임금에서 차별(60.09%)을 받는 것으로 인식함
- 다문화 가족 여성들은 복지영역에서 본인과 자녀의 의료시설 이용 어려움(39.91%)을 겪을 것이라고 인식
- 충청도민은 교육 영역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차별(51.35%)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이주 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50.60%)하여 우리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함
- 사회참여 영역에서 반상회 등 마을의사결정 참여 어려움(45.41%)이 있을 것으로 충청도민은 생각하고 있고, 언어 등 이유로 투표권이 있어도 선거 참여 어려움(43.75%)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 높음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상황

- 충청도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편견에 의한 차별(47.51%)을 받고, 그들의 국적으로 인한 차별(45.93%)을 받는다고 인식

- 외국인 노동자들은 경제영역에서 같은 일은 해도 한국인과의 차별(55.87%)이 존재하고, 직장 내에서는 폭력(46.46%)에 노출되어 있다고 충남도민은 생각하고 있음
- 충남도민은 복지와 교육영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료보험,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54.74%)을 겪고 있으며,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부족(53.84%)으로 생활의 불편이 있다고 인식

4) 충남도민의 인권 교육 및 행정 인식

■ 인권교육 인식

- 충남도민은 지금까지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12.95%에 불과하였음. 그러나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6.26%가 긍정적으로 응답, 향후 인권교육을 받을 의향에 대해서는 65.14%가 긍정적 응답
- 인권교육을 정규 교육화 하는 것에 대해서 54.97%, 모든 도민에게 인권교육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61.97%가 긍정적 응답
- 충남도민은 인권교육 담당을 묻는 질문에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40.06%,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41.27%가 긍정적 응답
- 선호하는 인권 교육프로그램은 '우리사회의 인권실태와 쟁점'(28.01%), '인권 침해와 대응방안'(22.97%), '인권 역사와 이론'(15.29%) 순으로 응답

■ 인권행정 인식

- 충남 행정의 인권 보장에 대해서 37.95%, 인권증진 노력에 대해서는 45.41%가 긍정적으로 인식
-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 대해 34.56%,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대해 32.23%, 다른 시도와의 협력에 대해 35.54%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부정적 응답도 상당 수 존재
- 충남도민은 행정의 도민 인권 보장에 대해 부족한 점으로는 '공무원 마인드 부족'(20.38%), '인권보호제도 미비'(19.50%), '도민 인권의식'(12.41%) 순으로 응답

- 충남이 실행하고 있는 인권증진제도 인식에 대해서는 인권조례제정(36.45%), 도민인권증진위원회(50.00%), 도 인권 증진계획 수립(50.53%)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부정적 응답이 우세

5) 분야별 인권의식 조사의 시사점

■ 충남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 인권 상황에 대한 낮은 평가: 인권상황 개선 필요성 인식
 - 일반적 인권의식을 전국 차원과 충청남도 차원의 비교를 통해 알아본 결과 충청남도민은 전국 및 충청남도의 인권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
 - 충청남도민은 충청남도의 인권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인권상황을 묻는 질문에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충청남도의 상황은 이전 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충청남도민은 인식하고 있다고 추론 가능
 - 충청남도민은 헌법에 기본인권 보호의 명시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긍정적인 응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헌법이 1987년에 제정된 점을 미루어 보면 도민 인권 감수성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 생각할 수 있고, 충청남도의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부정적이거나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아직은 충청남도의 제도적 차원의 인권증진 노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충청남도민은 인권정책 중 필요한 것은 인권약자의 보호, 건강한 삶, 안전한 삶의 보장으로 꼽고 있음
 - 특히 충청남에서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점으로 미루어 지역차원의 인권제도의 정비를 통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약자의 인권증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충남 인권약자에 대한 인식

- 인권약자의 인권존중 미흡과 사회권적 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
 - 충청남도민은 장애인, 다문화 여성,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인권약자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

- 자유권적 인권 보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의사에 반하는 개인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 보다 높아서 사회변동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인권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추론하면 충남의 인권정책의 방향은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계층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에 더해 전반적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권 개념은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주의적 관점으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권리에 대한 보장을 지향하는 최대주의적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고, 충남도 이러한 상황에 맞게 보다 적극적인 대응(Affirmative Action)이 필요함

■ 충남 도민의 인권 침해와 차별의 대응

○ 인권침해와 차별의 대응: 현실적 침묵과 적극 대응 의지

- 충남도민은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을 때 과반 이상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남. 무대응 이외의 대응양상은 당사자 간의 직접 해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였고, 그 양상은 당사자와의 직접해결, 행정기관의 진정 등 다양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응답
- 이러한 응답결과는 인권침해나 차별발생 시 충남도민들이 그것에 대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즉 상담, 중재, 구제 방법을 교육하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따라서 인권 침해의 중재부터 피해의 상담, 구제, 보상까지 포괄하는 중간 기구의 운영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충남도민의 인권취약계층 인식

○ 충남 노인의 인권상황 인식: 빈곤과 사회관계의 단절

- 충남도민은 노인들이 일상생활, 경제적 문제, 사회복지 영역, 교육과 사회참여 부문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들은 스스로를 경제적 어려움, 구직활동 어려움, 일상의 고독, 여가활동의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고 응답
- 이러한 충남 노인의 상황은 구직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고, 이는 다시 여가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이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을 겪는 악순환 과정에 놓임
-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장기적으로 선순환의 과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

○ 충남 청소년의 인권상황: 타율적 강압과 지역적 불평등

- 충남도민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학교,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여가와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아르바이트하면서 부당한 임금 등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생각함
- 충남의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수업시간 이외의 보충·야간학습을 강요받으며, 학교운영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폭력과 학습강요, 부당한 임금 등 청소년의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고, 이것은 교육여건의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학교 내외에서 청소년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취약지역인 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

○ 충남 장애인의 인권상황 : 총체적 인권 소외

- 충남 도민들은 장애인들이 이동편의 시설 부족 등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충남의 장애인들은 취업도 어렵고, 취업할 경우에도 임금차별 등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관 운영 시 장애인 의견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 시설운영의 형태를 띠고 있음

- 특수 교육시설 및 학교에서 교육편의시설 부족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등 투표의 어려움 등 도민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충남의 장애인들은 총체적인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투표와 교육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됨. 따라서 기존의 장애인 정책을 인권의 관점으로 재검토하고,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이 필요

○ 충남의 이주민: 편견과 문화적응의 어려움

- 충남도민의 인식에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외모나 국적에 의한 편견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직의 어려움이 있고 직장 내에서도 승진이나 임금의 차별을 받고 있고, 한국 이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우리 사회적응이 어렵고, 자녀들은 학교의 차별을 경험하며, 마을 의사결정에 참여가 어렵고 언어 등의 문제로 기본권인 선거 참여가 어려움
- 외국인 노동자들은 편견과 국적으로 인해 차별을 받고, 동일 노동에도 한국인 노동자들과 차별이 존재하고, 직장 내에서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인식됨. 그리고 의료보험과 산재보험 등의 보장이 부족하고, 한국을 이해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우리 사회의 적응이 힘든 것으로 인식됨
- 따라서 충남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차별해소 방안 마련하고, 한국 문화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

■ 충남 인권의식 조사 분석의 의미

○ 충남 인권취약계층 분석의 의미

- 충남도민은 인권취약계층에 대해 일상, 경제, 복지, 교육, 사회참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인식함
- 그러나 본 충남도민 인권의식조사는 인권취약계층 당사자와, 활동가 등 취약계층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그러한 실태 파악 이후 각 계층의 인권 증진사업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인프라 증진 사업으로 구분하여 정책 개발

- 또한 기존의 각 취약계층별로 복지사업 등 중앙정부와 도의 다양한 사업을 인권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

○ 인권 교육 : 적은 경험과 높은 의향

- 충남도민은 인권교육을 직접 받아본 경험은 적지만,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비율이 높고, 인권교육을 받을 의향도 높음.
- 또한 인권교육의 정규화와 모든 도민의 인권교육 시행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제시
- 인권교육의 주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인권 교육의 주제는 인권실태와 쟁점 등 다양한 욕구가 존재
- 인권교육은 도민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 따라서 기존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 교육의 형태, 주체, 상황, 대상을 구분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 상황과 단계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

○ 인권행정 : 상반된 평가와 인식도 부족

- 충남도민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 시민단체와의 협력 등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부정적 응답도 상당수 존재
- 충남이 실행하고 있는 인권증진제도에 대해서 충남도민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충남의 행정에서 부족한 점은 공무원 마인드, 제도 미비, 도민 인권의식 등의 문제 존재
- 인권행정은 충청남도의 인권증진을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 행정 제도의 정비와 인권문화의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와 도 내외의 협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

3.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 및 과제

분야	분석 요약	시사점
일반적 인권의식 전국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식 평가는 전국=충남 • 제도 정비는 전국>충남 • 3년 인권개선 전국<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차원의 인권 증진 제도연구 • 제도의 실제 적용 가능성 탐색
인권 침해와 침해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권적 인권 침해 심각 • 인권약자의 인권 침해 소지 • 침해 원인 경제력, 학력, 성별 순 •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양상으로 인권 침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의 다양한 원인, 계층, 양상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 최선의 경로 선택하여 증진방안 마련 필요
인권 침해의 경우 대응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無대응이 가장 일반적 • 당사자와의 직접 해결 방법 선호 • 향후에는 적극적 해결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지 부족보다 절차/방법 모름 • 대응 방법 개발 및 교육 필요 • 교육과 홍보의 병행
인권취약계층 상황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청소년, 장애인,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모두 차별 존재 • 차별은 일상, 경제, 복지, 사회참여 모든 영역에서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 계층별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상황 조사 • 기존의 도내 취약계층 계획을 재검토하여 인권증진 방안 도출 필요
충남의 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교육 경험은 낮음 • 교육의향과 필요성 긍정 • 교육 주체와 대상에 다양성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대상, 주체, 상황에 맞는 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
충남의 인권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의 인권보장, 노력에 긍정적 • 제도정비, 거버넌스에 긍정적이나 많은 부정적 평가 •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도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차원의 행정적 욕구 파악 • 제도 정비 방안 마련
기본 계획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 인권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 지방정부-시민사회-타시도-도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인권문화 조성 및 인권교육 체계 정비 및 실행 방안 마련 	

〈그림 3-1〉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 및 과제

4. 인권의식 실태조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인권의식 실태조사의 한계

- 실태조사의 모집단이 일반도민으로 한정됨으로써 인권취약계층 의식과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응답을 기초해서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의식조사의 특성상 이는 실제 충남의 현실과 괴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충남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과정

- 이번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와 인권증진위원회를 비롯한 현장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행가능한 계획의 수립
- 많은 시간을 두고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함. 이를 위해 공청회, 토론회, 자문회의 등 다양한 부문과의 소통 필요
- 인권의식 조사의 경우 인권취약계층의 요구를 듣지 못함. 이들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함
- 집행 공무원과 현장 활동가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의 필요에 의해 도출되는 사업과 실제 수행 가능한 정책을 연결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됨

5. 다른 시도의 인권계획 분석

1) 서울인권정책 제1차 기본계획(2013)

- 비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나나나)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존중받는 행복한 서울
- 서울시 기본계획의 방향
 - 서울시 행정에 인권관점을 도입한 인권정책의 청사진
 -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중점 정책
 -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통한 계획 수립

○ 주요 사업

부 문		중 점 과 제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장애인	- 탈시설 장애인 정책으로의 전환
	여성	- 돌봄 서비스 여성 종사자 권리 확대
	어르신	- 고령화 시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어르신 인권 증진
	노동	- 취약 노동자 인권 실질적 증진
	이주민	- 인권관점의 이주민 정책 추진
	피해자	- 인권피해자 치유지원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 주거권 실질적 보장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 시민의 평생학습권 신장 - 인권을 기억하고 배우는 도시 조성
인권 가치 문화 확산		- 인권행정 환경개선 - 인권감수성 향상 - 인권문화 조성
인권제도 기반 구축		- 인권친화적 언어사용 등 인권행정 적극적으로 추진 - 공무원 인권교육 전면 시행 -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전면 시행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 시민참여 활성화 -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표 3-3〉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주요 과제

○ 서울시 인권계획의 특징 및 시사점

- 인권관점의 정책방향 수립
- 기존사업을 인권적으로 재해석하고 구조화하여 의미 있는 기존사업을 확대 발전하고, 기존의 문제 있는 행정관행 개선

2) 광주 인권도시 기본 계획(2011)

○ 비전: 공감과 창조의 인권도시 광주

○ 목표

- 시민의 삶의 질과 인권을 높이는 '인권의 실질화'
- 광주의 가치와 품위를 높이는 인권정책

○ 지향점

- 참여공동체: 시민 모두가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도시
- 돌봄공동체: 사회적 배려와 나눔으로 삶이 안정된 인권도시
- 연대공동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차별을 없애는 인권도시

○ 추진전략

- 국제적·지역적 수준의 인권지표체계 및 지수 작성, 항목별 실천계획 수립
- 인권친화적 시민의식과 문화 형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학습체계 구축
- 인권의 보편 가치를 인류가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
- 세계적 인권도시로서의 품위와 가치를 높여가는 도시브랜드 제고
- 규범으로서 인권헌장 및 인권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구축

○ 광주광역시 인권기본계획의 특징 및 시사점

- 인권을 지역사회의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설정 시도
- 실질적 의미를 지닌 시민의 생활단위에서 인권 정책의 실질화 시도
- 광주의 인권도시 브랜드화 시도
- 광주의 역사적 자원(5·18 민주화운동)을 활용한 인권 정책 시도
- UN과 세계인권도시 포럼 등 국제적 공인 획득을 위한 정책적 시도로 많은 인권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도를 했으나, 이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에서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

○ 주요 사업

부 문	사 업 명
인권도시 추진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지정 인권도시 추진 원탁회의 구성 운영 -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시민위원회 재정비 - 인권도시 추진 시민 협의회 구성 검토
인권 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지수 개발 - 삶의 질 지수(인간개발 지수, 행복지수) 검토 - 인권실태 사회기초조사 및 인권영향 평가 - 인권 인증제(인센티브 부여) - 인권의식 조사 및 인권현장 모니터링 - 국제 인권규범 등 이행 강화 - 인권지수 측정 상시 시스템 구축
인권 취약계층 인권 보호 및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권·자유권 국제기준 준수 - 인권취약계층 인권개선 시책 추진 - 다문화 정책 등 인권친화성 정책 및 지원 강화 -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인권 교육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인권교육 제도화 마련 - 인권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인권도시 홍보 및 연례보고서 발간
국내·외 인권 기관·단체와 교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인권도시 포럼’ 개최 - 국제 인권평화 도시 교류 네트워킹 - 인권 리더 육성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유네스코, 국제인권단체의 인권메커니즘 연구 - 남북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인권도시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추진 - 5·18 사적지 정비 및 오월길 상징화 추진 - ‘인권평화센터’와 ‘민주·인권·평화 공원’ 조성 - 5·18 교육관 건립

〈표 3-4〉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주요 과제

3) 울산 동구 인권기본계획(2011)

- 비전: 노동과 인권이 어우러진 인권도시 동구
- 목표: 인권존중 기초자치단체 실현
- 추진전략
 - 인권친화적 시민의식과 인권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강화
 - 노동과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인권도시 동구의 미래상 구현
 - 지역생활밀착형 분야별 인권실천계획 수립
 - 동구 인권도시 선언 및 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
- 세부사업

부 문		사 업 명
인권 교육	인권교육 시행	- 공공부문/구민/학교/기업 인권교육
	인권문화 확산	- 인권소식지 발간 등 인권홍보 강화 - 인권주간행사, 각종 인권행사 지원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 인권교재 발간, 인권교육 협의회 구성 - 인권교육 강화 조례 제·개정
노동 인권	비정규직 지원센터 강화	- 비정규직 실태조사 - 이주노동자 노동 상담 강화 및 이주노동자 공동체 지원 - 청소년노동 지원 사업, 노동인권교육 시행
	차별 없는 동구청	- 동구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전면 시행 - ISO 26000 도입
	법, 제도 정비	- 관급공사 입찰업체 노동법 준수 의무규정 도입 - 노사민정 정책협의회 실질화
	저소득·빈곤노동자 지원	- 구청단위의 소득증대사업 시행
	산재 없는 직장	- 기업별, 사업주 및 노동조합 등과의 협력 강화
분야 별 정책	인권실태조사	- 분야별 인권실태조사 시행, 구민인권의식 조사 시행
	여성에 대한 정책	- 여성인권교육 강화 - 여성이 안전한 동구, 여성 소수자 정책 강화 - 여성 정책결정 참여 확대
	장애인에 대한 정책	- 장애인인권교육 강화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복지서비스의 실질화 - 장애인 인권보호 법, 제도 정비

	아동·청소년 정책	- 담당부서의 전문화, 청소년 정책결정 참여 확대 -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동구, 인권교육의 체계적 시행
	노인에 대한 정책	-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노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동구 -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
	외국인에 대한 정책	-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가정 정책의 개발 -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정책 시행 -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
추진 체제 마련	인권전담부서 신설 및 인권센터 설치	-인권담당관 신설 및 인권센터 설치
	인권 거버넌스 구축	- 인권도시 추진협의회, 인권교육협의회 - 학교인권추진단, 인권모니터링단
	동구 인권존중도시 선언	- 인권존중도시 선언 채택
	인권네트워크 구축	- 동구인권포럼 개최 - 국내외 인권도시와의 정기적 교류

〈표 3-5〉 울산 동구 인권기본계획 세부 사업

○ 울산 동구 인권계획의 특징 및 시사점

- 지역의 인권역량에 대한 종합적 파악을 통해 인권과 관련된 법, 제도, 관행의 개선을 선도
- 노동자 밀집지역으로서의 지역성 고려하여 노동과 인권의 가치 조화
- 구체적인 실태 및 의식 조사가 선행되지 않고 진행되어 사업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실제 시행에서 어려움 존재

4) 서울 성북구 인권기본계획(2013년 진행 중)

- 비전: 인권도시, 성북
- 목표: 인권이 실상화 된 도시, 인권도시 성북
 - 지속가능한 인권증진 구조 창출
 - 지역사회 인권역량 강화
 - 지역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 전제
- 전략: 단계적 추진, 총체적 접근, 인권거버넌스 구축

- 전략 추진 방향

단계적 추진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단계 - 구청 내 인권 전담 행정기구 설치 - 인권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 인권조례제정, 인권위원회 구성 -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성과 창출 단계 - 주민인권선언 제정 - 인권증진 기본계획 시행 -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 주민인권학교 등 인권교육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도시 정착단계 - 인권지표 개발 및 시행 - 다른 인권도시와의 교류·협력
총체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의 기본권 목록별 접근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별 접근
민관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상 보여주기식 성과위주나 이벤트성 행사 배제 ▪ 인권정책의 수립 및 진행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확대 노력 ▪ 지속가능성, 지역밀착형 현안중심의 사업추진이 필요

〈표 3-6〉 서울 성북구 인권계획 추진 방향

○ 서울 성북구 인권계획의 특징 및 시사점

- 기본권에 근거한 인권계획의 시행하려는 시도, 특히 최저생계의 보장을 인권을 위한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
-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하여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구분
- 인권지표의 개발 및 시행 등 계획의 지속가능성 추구하고 지역밀착형 현안중심의 사업추진

5) 다른 시도 인권기본 분석의 함의

○ 실질적 삶의 영역에서 최대주의 관점의 인권 구현 시도

- 광주의 경우 인권의 도시 브랜드화 사업을 진행했었으나, 생활 단위의 인권의 실제화 구현을 위한 노력
- 서울시, 성북구, 인천 동구의 경우 주민의 삶과 밀착된 인권정책으로 시민의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 추구

○ 인권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인권 정책 시도

- 서울시의 경우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라는 모토로 인권의 보편성 실현을 위한 계획을 하고 있고 이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
- 서울시 성북구의 경우 기본권을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으로 구분하여 계획 수립을 시도

○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인권 정책 시도

- 광주의 경우 5·18이라는 지역적이고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독자적 정책영역으로서 인권정책 추구
- 울산 동구의 경우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노동과 어우러진 인권계획 수립

○ 기존 다른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고, 지속가능한 인권정책 시도

- 인권 정책은 기존의 정책, 특히 복지 정책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 기존의 정책 사업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이를 사업으로 재구조화하여 의미 있는 기존사업을 확대 발전시킴
- 보여주기 위주의 일회적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권정책의 추진

6.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 구상(안)

1)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 구상(안)

■ 충남 인권의식 실태조사와 다른 시도 계획에서 도출한 인권계획 원칙

- [도민의 삶의 밀착성] 행정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실무자의 실천 현장에 바탕을 둔 정책의 수립
- [기본권 보장의 최적화 접근] 충남도민 누구도 예외 없이 기본권(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에 대해 최소한의 보장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 수립. 특히 기본권에 대한 보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정책 필요
- [지역의 특수성]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권리이자, 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존중되어야 함. 따라서 삶의 터전이 되는 지역의 특수성에 기초한 정책 수립
- [상호 보완성과 지속가능성] 인권의 아직까지 추상적 선언으로 인식되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어 복지정책 등 기존의 정책과 세부 사업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기존의 정책을 인권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확대 발전시켜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인권증진 정책 수립

2) 충청남도 인권증진 비전과 전략(안)

비 전	일상생활 속에 인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충남			
전 략	더불어 함께하는 인권	인권 제도정비	인권 문화 조성과 확산	인권 거버넌스
세 부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취약계층 인권 증진 • 인권취약계층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인권친화적 행정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 정비 • 인권감수성 높이는 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시민 참여에 기반한 인권 문화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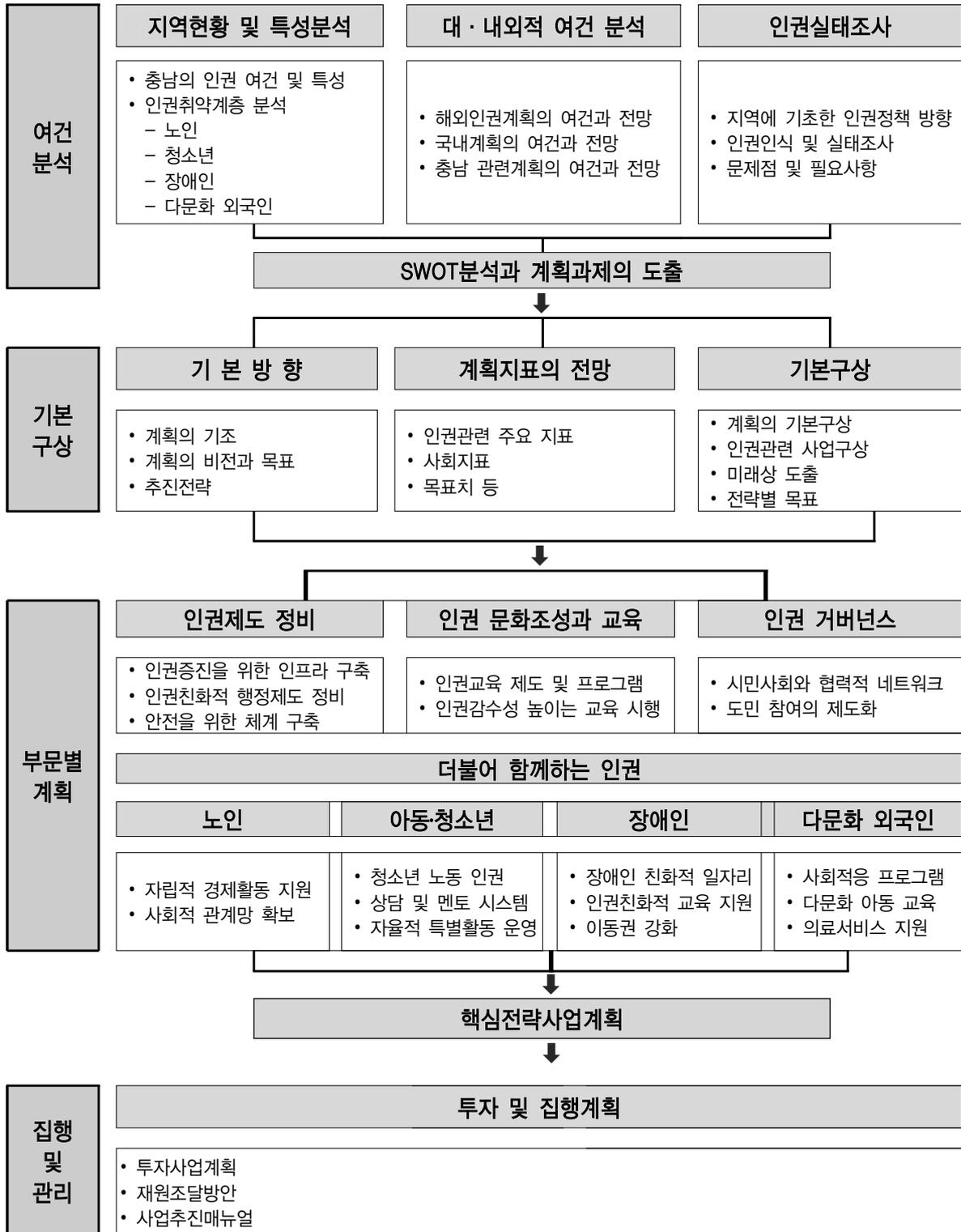
〈그림 3-2〉 충청남도 인권증진 비전과 전략(안)

3)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의 세부사업(안)

부 문	사 업 명	기존사업관계		
		기존	신규	
더불어 함께하는 인권 (인권취약계 층 인권증진)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친화적 일자리 창출 독거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 개발 	● ●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노동인권(아르바이트) 개선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멘토 시스템 특별활동에 청소년 의견반영체계 마련 		● ● ●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친화적 일자리 구축 학교 내 장애인 교육 지원 장애인 이동권 강화 	● ● ●	
	이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민(노동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언어장벽 없애는 통역지원 서비스 다문화 가족 아동 교육 지원 민관협동 이주민 의료서비스 	● ● ●	●
인권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인권상담 센터 운영 내포신도시 인권친화 공간조성 투표편의시설(노인·장애인·이주민) 확보 인권피해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 ● ● ● ●
	행정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도 인권담당관 설치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 구축 인권친화적 행정체계 구축 	●	● ●
	안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 안전체계 정비 생명존중(자살예방) 체계 구축 	● ●	
인권문화 조성과 교육	인권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교사 양성 인권교육 시민단체 지원 		● ● ●
	인권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인권교육 의무화 도민대상 인권아카데미 운영 도내 기업 대상 인권 교육 		● ● ●
인권 거버넌스	시민사회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사회와 인권협의회 정기개최 교육, 상담 등에 NGO 협력체계 구축 도내 인권 NGO 네트워크 지원 국내/국제 인권 네트워크 구축 이주민 정착지원 민·관 네트워크구축 		● ● ● ● ●
	도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민 참여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 옴부즈만 제도 운영 도민과 함께 하는 인권행사 정례화 		● ● ●

〈표 3-7〉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세부사업(안)

4)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추진체계(안)



〈그림 3-3〉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추진 체계

5) 충청남도 인권증진 기본 계획 구상의 한계

- **충남의 인권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현재의 구상(안)은 충남 인권 의식 실태조사와 다른 시도의 인권기본계획, 충남도의 다른 정책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서 인권취약계층, 인권활동가 등의 실태 및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
-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조율 미진:** 권증진계획과 관련된 이해당사자(행정담당자-인권 시민사회단체-인권취약계층-도민)들의 이견조율이 충분하지 않음
- **인권의 지역적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불충분:** 인권의식 실태조사는 학계에서 논의 되는 추상적이고 이론적 인권개념을 바탕으로 충남도민의 일반적 인권의식에 대한 조사만 시행하였고, 다른 시도의 기본계획도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권 도시’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도농이 혼재된 충남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존재
-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 공청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등과 실태조사를 거쳐 충남의 여건을 파악 하여 지속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이 수립해야 함

6)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 로드맵

- 충청남도에 활용가능한 인권개념의 정립
 - 인권위원회-행정담당자-용역담당자-도민의 인권에 대한 밀도 있는 선행학습이 필요
 - 보편적 인권개념에서 출발하여 해외사례, 법체계, 국내의 적용 등을 전문가와 함께 공부하면서 충청남도에서 활용가능한 인권개념 정립 필요
- 여건 분석
 - ① 지역현황 및 특성 분석
 - 충청남도의 일반적 특성 및 인권 여권에 대한 분석
 - 인권취약계층(노인,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의 현황 및 특성 분석
 - 공청회, 자문회의, 이해당사자 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필요한 부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실태조사

② 대·내외적인 여건 분석

- 인권도시 포럼 등 해외의 인권계획 분석을 통해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미 도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의 인권계획 권고안, 서울과 광주 등 광역단체의 인권계획안, 울산 동구와 서울 성북구 등 기초단체의 인권계획안을 분석하여 충남에 적용이 가능한 의미 발견
- 충남 지역사회복지 시행 계획 등 충남 인권증진과 관련된 계획 및 사업을 인권 관점에서 분석하여 인권증진기본계획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 도출

③ 충남 인권실태조사

- 기존에 실행된 충남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취약계층과 이해당사자의 의식조사와 인권요구에 대한 조사 시행
- 이 조사결과를 인권의식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문제점 및 필요사항 도출
- 이를 충남에서 적용가능한 인권개념과 접목하여 인권 정책의 방향 설정

④ SWOT분석 등을 통해 계획 과제의 도출

○ 기본 구상

① 기본방향 설정

- 여건 분석을 통해 설정된 계획과제의 방향성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고 계획의 기초 설정
- 이러한 기초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비전과 목표의 설정
- 설정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설정

② 계획지표의 설정

- 계획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충남에서 적용가능한 인권지표 설정
- 이를 위해 기존의 인권관련 주요지표, 사회지표 등을 검토
- 인권지표가 설정되면 연차별, 부분별 목표치 설정

③ 기본 구상

- 인권증진기본계획의 추진 사업에 대한 기본적 구상
- 사업시행에 따른 충남의 인권 미래상 도출
- 각 전략별 단기, 중장기 목표 설정

○ 부분별 계획 수립

① 기본권, 특히 평등권 달성을 위한 인권취약계층의 목표 수립

- 조례에 명시된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외국인(결혼 이주 여성, 노동자)의 차별을 극복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 설정

▪ 노인: 빈곤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충남의 노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구직 어려움→경제적 곤란→여가 활동의 어려움→사회적 관계의 단절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과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책 필요

▪ 아동·청소년: 타율적 강압과 지역적 불평등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의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 특히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도농 간의 지역적 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장애인: 총체적인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 권리행사를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이 우선으로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인 정책을 인권의 관점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정책개발이 필요

▪ 충남의 이주민(다문화 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충남 이주민의 피부색과 국적의 편견에 시달리고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이 겪고 있고,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 소외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적응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본적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의 정책적 방안 마련 필요

-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권의식 조사결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된 노동 부문(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증진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

- 충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자, 해안 안전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이들을 치유하는 방안을 마련 필요

② 인권취약계층과 일반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적·문화적 차원(인권제도, 문화와 교육, 거버넌스)의 사업계획 수립

-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구축 방안, 행정제도 정비, 안전체계 구축 등의 사업 계획 수립

- 인권교육프로그램 정비, 인권교육 교사 양성, 인권교육 시행 등의 계획

- 인권증진을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

③ 도출된 사업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단계별 핵심전략사업계획 수립

○ 집행 및 관리계획

- 단계별 핵심 사업이 도출되면 투자사업계획과 비예산 사업계획으로 구분
- 투자사업의 경우 투입예산의 산출과 재원조달 방법 마련
- 개별 사업에 대한 매뉴얼 작성

○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의 환류(feedback)체계

- 계획 수립을 위한 각 과정은 연구실행 기관-충남도-인권증진위원회-시민사회-도민의 열린 논의 구조를 통해 정해짐
- 개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문제를 반영하여 새로운 체계를 도출하는 방식의 환류체계로 계획수립을 진행하여 충남도민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계획 수립

제4장 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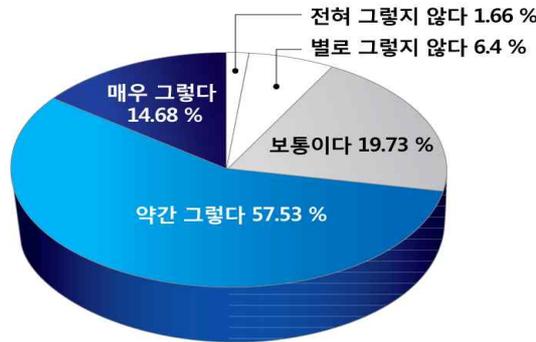
1. 충남의 전반적 인권 의식 및 평가

1)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 인권보호 헌법 명시 인식

기본적 인권의 보호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 대한민국 헌법에 기본적 인권보호의 내용이 명시되었는지를 인지하고 있는 질문에 전체의 72.2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8.06%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70.74%, 군지역 75.62%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76.25%)의 인지도가 여성(68.21)의 인지도보다 높음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77.99%), 30~64세 이하(73.72%), 65세 이상(49.15%) 순으로 인지도가 높음

■ 인권보호 헌법 명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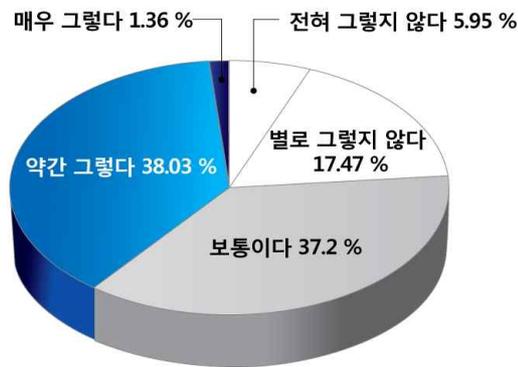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1.66	6.40	19.73	57.53	14.68	8.06	19.73	72.21	3.77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62	7.02	20.63	58.32	12.42	8.64	20.63	70.74	3.73
	군 지역	402	1.74	4.98	17.66	55.72	19.90	6.72	17.66	75.62	3.87
성별	남성	661	0.76	5.60	17.40	59.76	16.49	6.36	17.40	76.25	3.86
	여성	667	2.55	7.20	22.04	55.32	12.89	9.75	22.04	68.21	3.69
연령	~29세	209	0.48	3.35	18.18	65.55	12.44	3.83	18.18	77.99	3.86
	30~64세	1,001	1.00	6.19	19.08	58.64	15.08	7.19	19.08	73.72	3.81
	65세 이상	118	9.32	13.56	27.97	33.90	15.25	22.88	27.97	49.15	3.32

■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인지

충청남도는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을 제정한 것을 알고 있다

- 충청남도의 도민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전체의 39.3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3.42%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39.31%, 군 지역 39.55%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41.76%)의 인지도가 여성(37.03%)의 인지도보다 높음
- 연령대별로는 30~64세 이하(41.56%), 29세 이하(40.19%), 65세 이상(19.49%) 순으로 인지도가 높음



■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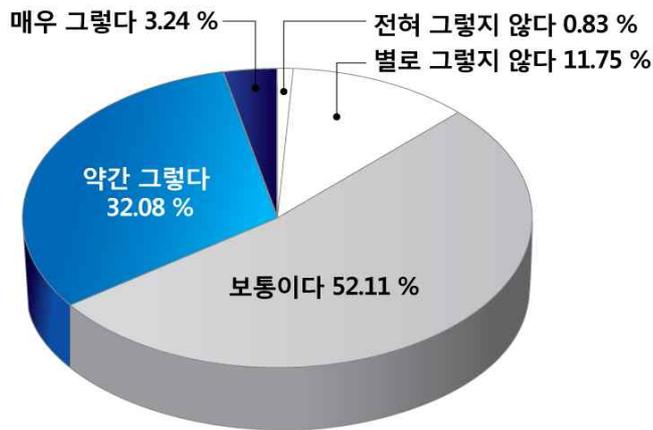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5.95	17.47	37.20	38.03	1.36	23.42	37.20	39.39	3.11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6.70	17.71	36.29	38.01	1.30	24.41	36.29	39.31	3.10
	군 지역	402	4.23	16.92	39.30	38.06	1.49	21.15	39.30	39.55	3.16
성별	남성	661	4.84	14.52	38.88	39.79	1.97	19.36	38.88	41.76	3.20
	여성	667	7.05	20.39	35.53	36.28	0.75	27.44	35.53	37.03	3.03
연령	~29세	209	3.83	12.92	43.06	39.71	0.48	16.75	43.06	40.19	3.20
	30~64세	1,001	4.80	17.68	35.96	39.96	1.60	22.48	35.96	41.56	3.16
	65세 이상	118	19.49	23.73	37.29	18.64	0.85	43.22	37.29	19.49	2.58

■ 한국 인권 존중 인식

한국의 인권은 존중되고 있다

- 한국 인권 존중에 대해 전체의 35.32%가 긍정적으로, 11.58%가 부정적으로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32.50%, 군 지역 41.79%가 긍정적으로 응답
- 성별로는 남성(37.06%)이 여성(33.58%)에 비해 긍정적 응답 비율 높음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36.37%), 30~64세 이하(35.67%), 65세 이상(30.51%) 순으로 긍정적 응답 비율 높음

■ 한국 인권 존중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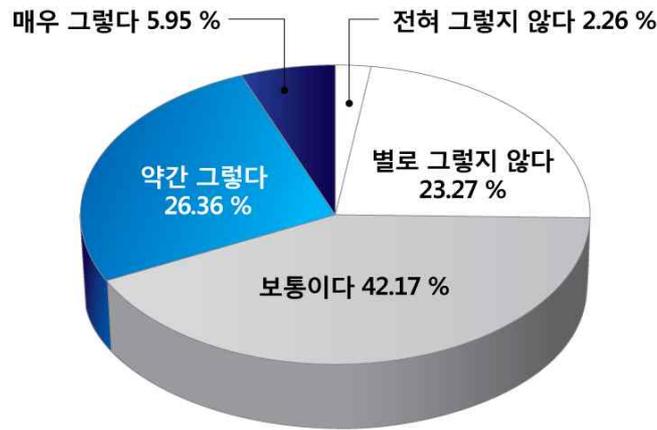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83	11.75	52.11	32.08	3.24	12.58	52.11	35.32	3.25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97	13.39	53.13	29.91	2.59	14.36	53.13	32.50	3.20
	군 지역	402	0.50	7.96	49.75	37.06	4.73	8.46	49.75	41.79	3.38
성별	남성	661	0.91	12.71	49.32	33.28	3.78	13.62	49.32	37.06	3.26
	여성	667	0.75	10.79	54.87	30.88	2.70	11.54	54.87	33.58	3.24
연령	~29세	209	1.44	11.00	51.20	32.54	3.83	12.44	51.20	36.37	3.26
	30~64세	1,001	0.80	11.39	52.15	32.17	3.50	12.19	52.15	35.67	3.26
	65세 이상	118	0.00	16.10	53.39	30.51	0.00	16.10	53.39	30.51	3.14

■ 한국의 인권 개선

3년 전에 비해서 한국의 인권은 나아졌다

○ 3년 전에 비해 한국의 인권 개선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32.31%가 긍정적으로, 25.53%가 부정적으로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31.54%, 군 지역 34.08%가 긍정적으로 응답
- 성별로는 남성(32.08%)과 여성(32.54%)이 비슷한 긍정적 응답 비율
- 연령대별로는 30~64세 이하(33.26%), 29세 이하(30.15%), 65세 이상(27.97%) 순으로 긍정적 응답 비율 높음

■ 한국의 인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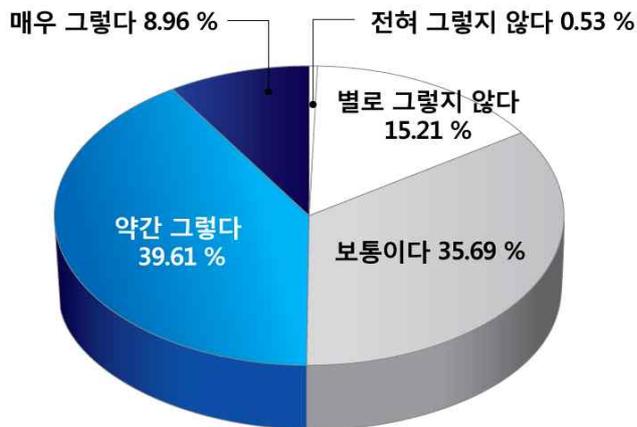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2.26	23.27	42.17	26.36	5.95	25.53	42.17	32.31	3.10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84	21.92	44.71	27.11	4.43	23.76	44.71	31.54	3.10
	군 지역	402	3.23	26.37	36.32	24.63	9.45	29.60	36.32	34.08	3.11
성별	남성	661	2.87	22.54	42.51	24.36	7.72	25.41	42.51	32.08	3.11
	여성	667	1.65	23.99	41.83	28.34	4.20	25.64	41.83	32.54	3.09
연령	~29세	209	3.83	29.19	36.84	22.97	7.18	33.02	36.84	30.15	3.00
	30~64세	1,001	1.80	22.08	42.86	27.27	5.99	23.88	42.86	33.26	3.14
	65세 이상	118	3.39	22.88	45.76	24.58	3.39	26.27	45.76	27.97	3.02

■ 충남의 인권 개선

3년 전에 비해서 충청남도의 인권은 나아졌다

- 3년 전에 비해 충남의 인권 개선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48.57%가 긍정적으로, 15.74%가 부정적으로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45.47%, 군 지역 55.72%가 긍정적으로 응답
- 성별로는 남성(49.17%)이 여성(41.98%)에 비해 긍정적 응답 비율 높음
-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52.55%), 30~64세 이하(49.65%), 29세 이하(41.15%), 순으로 긍정적 응답 비율 높음

■ 충남의 인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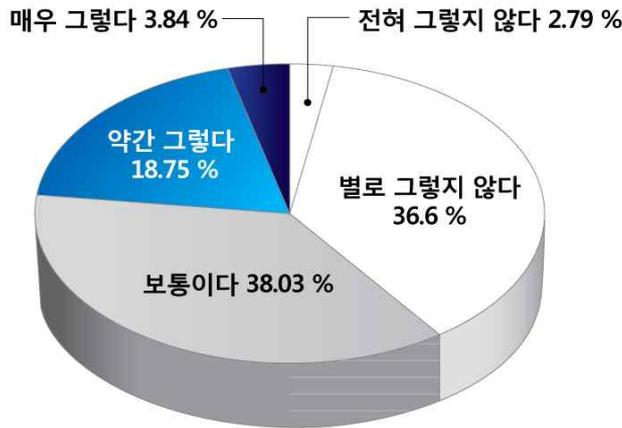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53	15.21	35.69	39.61	8.96	15.74	35.69	48.57	3.41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54	15.12	38.88	38.88	6.59	15.66	38.88	45.47	3.36
	군 지역	402	0.50	15.42	28.36	41.29	14.43	15.92	28.36	55.72	3.54
성별	남성	661	0.61	15.58	34.64	39.03	10.14	16.19	34.64	49.17	3.43
	여성	667	0.45	14.84	36.73	40.18	7.80	15.29	36.73	47.98	3.40
연령	~29세	209	0.48	18.18	40.19	31.10	10.05	18.66	40.19	41.15	3.32
	30~64세	1,001	0.50	14.69	35.16	40.76	8.89	15.19	35.16	49.65	3.43
	65세 이상	118	0.85	14.41	32.20	44.92	7.63	15.26	32.20	52.55	3.44

■ 한국의 인권약자 인권 존중

한국사회에서 인권약자(노인,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가족, 외국인 노동자 등)의 인권은 존중되고 있다

- 한국의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존중에 대해 전체의 22.59%가 긍정적으로, 39.39%가 부정적으로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18.25%, 군 지역 32.58%가 긍정적으로 응답
- 성별로는 남성(23.45%)이 여성(21.74%)에 비해 긍정적 응답 비율 높음
-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28.82%), 30~64세 이하(22.18%), 29세 이하(21.05%), 순으로 긍정적 응답 비율 높음

■ 한국의 인권약자 인권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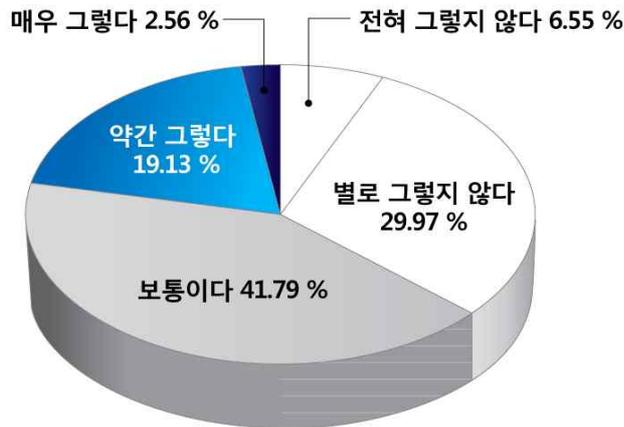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2.79	36.60	38.03	18.75	3.84	39.39	38.03	22.59	2.84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3.13	40.39	38.23	15.12	3.13	43.52	38.23	18.25	2.75
	군 지역	402	1.99	27.86	37.56	27.11	5.47	29.85	37.56	32.58	3.06
성별	남성	661	2.57	34.19	39.79	19.67	3.78	36.76	39.79	23.45	2.88
	여성	667	3.00	38.98	36.28	17.84	3.90	41.98	36.28	21.74	2.81
연령	~29세	209	2.87	41.63	34.45	15.79	5.26	44.50	34.45	21.05	2.79
	30~64세	1,001	2.70	35.56	39.56	18.28	3.90	38.26	39.56	22.18	2.85
	65세 이상	118	3.39	36.44	31.36	27.97	0.85	39.83	31.36	28.82	2.86

■ 충남의 인권약자 인권 존중

충청남도에서 인권약자(노인,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가족, 외국인 노동자 등)의 인권은 존중되고 있다

- 충청남도의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존중에 대해 전체의 21.69%가 긍정적으로, 36.52%가 부정적으로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19.65%, 군 지역 26.37%가 긍정적으로 응답
- 성별로는 남성(21.33%)이 여성(22.04%)에 비해 긍정적 응답 비율 낮음
-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27.96%), 29세 이하(24.88%), 30~64세 이하(20.28%) 순으로 긍정적 응답 비율 높음

■ 충남의 인권약자 인권 존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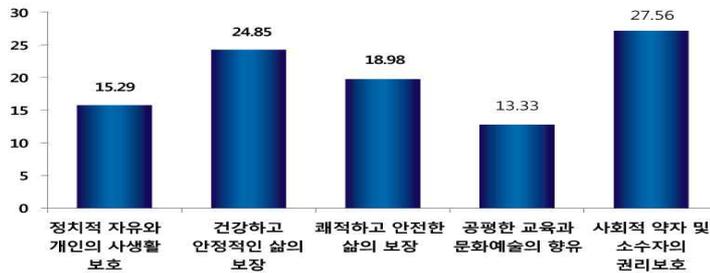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6.55	29.97	41.79	19.13	2.56	36.52	41.79	21.69	2.81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7.45	33.37	39.52	17.60	2.05	40.82	39.52	19.65	2.73
	군 지역	402	4.48	22.14	47.01	22.64	3.73	26.62	47.01	26.37	2.99
성별	남성	661	6.05	31.01	41.60	18.76	2.57	37.06	41.60	21.33	2.81
	여성	667	7.05	28.94	41.98	19.49	2.55	35.99	41.98	22.04	2.82
연령	~29세	209	5.26	29.67	40.19	22.49	2.39	34.93	40.19	24.88	2.87
	30~64세	1,001	6.79	29.47	43.46	17.98	2.30	36.26	43.46	20.28	2.80
	65세 이상	118	6.78	34.75	30.51	22.88	5.08	41.53	30.51	27.96	2.85

2) 충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인권 영역

■ 중점 추진 인권 영역

충청남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인권의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충남에서 추진해야할 인권영역에 대한 질문에 '인권약자 보호'(27.56%),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 보장'(24.85%),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보장'(18.98%)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시군 지역 모두 '인권약자 보호'(28.40%, 25.62%)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
- 남성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26.78%), 여성은 '인권약자 보호'(30.73%)를 가장 우선순위로 놓음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30대 이상은 '인권약자 보호'(45.79%)를 가장 높은 순위로 응답

■ 충남의 중점 추진 영역

(단위: %)

		사례수 (명)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의 보장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보장	공평한 교육과 문화예술의 향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보호
전 체		1,328	15.29	24.85	18.98	13.33	27.56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2.85	25.38	20.84	12.53	28.40
	군 지역	402	20.90	23.63	14.68	15.17	25.62
성별	남성	661	17.25	26.78	20.42	11.20	24.36
	여성	667	13.34	22.94	17.54	15.44	30.73
연령	~29세	209	16.27	22.97	18.18	21.53	21.05
	30~64세	1,001	15.38	26.07	19.48	12.29	26.77
	65세 이상	118	12.71	17.80	16.10	7.63	4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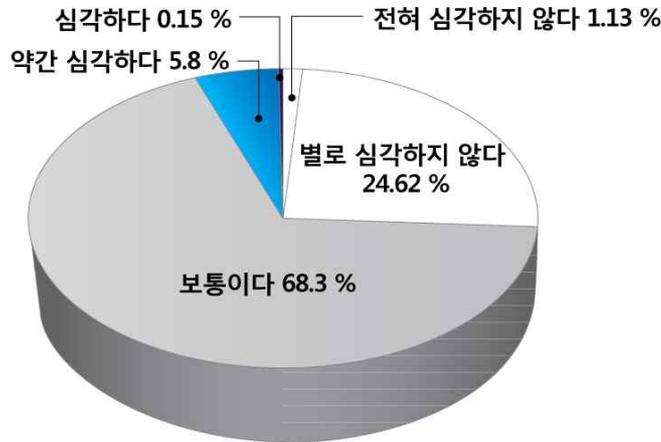
2. 충남의 인권 침해와 차별

1) 인권침해의 심각성

■ 신체구속의 심각성

경찰, 검찰이 불법적으로 불심검문, 연행, 구금, 심문하는 것

- 경찰/검찰에 의한 불심검문 등 신체구속의 심각성에 대해 전체의 25.75%가 심각하지 않은 편, 5.95%가 심각한 편으로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25.16%, 군 지역 27.11%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26.77%)이 여성(24.74%)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는 비율 높음
-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28.82%), 29세 이하(27.27%), 30~64세 이하(25.08%) 순으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신체구속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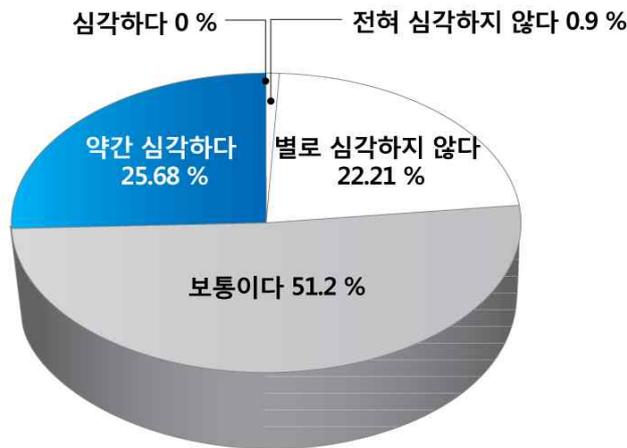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심각하지 않은 편	보통	심각한 편		
전 체	1,328	1.13	24.62	68.30	5.80	0.15	25.75	68.30	5.95	2.79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08	24.08	68.57	6.05	0.22	25.16	68.57	6.27	2.80
	군 지역	402	1.24	25.87	67.66	5.22	0.00	27.11	67.66	5.22	2.77
성별	남성	661	1.51	25.26	66.87	6.05	0.30	26.77	66.87	6.35	2.78
	여성	667	0.75	23.99	69.72	5.55	0.00	24.74	69.72	5.55	2.80
연령	~29세	209	0.48	26.79	67.46	5.26	0.00	27.27	67.46	5.26	2.78
	30~64세	1,001	0.90	24.18	68.73	5.99	0.20	25.08	68.73	6.19	2.80
	65세 이상	118	4.24	24.58	66.10	5.08	0.00	28.82	66.10	5.08	2.72

■ 개인정보 공개의 심각성

본인 모르게 신문, 방송,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

- 개인 의사에 반하는 개인정보 공개의 문제에 대해 전체의 25.68%가 심각한 편, 23.11%가 심각하지 않은 편으로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28.51%, 군 지역 19.15%가 심각하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25.72%, 여성의 25.64%가 심각하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30~64세 이하(26.67%), 29세 이하(26.32%), 65세 이상(16.10%) 순으로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 높음

■ 개인정보 공개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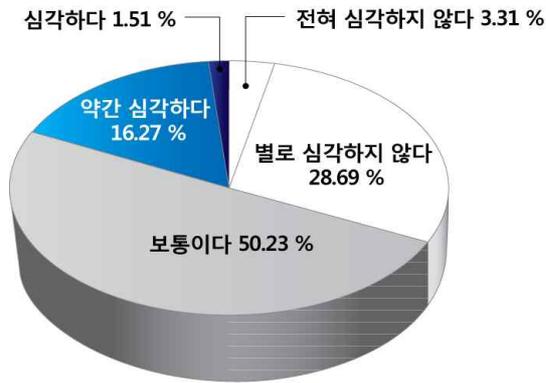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심각하지 않은 편	보통	심각한 편		
전 체	1,328	0.90	22.21	51.20	25.68	0.00	23.11	51.20	25.68	3.02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86	21.27	49.35	28.51	0.00	22.13	49.35	28.51	3.06
	군 지역	402	1.00	24.38	55.47	19.15	0.00	25.38	55.47	19.15	2.93
성별	남성	661	0.76	21.33	52.19	25.72	0.00	22.09	52.19	25.72	3.03
	여성	667	1.05	23.09	50.22	25.64	0.00	24.14	50.22	25.64	3.00
연령	~29세	209	0.00	24.88	48.80	26.32	0.00	24.88	48.80	26.32	3.01
	30~64세	1,001	1.10	21.48	50.75	26.67	0.00	22.58	50.75	26.67	3.03
	65세 이상	118	0.85	23.73	59.32	16.10	0.00	24.58	59.32	16.10	2.91

■ 양심의 자유 침해의 심각성

자신의 종교, 신념,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당하는 것

○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에 대해 전체의 17.78%가 심각한 편, 32.00%가 심각하지 않은 편으로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18.25%, 군 지역 16.67%가 심각하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19.52%, 여성의 16.04%가 심각하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23.93%), 65세 이상(17.80%), 30~64세 이하(16.04%) 순으로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양심의 자유 침해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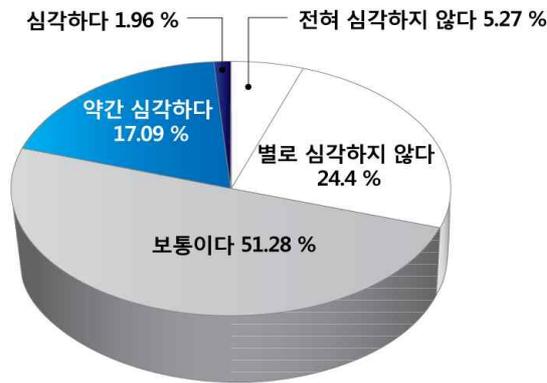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그렇다	중 합			5점 평균 (점)	
							심각하지 않은 편	보통	심각한 편		
전 체	1,328	3.31	28.69	50.23	16.27	1.51	32.00	50.23	17.78	2.84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3.24	27.00	51.51	16.52	1.73	30.24	51.51	18.25	2.87
	군 지역	402	3.48	32.59	47.26	15.67	1.00	36.07	47.26	16.67	2.78
성별	남성	661	1.97	28.14	50.38	18.46	1.06	30.11	50.38	19.52	2.89
	여성	667	4.65	29.24	50.07	14.09	1.95	33.89	50.07	16.04	2.79
연령	~29세	209	4.78	27.27	44.02	20.10	3.83	32.05	44.02	23.93	2.91
	30~64세	1,001	2.70	29.47	51.35	15.38	1.10	32.17	51.35	16.48	2.83
	65세 이상	118	5.93	24.58	51.69	16.95	0.85	30.51	51.69	17.80	2.82

■ 시위/집회 자유 제한

시위, 집회 등의 자유가 제한받는 것

- 시위, 집회 자유의 제한에 대해 전체의 19.05%가 심각한 편, 29.67%가 심각하지 않은 편으로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18.03%, 군 지역 21.39%가 심각하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19.52%, 여성의 18.59%가 심각하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25.43%), 30~64세 이하(19.08%), 29세 이하(15.31%) 순으로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시위/집회 자유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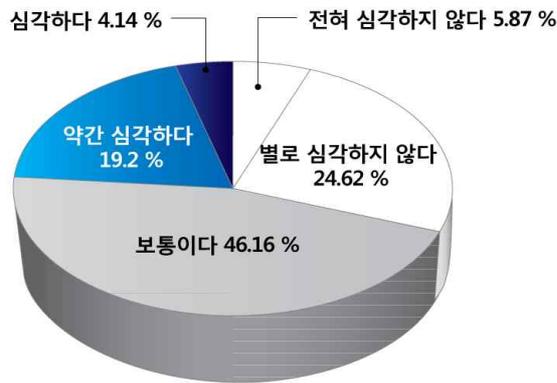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그렇다	중 합			5점 평균 (점)	
							심각하지 않은 편	보통	심각한 편		
전 체	1,328	5.27	24.40	51.28	17.09	1.96	29.67	51.28	19.05	2.86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4.43	23.33	54.21	15.98	2.05	27.76	54.21	18.03	2.88
	군 지역	402	7.21	26.87	44.53	19.65	1.74	34.08	44.53	21.39	2.82
성별	남성	661	4.99	24.05	51.44	17.10	2.42	29.04	51.44	19.52	2.88
	여성	667	5.55	24.74	51.12	17.09	1.50	30.29	51.12	18.59	2.84
연령	~29세	209	8.13	18.18	58.37	13.40	1.91	26.31	58.37	15.31	2.83
	30~64세	1,001	4.60	25.07	51.25	17.38	1.70	29.67	51.25	19.08	2.87
	65세 이상	118	5.93	29.66	38.98	21.19	4.24	35.59	38.98	25.43	2.88

■ 노동권 침해

직장 등에서 개인의 노조 가입 등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것

- 노조 가입 등 노동권 침해에 대해 전체의 23.34%가 심각한 편, 30.49%가 심각하지 않은 편으로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23.11%, 군 지역 23.88%가 심각하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24.51%, 여성의 22.19%가 심각하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26.31%), 30~64세 이하(22.88%), 65세 이상(22.03%) 순으로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 높음

■ 노동권 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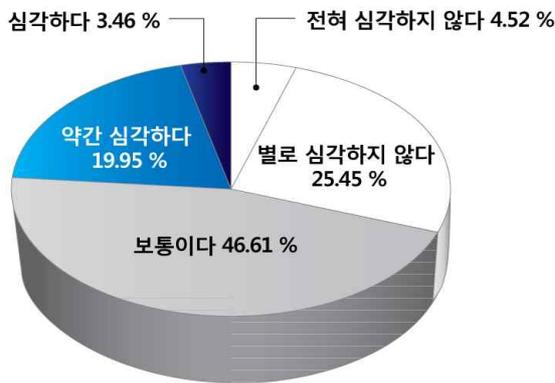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그렇다	중 합			5점 평균 (점)	
							심각하지 않은 편	보통	심각한 편		
전 체	1,328	5.87	24.62	46.16	19.20	4.14	30.49	46.16	23.34	2.91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4.43	25.49	46.98	19.44	3.67	29.92	46.98	23.11	2.92
	군 지역	402	9.20	22.64	44.28	18.66	5.22	31.84	44.28	23.88	2.88
성별	남성	661	5.90	24.21	45.39	19.97	4.54	30.11	45.39	24.51	2.93
	여성	667	5.85	25.04	46.93	18.44	3.75	30.89	46.93	22.19	2.89
연령	~29세	209	6.22	21.53	45.93	17.70	8.61	27.75	45.93	26.31	3.01
	30~64세	1,001	5.79	25.77	45.55	19.58	3.30	31.56	45.55	22.88	2.89
	65세 이상	118	5.93	20.34	51.69	18.64	3.39	26.27	51.69	22.03	2.93

■ 쾌적한 생활 환경권 침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

-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해 전체의 23.41%가 심각한 편, 29.97%가 심각하지 않은 편으로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23.11%, 군 지역 24.13%가 심각하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26.48%, 여성의 20.39%가 심각하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31.57%), 65세 이상(27.12%), 30~64세 이하(21.28%) 순으로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쾌적한 생활 환경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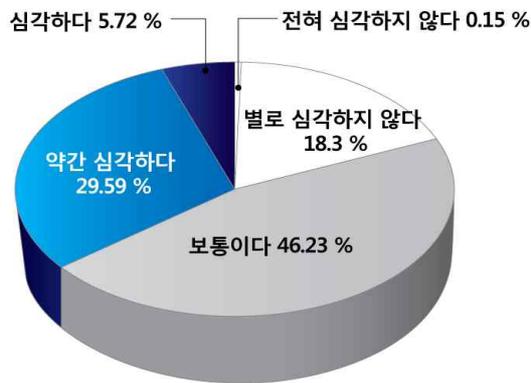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그렇다	중 합			5점 평균 (점)	
							심각하지 않은 편	보통	심각한 편		
전 체	1,328	4.52	25.45	46.61	19.95	3.46	29.97	46.61	23.41	2.92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3.35	25.92	47.62	20.41	2.70	29.27	47.62	23.11	2.93
	군 지역	402	7.21	24.38	44.28	18.91	5.22	31.59	44.28	24.13	2.91
성별	남성	661	4.24	27.23	42.06	20.88	5.60	31.47	42.06	26.48	2.96
	여성	667	4.80	23.69	51.12	19.04	1.35	28.49	51.12	20.39	2.88
연령	~29세	209	5.26	21.05	42.11	26.79	4.78	26.31	42.11	31.57	3.05
	30~64세	1,001	4.80	26.07	47.85	18.08	3.20	30.87	47.85	21.28	2.89
	65세 이상	118	0.85	27.97	44.07	23.73	3.39	28.82	44.07	27.12	3.01

■ 공평한 교육 기회 침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공평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

○ 경제적 이유 등으로 공평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전체의 35.31%가 심각한 편, 18.45%가 심각하지 않은 편으로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35.42%, 군 지역 35.08%가 심각하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36.46%, 여성의 34.19%가 심각하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41.15%), 65세 이상(36.44%), 30~64세 이하(33.96%) 순으로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 높음

■ 공평한 교육 기회 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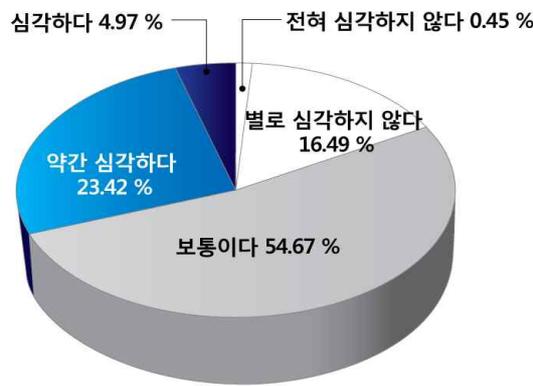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심각하지 않은 편	보통	심각한 편		
전 체	1,328	0.15	18.30	46.23	29.59	5.72	18.45	46.23	35.31	3.22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11	17.71	46.76	29.05	6.37	17.82	46.76	35.42	3.24
	군 지역	402	0.25	19.65	45.02	30.85	4.23	19.90	45.02	35.08	3.19
성별	남성	661	0.30	17.85	45.39	30.86	5.60	18.15	45.39	36.46	3.24
	여성	667	0.00	18.74	47.08	28.34	5.85	18.74	47.08	34.19	3.21
연령	~29세	209	0.00	15.31	43.54	32.06	9.09	15.31	43.54	41.15	3.35
	30~64세	1,001	0.20	18.48	47.35	28.67	5.29	18.68	47.35	33.96	3.20
	65세 이상	118	0.00	22.03	41.53	33.05	3.39	22.03	41.53	36.44	3.18

■ 사회복지 수혜 제한

기본적 생활을 위해 사회복지인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

- 기본적 생활 영위를 사회복지 수혜를 받지 못해 것에 대해 전체의 28.39%가 심각한 편, 16.94%가 심각하지 않은 편으로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28.72%, 군 지역 27.62%가 심각하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29.35%, 여성의 27.44%가 심각하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33.02%), 65세 이상(27.96%), 30~64세 이하(27.47%) 순으로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사회복지 수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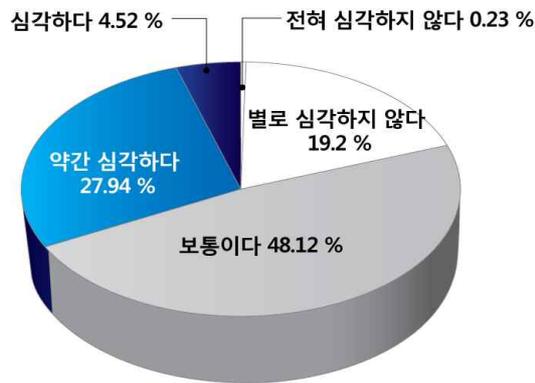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심각하지 않은 편	보통	심각한 편		
전 체	1,328	0.45	16.49	54.67	23.42	4.97	16.94	54.67	28.39	3.16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32	16.31	54.64	22.89	5.83	16.63	54.64	28.72	3.18
	군 지역	402	0.75	16.92	54.73	24.63	2.99	17.67	54.73	27.62	3.12
성별	남성	661	0.61	15.73	54.31	23.45	5.90	16.34	54.31	29.35	3.18
	여성	667	0.30	17.24	55.02	23.39	4.05	17.54	55.02	27.44	3.14
연령	~29세	209	0.00	14.35	52.63	28.71	4.31	14.35	52.63	33.02	3.23
	30~64세	1,001	0.40	16.78	55.34	21.98	5.49	17.18	55.34	27.47	3.15
	65세 이상	118	1.69	17.80	52.54	26.27	1.69	19.49	52.54	27.96	3.08

■ 건강권 제한

경제적인 이유로 질병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

○ 경제적 이유로 질병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건강권 제한에 대해 전체의 32.46%가 심각한 편, 19.43%가 심각하지 않은 편으로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33.15%, 군 지역 30.84%가 심각하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33.59%, 여성의 31.34%가 심각하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37.32%), 65세 이상(33.05%), 30~64세 이하(31.37%) 순으로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 높음

■ 건강권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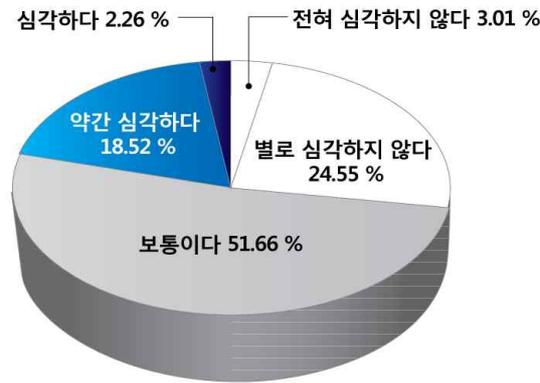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심각하지 않은 편	보통	심각한 편		
전 체	1,328	0.23	19.20	48.12	27.94	4.52	19.43	48.12	32.46	3.17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22	19.44	47.19	28.29	4.86	19.66	47.19	33.15	3.18
	군 지역	402	0.25	18.66	50.25	27.11	3.73	18.91	50.25	30.84	3.15
성별	남성	661	0.30	21.48	44.63	29.20	4.39	21.78	44.63	33.59	3.16
	여성	667	0.15	16.94	51.57	26.69	4.65	17.09	51.57	31.34	3.19
연령	~29세	209	0.00	19.14	43.54	30.14	7.18	19.14	43.54	37.32	3.25
	30~64세	1,001	0.30	18.78	49.55	27.57	3.80	19.08	49.55	31.37	3.16
	65세 이상	118	0.00	22.88	44.07	27.12	5.93	22.88	44.07	33.05	3.16

■ 인간다운 생활 위한 주거권 제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위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주거권 보장 제한에 대해 전체의 20.78%가 심각한 편, 27.56%가 심각하지 않은 편으로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20.62%, 군 지역 21.14%가 심각하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20.88%, 여성의 20.69%가 심각하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23.45%), 30~64세 이하(20.78%), 65세 이상(16.10%) 순으로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인간다운 주거권 제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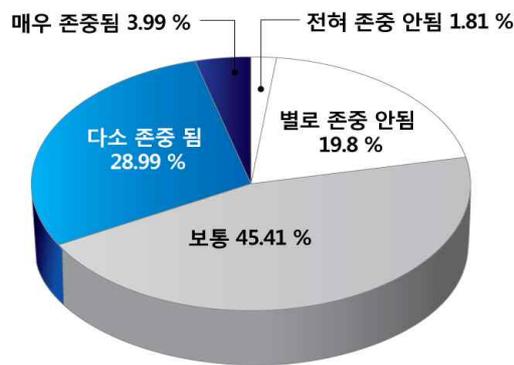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그렇다	중 합			5점 평균 (점)	
							심각하지 않은 편	보통	심각한 편		
전 체	1,328	3.01	24.55	51.66	18.52	2.26	27.56	51.66	20.78	2.92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2.59	23.87	52.92	18.14	2.48	26.46	52.92	20.62	2.94
	군 지역	402	3.98	26.12	48.76	19.40	1.74	30.10	48.76	21.14	2.89
성별	남성	661	3.03	23.60	52.50	18.76	2.12	26.63	52.50	20.88	2.93
	여성	667	3.00	25.49	50.82	18.29	2.40	28.49	50.82	20.69	2.92
연령	~29세	209	0.96	30.62	44.98	19.14	4.31	31.58	44.98	23.45	2.95
	30~64세	1,001	3.40	22.98	52.85	18.98	1.80	26.38	52.85	20.78	2.93
	65세 이상	118	3.39	27.12	53.39	13.56	2.54	30.51	53.39	16.10	2.85

2) 충청남도 계층 별 인권 존중 인식

■ 여성의 인권 존중

충청남도에서 여성의 인권은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 인권 존중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2.98%가 존중되고 있다는 편, 21.61%가 존중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31.85%, 군 지역 35.57%가 존중된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38.88%, 여성의 27.14%가 존중된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34.93%), 65세 이상(33.90%), 30~64세 이하(32.47%) 순으로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여성의 인권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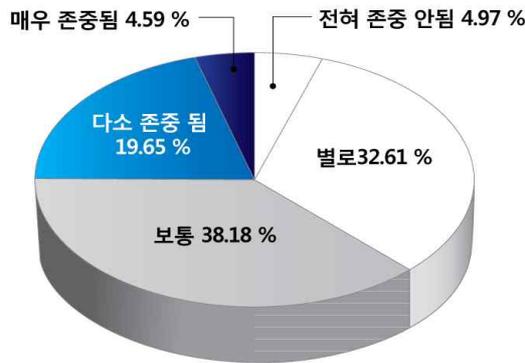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존중 안됨	별로 존중 안됨	보통	약간 존중됨	매우 존중됨	총 합			5점 평균 (점)	
							존중되지 않는 편	보통	존중되는 편		
전 체	1,328	1.81	19.80	45.41	28.99	3.99	21.61	45.41	32.98	3.14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2.48	20.63	45.03	27.75	4.10	23.11	45.03	31.85	3.10
	군 지역	402	0.25	17.91	46.27	31.84	3.73	18.16	46.27	35.57	3.21
성별	남성	661	0.61	14.52	45.99	32.98	5.90	15.13	45.99	38.88	3.29
	여성	667	3.00	25.04	44.83	25.04	2.10	28.04	44.83	27.14	2.98
연령	~29세	209	0.00	22.97	42.11	30.62	4.31	22.97	42.11	34.93	3.16
	30~64세	1,001	1.90	18.08	47.55	28.77	3.70	19.98	47.55	32.47	3.14
	65세 이상	118	4.24	28.81	33.05	27.97	5.93	33.05	33.05	33.90	3.03

■ 노인의 인권 존중

충청남도에서 노인의 인권은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애인 인권 존중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4.24%가 존중되고 있다는 편, 37.58%가 존중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24.19%, 군 지역 24.37%가 존중된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23.45%, 여성의 25.04%가 존중된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29.19%), 30~64세 이하(24.58%), 65세 이상(12.71%) 순으로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 높음

■ 노인의 인권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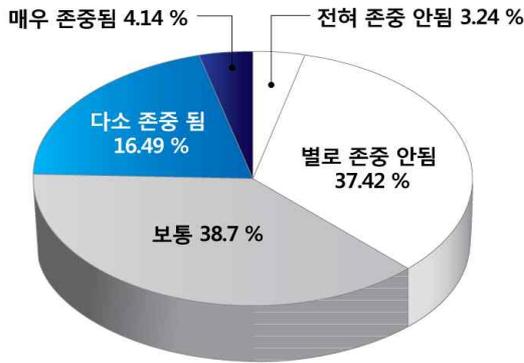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존중 안됨	별로 존중 안됨	보통	약간 존중 됨	매우 존중 됨	총 합			5점 평균 (점)	
							존중되지 않는 편	보통	존중되는 편		
전 체	1,328	4.97	32.61	38.18	19.65	4.59	37.58	38.18	24.24	2.86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5.72	33.59	36.50	19.87	4.32	39.31	36.50	24.19	2.83
	군 지역	402	3.23	30.35	42.04	19.15	5.22	33.58	42.04	24.37	2.93
성별	남성	661	4.69	31.16	40.70	19.97	3.48	35.85	40.70	23.45	2.86
	여성	667	5.25	34.03	35.68	19.34	5.70	39.28	35.68	25.04	2.86
연령	~29세	209	3.35	29.19	38.28	22.97	6.22	32.54	38.28	29.19	3.00
	30~64세	1,001	4.80	32.37	38.26	20.08	4.50	37.17	38.26	24.58	2.87
	65세 이상	118	9.32	40.68	37.29	10.17	2.54	50.00	37.29	12.71	2.56

■ 장애인의 인권 존중

충청남도에서 장애인의 인권은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애인 인권 존중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0.63%가 존중되고 있다는 편, 40.66%가 존중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17.82%, 군 지역 27.11%가 존중된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19.51%, 여성의 21.74%가 존중된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29.19%), 65세 이상(19.49%), 30~64세 이하(18.98%) 순으로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장애인의 인권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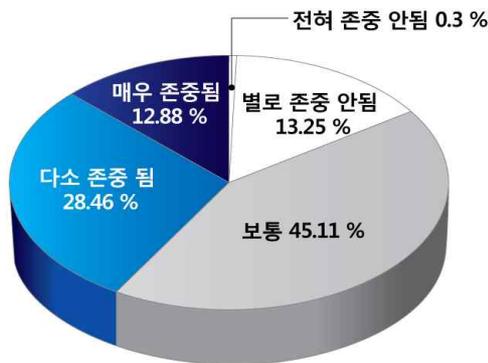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존중 안됨	별로 존중 안됨	보통	약간 존중 됨	매우 존중 됨	총 합			5점 평균 (점)	
							존중되지 않는 편	보통	존중되는 편		
전 체	1,328	3.24	37.42	38.70	16.49	4.14	40.66	38.70	20.63	2.81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4.10	40.17	37.90	14.47	3.35	44.27	37.90	17.82	2.73
	군 지역	402	1.24	31.09	40.55	21.14	5.97	32.33	40.55	27.11	3.00
성별	남성	661	2.87	38.88	38.73	16.64	2.87	41.75	38.73	19.51	2.78
	여성	667	3.60	35.98	38.68	16.34	5.40	39.58	38.68	21.74	2.84
연령	~29세	209	3.83	33.97	33.01	22.01	7.18	37.80	33.01	29.19	2.95
	30~64세	1,001	3.10	37.76	40.16	15.28	3.70	40.86	40.16	18.98	2.79
	65세 이상	118	3.39	40.68	36.44	16.95	2.54	44.07	36.44	19.49	2.75

■ 아동의 인권 존중

충청남도에서 아동의 인권은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동 인권 존중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1.34%가 존중되고 있다는 편, 13.55%가 존중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41.58%, 군 지역 40.79%가 존중된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41.91%, 여성의 40.78%가 존중된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50.00%), 29세 이하(44.50%), 30~64세 이하(39.66%) 순으로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아동의 인권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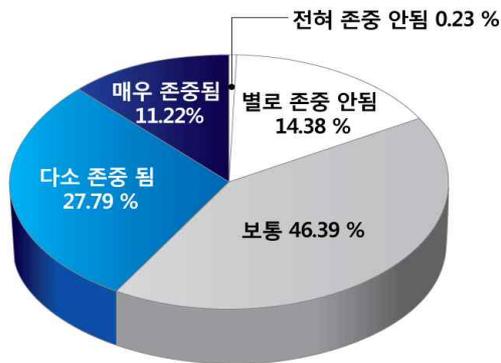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존중 안됨	별로 존중 안됨	보통	약간 존중 됨	매우 존중 됨	총 합			5점 평균 (점)	
							존중되지 않는 편	보통	존중되는 편		
전 체	1,328	0.30	13.25	45.11	28.46	12.88	13.55	45.11	41.34	3.40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32	14.36	43.74	29.81	11.77	14.68	43.74	41.58	3.38
	군 지역	402	0.25	10.70	48.26	25.37	15.42	10.95	48.26	40.79	3.45
성별	남성	661	0.45	13.77	43.87	29.50	12.41	14.22	43.87	41.91	3.40
	여성	667	0.15	12.74	46.33	27.44	13.34	12.89	46.33	40.78	3.41
연령	~29세	209	0.96	12.92	41.63	25.84	18.66	13.88	41.63	44.50	3.48
	30~64세	1,001	0.20	13.99	46.15	28.47	11.19	14.19	46.15	39.66	3.36
	65세 이상	118	0.00	7.63	42.37	33.05	16.95	7.63	42.37	50.00	3.59

■ 청소년의 인권 존중

충청남도에서 청소년의 인권은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청소년 인권 존중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9.01%가 존중되고 있다는 편, 14.61%가 존중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37.48%, 군 지역 42.53%가 존중된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40.25%, 여성의 37.78%가 존중된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53.39%), 29세 이하(44.02%), 30~64세 이하(36.26%) 순으로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청소년의 인권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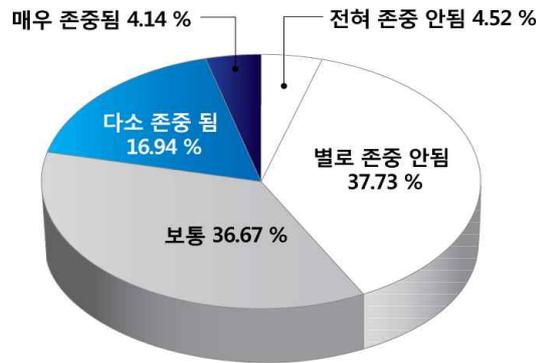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존중 안됨	별로 존중 안됨	보통	약간 존중 됨	매우 존중 됨	총 합			5점 평균 (점)	
							존중되지 않는 편	보통	존중되는 편		
전 체	1,328	0.23	14.38	46.39	27.79	11.22	14.61	46.39	39.01	3.35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22	16.31	46.00	29.81	7.67	16.53	46.00	37.48	3.28
	군 지역	402	0.25	9.95	47.26	23.13	19.40	10.20	47.26	42.53	3.51
성별	남성	661	0.15	15.13	44.48	28.90	11.35	15.28	44.48	40.25	3.36
	여성	667	0.30	13.64	48.28	26.69	11.09	13.94	48.28	37.78	3.35
연령	~29세	209	0.96	14.83	40.19	30.62	13.40	15.79	40.19	44.02	3.41
	30~64세	1,001	0.10	14.99	48.65	26.47	9.79	15.09	48.65	36.26	3.31
	65세 이상	118	0.00	8.47	38.14	33.90	19.49	8.47	38.14	53.39	3.64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존중

충청남도에서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정)의 인권은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정) 인권 존중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1.08%가 존중되고 있다는 편, 42.25%가 존중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16.84%, 군 지역 30.84%가 존중된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22.69%, 여성의 19.49%가 존중된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27.75%), 30~64세 이하(20.18%), 65세 이상(16.95%) 순으로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 높음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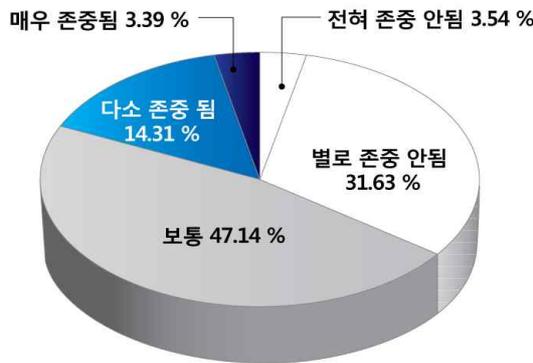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존중 안됨	별로 존중 안됨	보통	약간 존중 됨	매우 존중 됨	총 합			5점 평균 (점)	
							존중되지 않는 편	보통	존중되는 편		
전 체	1,328	4.52	37.73	36.67	16.94	4.14	42.25	36.67	21.08	2.78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5.29	41.14	36.72	13.28	3.56	46.43	36.72	16.84	2.69
	군 지역	402	2.74	29.85	36.57	25.37	5.47	32.59	36.57	30.84	3.01
성별	남성	661	5.14	33.43	38.73	16.79	5.90	38.57	38.73	22.69	2.85
	여성	667	3.90	41.98	34.63	17.09	2.40	45.88	34.63	19.49	2.72
연령	~29세	209	2.87	41.63	27.75	22.01	5.74	44.50	27.75	27.75	2.86
	30~64세	1,001	5.19	37.26	37.36	16.28	3.90	42.45	37.36	20.18	2.76
	65세 이상	118	1.69	34.75	46.61	13.56	3.39	36.44	46.61	16.95	2.82

■ 노동자의 인권 존중

충청남도에서 노동자의 인권은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동자 인권 존중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7.70%가 존중되고 있다는 편, 35.17%가 존중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15.88%, 군 지역 21.89%가 존중된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20.27%, 여성의 15.14%가 존중된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24.40%), 65세 이상(18.64%), 30~64세 이하(16.19%) 순으로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 높음

■ 노동자의 인권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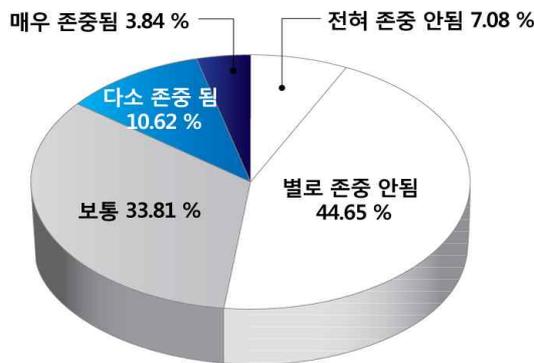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존중 안됨	별로 존중 안됨	보통	약간 존중 됨	매우 존중 됨	종 합			5점 평균 (점)	
							존중되지 않는 편	보통	존중되는 편		
전 체	1,328	3.54	31.63	47.14	14.31	3.39	35.17	47.14	17.70	2.82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3.78	34.45	45.90	12.42	3.46	38.23	45.90	15.88	2.77
	군 지역	402	2.99	25.12	50.00	18.66	3.23	28.11	50.00	21.89	2.94
성별	남성	661	3.78	29.95	45.99	15.43	4.84	33.73	45.99	20.27	2.88
	여성	667	3.30	33.28	48.28	13.19	1.95	36.58	48.28	15.14	2.77
연령	~29세	209	3.83	34.45	37.32	18.66	5.74	38.28	37.32	24.40	2.88
	30~64세	1,001	3.70	31.57	48.55	13.19	3.00	35.27	48.55	16.19	2.80
	65세 이상	118	1.69	27.12	52.54	16.10	2.54	28.81	52.54	18.64	2.91

■ 이주노동자의 인권 존중

충청남도에서 이주(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은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주(외국인)노동자 인권 존중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4.46%가 존중되고 있다는 편, 51.73%가 존중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12.63%, 군 지역 18.66%가 존중된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17.40%, 여성의 11.55%가 존중된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18.18%), 30~64세 이하(13.89%), 65세 이상(12.71%) 순으로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이주노동자의 인권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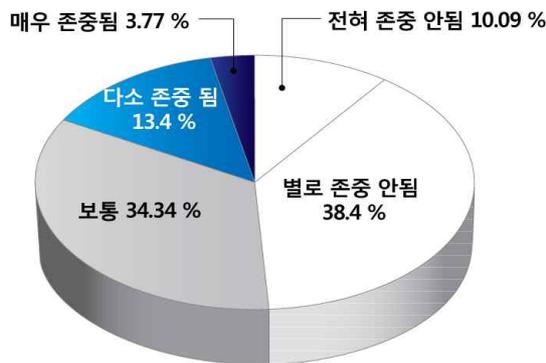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존중 안됨	별로 존중 안됨	보통	약간 존중 됨	매우 존중 됨	종 합			5점 평균 (점)	
							존중되지 않는 편	보통	존중되는 편		
전 체	1,328	7.08	44.65	33.81	10.62	3.84	51.73	33.81	14.46	2.59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7.67	47.30	32.40	8.96	3.67	54.97	32.40	12.63	2.54
	군 지역	402	5.72	38.56	37.06	14.43	4.23	44.28	37.06	18.66	2.73
성별	남성	661	6.81	45.99	29.80	12.71	4.69	52.80	29.80	17.40	2.62
	여성	667	7.35	43.33	37.78	8.55	3.00	50.68	37.78	11.55	2.57
연령	~29세	209	4.31	43.06	34.45	14.35	3.83	47.37	34.45	18.18	2.70
	30~64세	1,001	7.49	44.76	33.87	10.29	3.60	52.25	33.87	13.89	2.58
	65세 이상	118	8.47	46.61	32.20	6.78	5.93	55.08	32.20	12.71	2.55

■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존중

충청남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은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존중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7.17%가 존중되고 있다는 편, 48.49%가 존중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15.33%, 군 지역 21.39%가 존중된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18.76%, 여성의 15.59%가 존중된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22.49%), 30~64세 이하(16.69%), 65세 이상(11.86%) 순으로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 높음

■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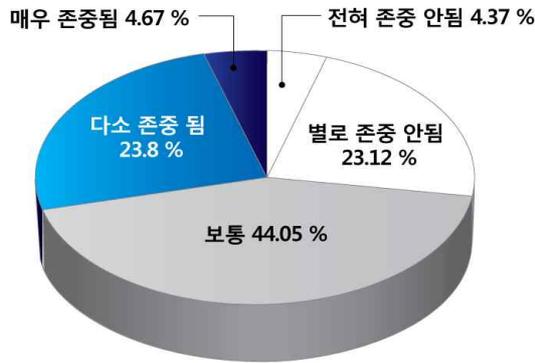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존중 안됨	별로 존중 안됨	보통	약간 존중 됨	매우 존중 됨	총 합			5점 평균 (점)	
							존중되지 않는 편	보통	존중되는 편		
전 체	1,328	10.09	38.40	34.34	13.40	3.77	48.49	34.34	17.17	2.62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1.23	41.14	32.29	12.20	3.13	52.37	32.29	15.33	2.55
	군 지역	402	7.46	32.09	39.05	16.17	5.22	39.55	39.05	21.39	2.80
성별	남성	661	10.89	35.85	34.49	13.92	4.84	46.74	34.49	18.76	2.66
	여성	667	9.30	40.93	34.18	12.89	2.70	50.23	34.18	15.59	2.59
연령	~29세	209	12.92	33.01	31.58	19.62	2.87	45.93	31.58	22.49	2.67
	30~64세	1,001	9.89	38.96	34.47	12.49	4.20	48.85	34.47	16.69	2.62
	65세 이상	118	6.78	43.22	38.14	10.17	1.69	50.00	38.14	11.86	2.57

■ 사회복지 시설 생활자의 인권 존중

충청남도에서 요양원 등 사회복지 시설 생활자의 인권은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 시설 생활자 인권 존중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8.47%가 존중되고 있다는 편, 27.49%가 존중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27.86%, 군 지역 29.85%가 존중된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28.14%, 여성의 28.79%가 존중된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30~64세 이하(28.98%), 65세 이상(28.81%), 29세 이하(25.84%) 순으로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사회복지 시설 생활자의 인권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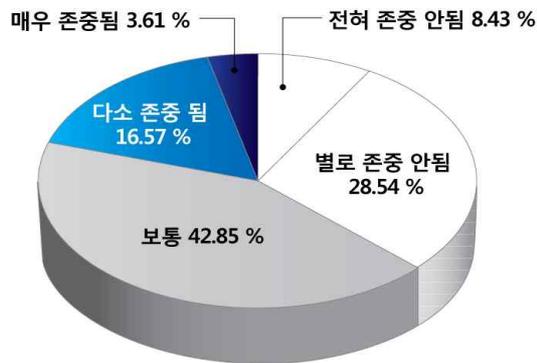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존중 안됨	별로 존중 안됨	보통	약간 존중 됨	매우 존중 됨	종 합			5점 평균 (점)	
							존중되지 않는 편	보통	존중되는 편		
전 체	1,328	4.37	23.12	44.05	23.80	4.67	27.49	44.05	28.47	3.01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2.48	23.33	46.33	22.89	4.97	25.81	46.33	27.86	3.05
	군 지역	402	8.71	22.64	38.81	25.87	3.98	31.35	38.81	29.85	2.94
성별	남성	661	5.14	20.42	46.29	22.69	5.45	25.56	46.29	28.14	3.03
	여성	667	3.60	25.79	41.83	24.89	3.90	29.39	41.83	28.79	3.00
연령	~29세	209	1.91	22.49	49.76	22.97	2.87	24.40	49.76	25.84	3.02
	30~64세	1,001	4.20	23.38	43.46	24.18	4.80	27.58	43.46	28.98	3.02
	65세 이상	118	10.17	22.03	38.98	22.03	6.78	32.20	38.98	28.81	2.93

■ 구금 시설 수감자의 인권 존중

충청남도에서 교도소 등 구금 시설 수감자의 인권은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도소 등 구금 시설 수감자 인권 존중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0.18%가 존중되고 있다는 편, 36.97%가 존중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17.60%, 군 지역 26.12%가 존중된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18.15%, 여성의 22.19%가 존중된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29.18%), 65세 이상(25.42%), 30~64세 이하(17.69%) 순으로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 높음

■ 구금 시설 수감자의 인권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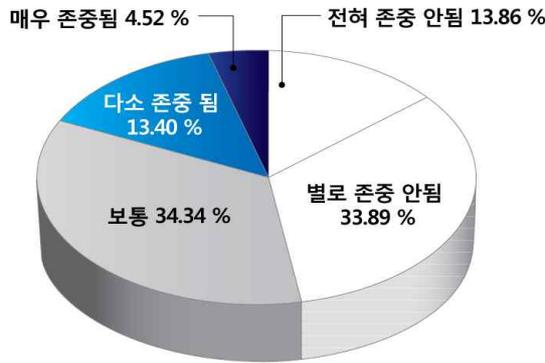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존중 안됨	별로 존중 안됨	보통	약간 존중 됨	매우 존중 됨	총 합			5점 평균 (점)	
							존중되지 않는 편	보통	존중되는 편		
전 체	1,328	8.43	28.54	42.85	16.57	3.61	36.97	42.85	20.18	2.78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6.26	30.45	45.68	14.58	3.02	36.71	45.68	17.60	2.78
	군 지역	402	13.43	24.13	36.32	21.14	4.98	37.56	36.32	26.12	2.80
성별	남성	661	8.93	29.65	43.27	14.67	3.48	38.58	43.27	18.15	2.74
	여성	667	7.95	27.44	42.43	18.44	3.75	35.39	42.43	22.19	2.83
연령	~29세	209	2.39	33.97	34.45	23.92	5.26	36.36	34.45	29.18	2.96
	30~64세	1,001	8.59	27.57	46.15	14.19	3.50	36.16	46.15	17.69	2.76
	65세 이상	118	17.80	27.12	29.66	23.73	1.69	44.92	29.66	25.42	2.64

■ 전과자의 인권 존중

충청남도에서 전과자의 인권은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과자 인권 존중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7.92%가 존중되고 있다는 편, 47.75%가 존중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14.47%, 군 지역 25.87%가 존중된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17.09%, 여성의 18.74%가 존중된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24.88%), 65세 이상(19.49%), 30~64세 이하(16.29%) 순으로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전과자의 인권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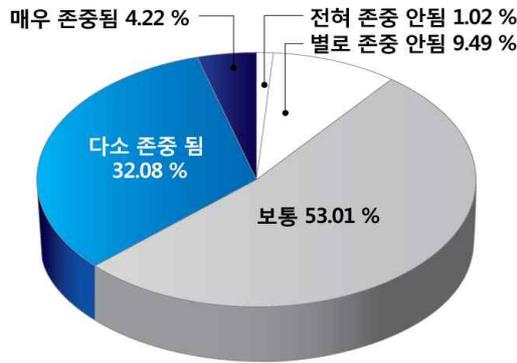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존중 안됨	별로 존중 안됨	보통	약간 존중 됨	매우 존중 됨	총 합			5점 평균 (점)	
							존중되지 않는 편	보통	존중되는 편		
전 체	1,328	13.86	33.89	34.34	13.40	4.52	47.75	34.34	17.92	2.61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3.07	38.01	34.45	10.91	3.56	51.08	34.45	14.47	2.54
	군 지역	402	15.67	24.38	34.08	19.15	6.72	40.05	34.08	25.87	2.77
성별	남성	661	15.13	34.49	33.28	13.46	3.63	49.62	33.28	17.09	2.56
	여성	667	12.59	33.28	35.38	13.34	5.40	45.87	35.38	18.74	2.66
연령	~29세	209	11.48	28.23	35.41	16.75	8.13	39.71	35.41	24.88	2.82
	30~64세	1,001	14.39	33.97	35.36	12.49	3.80	48.36	35.36	16.29	2.57
	65세 이상	118	13.56	43.22	23.73	15.25	4.24	56.78	23.73	19.49	2.53

■ 일반 도민의 인권 존중

충청남도에서 일반 도민의 인권은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충청남도 일반도민 인권 존중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6.30%가 존중되고 있다는 편, 10.69%가 존중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33.15%, 군 지역 43.53%가 존중된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35.86%, 여성의 36.73%가 존중된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41.53%), 29세 이하(39.23%), 30~64세 이하(35.07%) 순으로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일반 도민의 인권 존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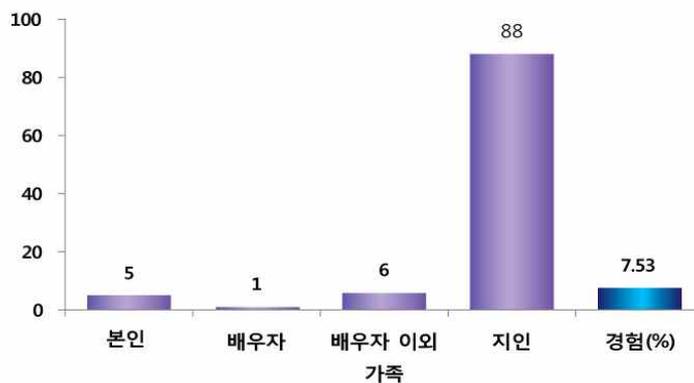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존중 안됨	별로 존중 안됨	보통	약간 존중 됨	매우 존중 됨	종 합			5점 평균 (점)	
							존중되지 않는 편	보통	존중되는 편		
전 체	1,328	1.20	9.49	53.01	32.08	4.22	10.69	53.01	36.30	3.29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76	10.04	56.05	30.56	2.59	10.80	56.05	33.15	3.24
	군 지역	402	2.24	8.21	46.02	35.57	7.96	10.45	46.02	43.53	3.39
성별	남성	661	0.76	10.14	53.25	31.47	4.39	10.90	53.25	35.86	3.29
	여성	667	1.65	8.85	52.77	32.68	4.05	10.50	52.77	36.73	3.29
연령	~29세	209	1.44	7.18	52.15	34.45	4.78	8.62	52.15	39.23	3.34
	30~64세	1,001	1.10	10.49	53.35	30.87	4.20	11.59	53.35	35.07	3.27
	65세 이상	118	1.69	5.08	51.69	38.14	3.39	6.77	51.69	41.53	3.36

3) 인권침해 경험

■ 신체자유 침해

경찰/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불심검문, 연행, 구금, 심문을 당했다

-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침해 경험에 대해 전체의 7.53%가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7.99%, 군 지역 6.47%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8.77%, 여성의 6.30%가 존중된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9.32%), 29세 이하(9.09%), 30~64세 이하(6.99%) 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신체자유 침해(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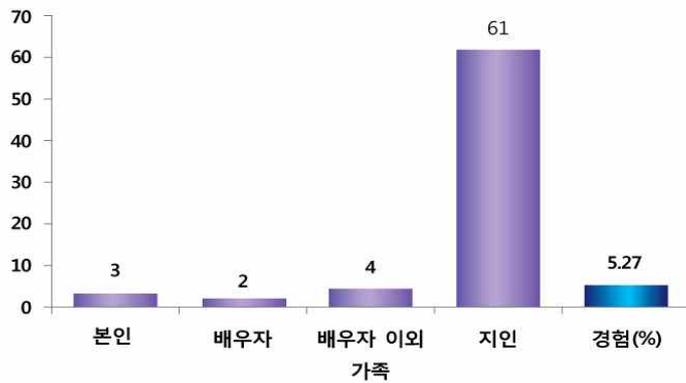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5	1	6	88	7.53	92.47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5	1	5	63	7.99	92.01
	군 지역	402	0	0	1	25	6.47	93.53
성별	남성	661	4	0	3	51	8.77	91.23
	여성	667	1	1	3	37	6.30	93.70
연령	~29세	209	0	0	3	16	9.09	90.91
	30~64세	1,001	4	1	3	62	6.99	93.01
	65세 이상	118	1	0	0	10	9.32	90.68

■ 개인 표현 자유 제한

언론이나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한 개인의 의견 표현을 공공기관에 의해 제한당한 적이 있다

○ 개인의 의견 표현을 공공기관에 의해 제한당한 경험에 대해 전체의 5.27%가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5.62%, 군 지역 4.48%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5.45%, 여성의 5.10%가 존중된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6.70%), 30~64세 이하(5.19%), 65세 이상(3.39%)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개인 표현 자유 제한(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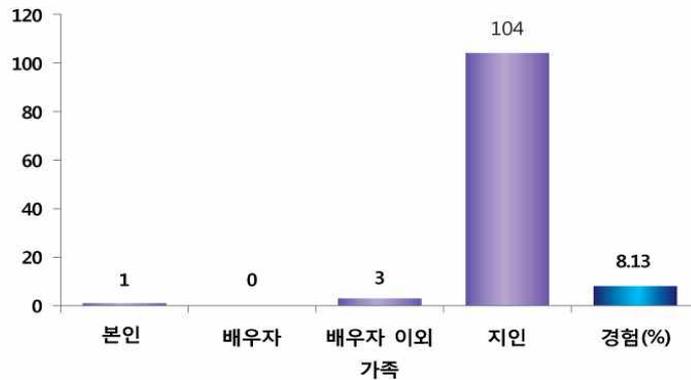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3	2	4	61	5.27	94.73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3	2	4	43	5.62	94.38
	군 지역	402	0	0	0	18	4.48	95.52
성별	남성	661	1	1	1	33	5.45	94.55
	여성	667	2	1	3	28	5.10	94.90
연령	~29세	209	0	0	0	14	6.70	93.30
	30~64세	1,001	2	2	3	45	5.19	94.81
	65세 이상	118	1	0	1	2	3.39	96.61

■ 사생활 공개

언론이나 인터넷에 사생활이 공개되었다

○ 언론이나 인터넷에 사생활 공개된 경험에 대해 전체의 8.13%가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8.86%, 군 지역 6.47%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8.62%, 여성의 7.65%가 경험했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9.09%), 30~64세 이하(8.49%), 65세 이상(3.39)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사생활 공개(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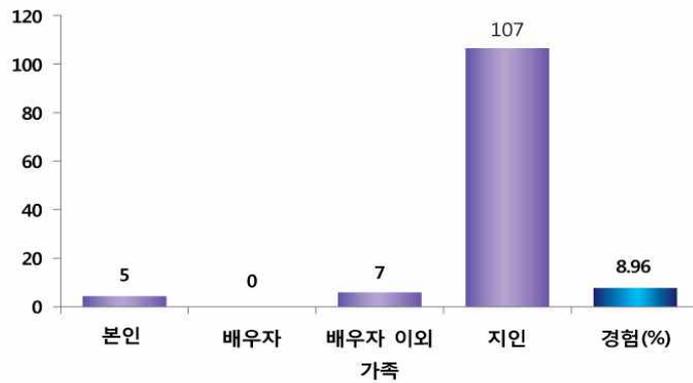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1	0	3	104	8.13	91.87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	0	1	80	8.86	91.14
	군 지역	402	0	0	2	24	6.47	93.53
성별	남성	661	0	0	2	55	8.62	91.38
	여성	667	1	0	1	49	7.65	92.35
연령	~29세	209	1	0	0	18	9.09	90.91
	30~64세	1,001	0	0	2	83	8.49	91.51
	65세 이상	118	0	0	1	3	3.39	96.61

■ 종교적 행동 강요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종교적 행동을 제한받거나 신앙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

○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종교적 행동 제한이나 신앙 강요 경험에 대해 전체의 8.96%가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9.07%, 군 지역 8.71%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7.26%, 여성의 10.64%가 경험했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30~64세 이하(9.99%), 29세 이하(7.18%), 65세 이상(3.39)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종교적 행동 강요(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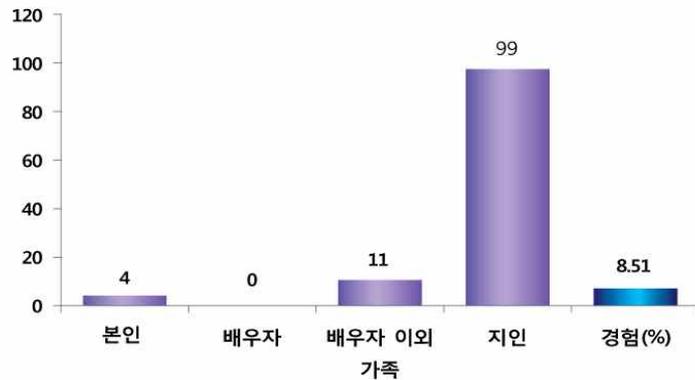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5	0	7	107	8.96	91.04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5	0	5	74	9.07	90.93
	군 지역	402	0	0	2	33	8.71	91.29
성별	남성	661	3	0	4	41	7.26	92.74
	여성	667	2	0	3	66	10.64	89.36
연령	~29세	209	0	0	0	15	7.18	92.82
	30~64세	1,001	4	0	7	89	9.99	90.01
	65세 이상	118	1	0	0	3	3.39	96.61

■ 시위·집회의 자유 제한

시위, 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당한 적이 있다

○ 시위, 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험에 대해 전체의 8.51%가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9.18%, 군 지역 6.97%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8.47%, 여성의 8.55%가 경험했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11.00%), 30~64세 이하(8.29%), 65세 이상(5.93%)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시위·집회의 자유 제한(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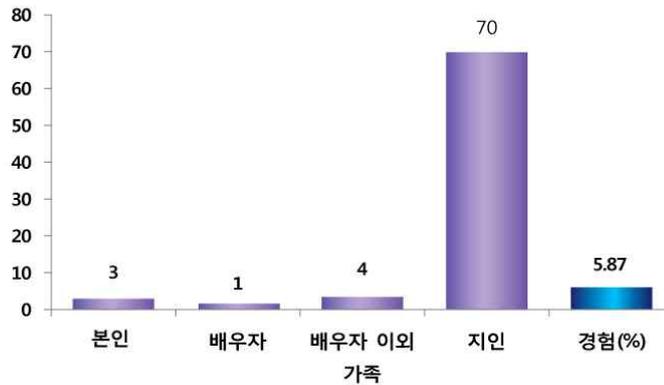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4	0	11	99	8.51	91.49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3	0	9	74	9.18	90.82
	군 지역	402	1	0	2	25	6.97	93.03
성별	남성	661	2	0	6	49	8.47	91.53
	여성	667	2	0	5	50	8.55	91.45
연령	~29세	209	0	0	4	19	11.00	89.00
	30~64세	1,001	3	0	7	74	8.29	91.71
	65세 이상	118	1	0	0	6	5.93	94.07

■ 단체 결성·가입 제한

단체 결성 혹은 단체 가입을 제한당한 적이 있다

○ 단체 결성 혹은 단체 가입 제한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87%가 본인 혹은 본인 주변에서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6.37%, 군 지역 4.73%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6.20%, 여성의 5.55%가 경험했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6.70%), 30~64세 이하(5.79%), 65세 이상(5.08%)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단체 결성·가입 제한(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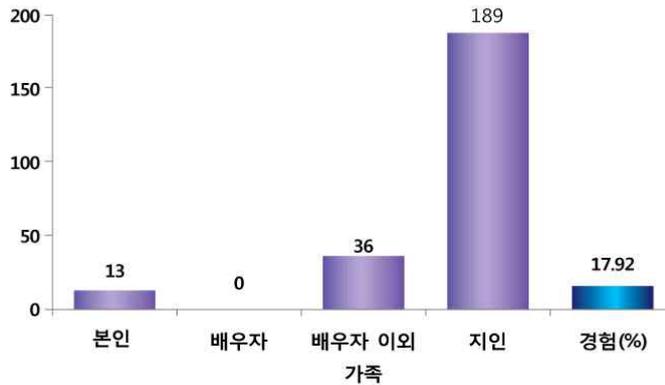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3	1	4	70	5.87	94.13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3	1	4	51	6.37	93.63
	군 지역	402	0	0	0	19	4.73	95.27
성별	남성	661	1	0	3	37	6.20	93.80
	여성	667	2	1	1	33	5.55	94.45
연령	~29세	209	0	0	2	12	6.70	93.30
	30~64세	1,001	2	1	2	53	5.79	94.21
	65세 이상	118	1	0	0	5	5.08	94.92

■ 공공기관에서의 폭행

군대,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폭행당한 적이 있다

○ 군대,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폭행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7.97%가 본인 혹은 본인 주변에서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18.68%, 군 지역 16.17%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19.82%, 여성의 16.04%가 경험했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24.88%), 65세 이상(16.95%), 30~64세 이하(16.58%)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공공기관에서의 폭행(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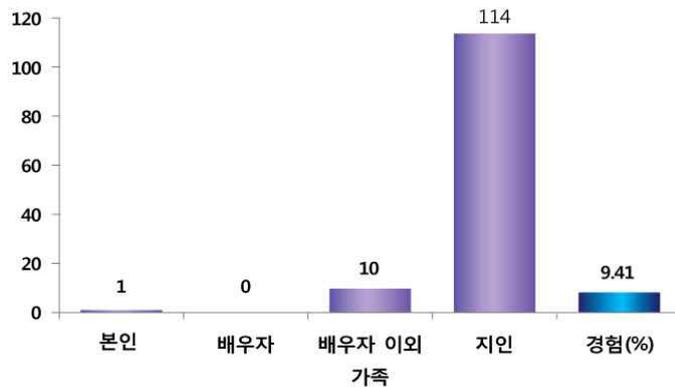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13	0	36	189	17.92	82.08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2	0	26	135	18.68	81.32
	군 지역	402	1	0	10	54	16.17	83.83
성별	남성	661	13	0	15	103	19.82	80.18
	여성	667	0	0	21	86	16.04	83.96
연령	~29세	209	1	0	4	47	24.88	75.12
	30~64세	1,001	12	0	25	129	16.58	83.42
	65세 이상	118	0	0	7	13	16.95	83.05

■ 사회복지시설에서 부당 대우 경험

복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복지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부당한 대우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41%가 본인 혹은 본인 주변에서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9.83%, 군 지역 8.46%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8.47%, 여성의 10.34%가 경험했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12.71%), 30~64세 이하(9.29%), 29세 이하(8.13%)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사회복지시설에서 부당 대우 경험(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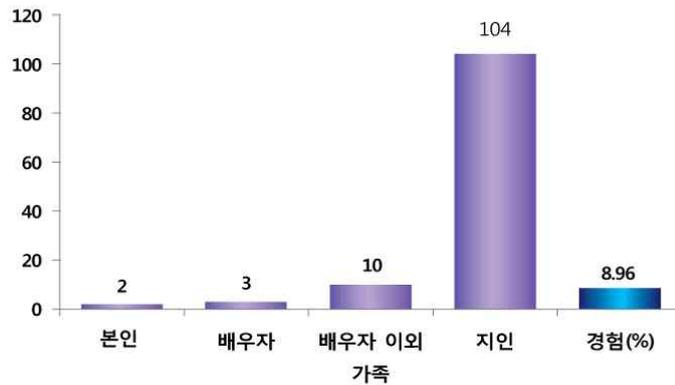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1	0	10	114	9.41	90.59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	0	8	82	9.83	90.17
	군 지역	402	0	0	2	32	8.46	91.54
성별	남성	661	1	0	4	51	8.47	91.53
	여성	667	0	0	6	63	10.34	89.66
연령	~29세	209	0	0	0	17	8.13	91.87
	30~64세	1,001	1	0	10	82	9.29	90.71
	65세 이상	118	0	0	0	15	12.71	87.29

■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당 대우

민원처리과정에서 공무원들로부터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 민원처리과정에서 공무원들로부터 모독이나 차별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96%가 본인 혹은 본인 주변에서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10.26%, 군 지역 5.97%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8.47%, 여성의 9.45%가 경험했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30~64세 이하(9.19%), 65세 이상(8.47%), 29세 이하(8.13%)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당 대우(중복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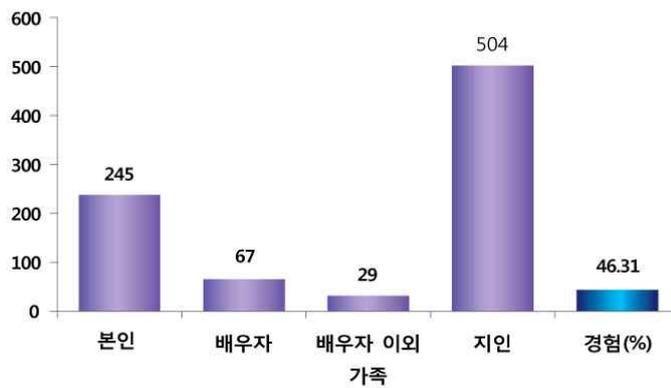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2	3	10	104	8.96	91.04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2	1	10	82	10.26	89.74
	군 지역	402	0	2	0	22	5.97	94.03
성별	남성	661	1	1	2	52	8.47	91.53
	여성	667	1	2	8	52	9.45	90.55
연령	~29세	209	0	0	1	16	8.13	91.87
	30~64세	1,001	2	3	9	78	9.19	90.81
	65세 이상	118	0	0	0	10	8.47	91.53

4) 차별 경험

■ 성차에 의한 차별 경험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성차에 의한 불공정 대우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6.31%가 본인 혹은 본인 주변에서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47.52%, 군 지역 43.53%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32.98%, 여성의 59.52%가 경험했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30~64세 이하(46.75%), 29세 이하(45.45%), 65세 이상(44.07%)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성차에 의한 차별 경험(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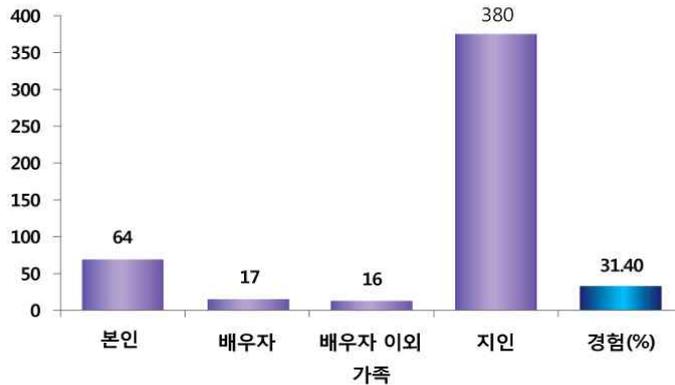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245	67	29	504	46.31	53.69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60	45	23	366	47.52	52.48
	군 지역	402	85	22	6	138	43.53	56.47
성별	남성	661	0	67	18	162	32.98	67.02
	여성	667	245	0	11	342	59.52	40.48
연령	~29세	209	42	0	4	87	45.45	54.55
	30~64세	1,001	186	57	23	379	46.75	53.25
	65세 이상	118	17	10	2	38	44.07	55.93

■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 임신, 출산에 의한 불이익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1.40%가 본인 혹은 본인 주변에서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31.97%, 군 지역 30.10%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20.42%, 여성의 42.28%가 경험했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30~64세 이하(32.47%), 29세 이하(29.67%), 65세 이상(25.42%)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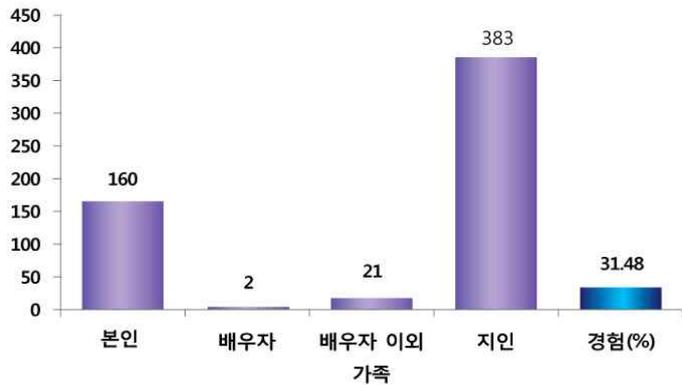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64	17	16	380	31.40	68.60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44	15	14	271	31.97	68.03
	군 지역	402	20	2	2	109	30.10	69.90
성별	남성	661	0	17	11	121	20.42	79.58
	여성	667	64	0	5	259	42.28	57.72
연령	~29세	209	6	0	2	56	29.67	70.33
	30~64세	1,001	55	17	14	295	32.47	67.53
	65세 이상	118	3	0	0	29	25.42	74.58

■ 장애로 인한 불이익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장애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 대우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1.48%가 본인 혹은 본인 주변에서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32.07%, 군 지역 30.10%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31.62%, 여성의 31.33%가 경험했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32.54%), 30~64세 이하(31.97%), 65세 이상(25.42%)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장애로 인한 불이익(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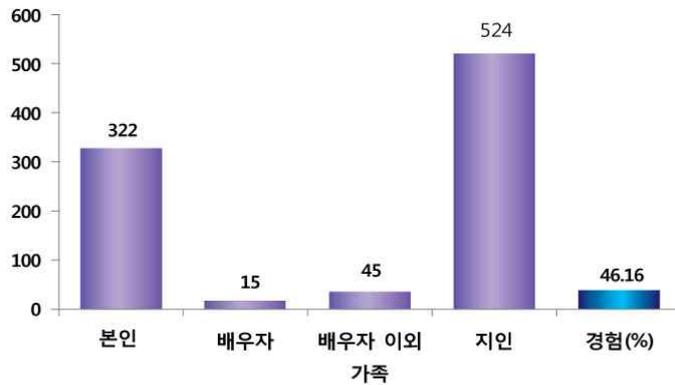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160	2	21	383	31.48	68.52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07	1	17	272	32.07	67.93
	군 지역	402	53	1	4	111	30.10	69.90
성별	남성	661	91	1	10	190	31.62	68.38
	여성	667	69	1	11	193	31.33	68.67
연령	~29세	209	29	0	0	65	32.54	67.46
	30~64세	1,001	121	1	18	294	31.97	68.03
	65세 이상	118	10	1	3	24	25.42	74.58

■ 나이에 의한 차별

나이가 많거나 어리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나이에 의한 차별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6.16%가 본인 혹은 본인 주변에서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46.98%, 군 지역 44.28%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47.66%, 여성의 44.68%가 경험했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73.73%), 29세 이하(72.25%), 30~64세 이하(37.46%)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나이에 의한 차별(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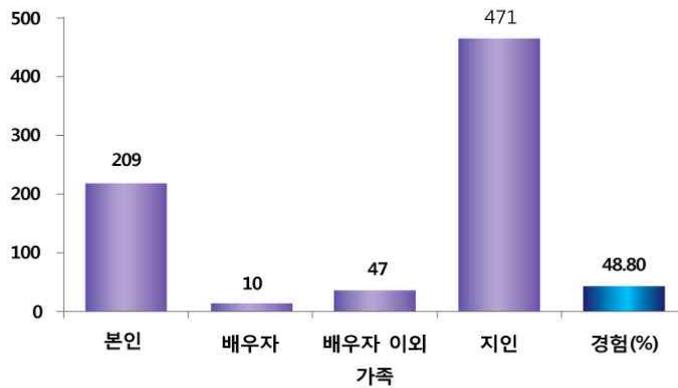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322	15	45	524	46.16	53.84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202	7	36	375	46.98	53.02
	군 지역	402	120	8	9	149	44.28	55.72
성별	남성	661	169	7	26	267	47.66	52.34
	여성	667	153	8	19	157	44.68	55.32
연령	~29세	209	120	0	5	131	72.25	27.75
	30~64세	1,001	126	11	35	321	37.46	62.54
	65세 이상	118	76	4	5	72	73.73	26.27

■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 학력이나 학벌에 의한 차별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8.80%가 본인 혹은 본인 주변에서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47.62%, 군 지역 51.49%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45.08%, 여성의 52.04%가 경험했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67.80%), 30~64세 이하(47.45%), 29세 이하(44.50%)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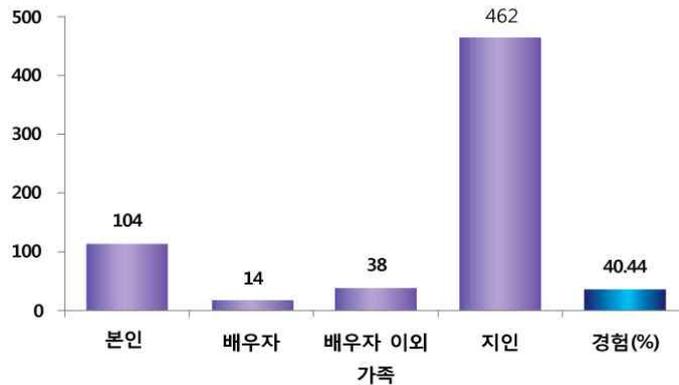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209	10	47	471	48.80	51.20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07	8	40	352	47.62	52.38
	군 지역	402	102	2	7	119	51.49	48.51
성별	남성	661	64	7	21	215	45.08	54.92
	여성	667	103	3	26	258	52.04	47.96
연령	~29세	209	38	0	2	80	44.50	55.50
	30~64세	1,001	132	9	41	354	47.45	52.55
	65세 이상	118	39	1	4	37	67.80	32.20

■ 비정규직 차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 비정규직이라는 이유의 차별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0.44%가 본인 혹은 본인 주변에서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41.25%, 군 지역 38.56%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41.30%, 여성의 39.58%가 경험했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51.67%), 30~64세 이하(39.46%), 65세 이상(28.81%) 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비정규직 차별(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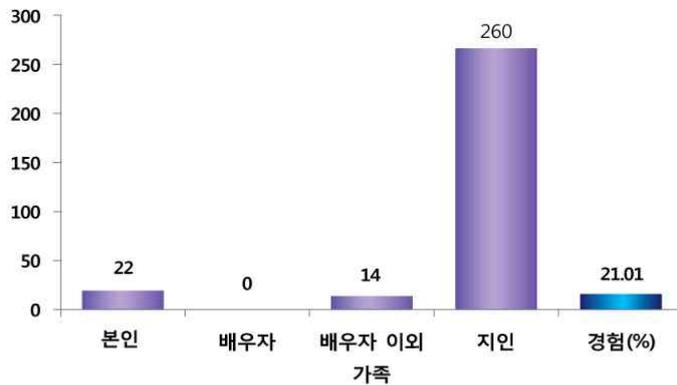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104	14	38	462	40.44	59.56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77	11	33	327	41.25	58.75
	군 지역	402	27	3	5	135	38.56	61.44
성별	남성	661	61	11	24	228	41.30	58.70
	여성	667	43	3	14	234	39.58	60.42
연령	~29세	209	43	0	4	96	51.67	48.33
	30~64세	1,001	57	13	31	336	39.46	60.54
	65세 이상	118	4	1	3	30	28.81	71.19

■ 출신지역 차별

출신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 출신지역이 다르다는 이유의 차별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1.01%가 본인 혹은 본인 주변에서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23.11%, 군 지역 16.17%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21.03%, 여성의 20.99%가 경험했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22.88%), 30~64세 이하(21.18%), 29세 이하(19.14%) 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출신지역 차별(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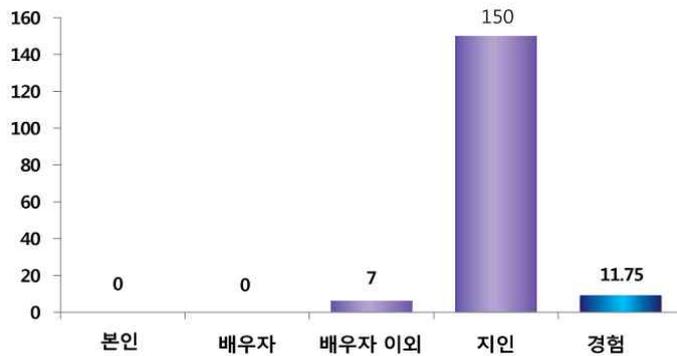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22	0	14	260	21.01	78.99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6	0	11	201	23.11	76.89
	군 지역	402	6	0	3	59	16.17	83.83
성별	남성	661	10	0	7	129	21.03	78.97
	여성	667	12	0	7	131	20.99	79.01
연령	~29세	209	14	0	0	39	19.14	80.86
	30~64세	1,001	8	0	11	196	21.18	78.82
	65세 이상	118	0	0	3	25	22.88	77.12

■ 국적에 의한 차별

국적(인종,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국적(인종,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의 차별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1.75%가 본인 혹은 본인 주변에서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13.07%, 군 지역 8.71%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13.46%, 여성의 10.04%가 경험했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12.44%), 65세 이상(11.86%), 30~64세 이하(11.59%)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국적에 의한 차별(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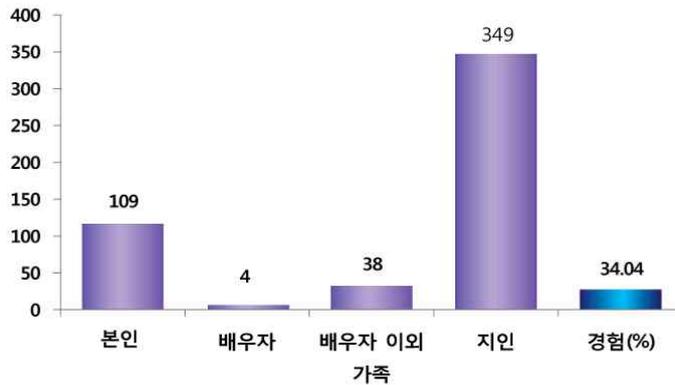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0	0	7	150	11.75	88.25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	0	5	117	13.07	86.93
	군 지역	402	0	0	2	33	8.71	91.29
성별	남성	661	0	0	6	83	13.46	86.54
	여성	667	0	0	1	67	10.04	89.96
연령	~29세	209	0	0	0	26	12.44	87.56
	30~64세	1,001	0	0	6	110	11.59	88.41
	65세 이상	118	0	0	1	14	11.86	88.14

■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

키, 몸무게, 인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신체조건의 이유로 불공정 대우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4.04%가 본인 혹은 본인 주변에서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35.64%, 군 지역 30.35%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34.49%, 여성의 33.58%가 경험했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34.45%), 30~64세 이하(34.37%), 65세 이상(30.51%)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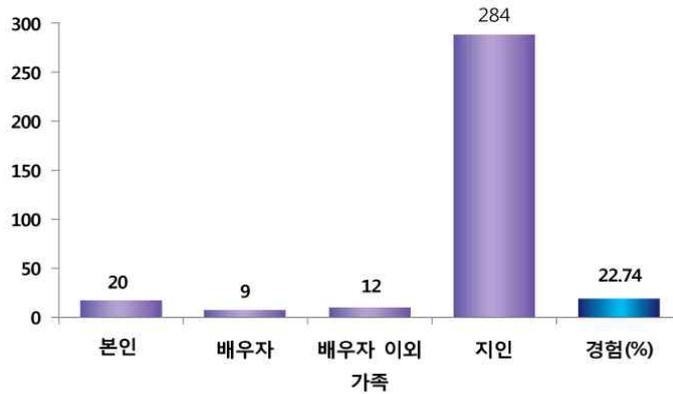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109	4	38	349	34.04	65.96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76	3	33	253	35.64	64.36
	군 지역	402	33	1	5	96	30.35	69.65
성별	남성	661	52	3	22	175	34.49	65.51
	여성	667	57	1	16	174	33.58	66.42
연령	~29세	209	35	0	9	49	34.45	65.55
	30~64세	1,001	69	4	28	269	34.37	65.63
	65세 이상	118	5	0	1	31	30.51	69.49

■ 혼인상황에 의한 차별

결혼/미혼/이혼 등 혼인상황으로 인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결혼 등 혼인상황을 이유로 불공정 대우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2.74%가 본인 혹은 본인 주변에서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25.27%, 군 지역 16.92%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20.73%, 여성의 24.74%가 경험했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26.27%), 29세 이하(22.49%), 30~64세 이하(22.38%)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혼인상황에 의한 차별(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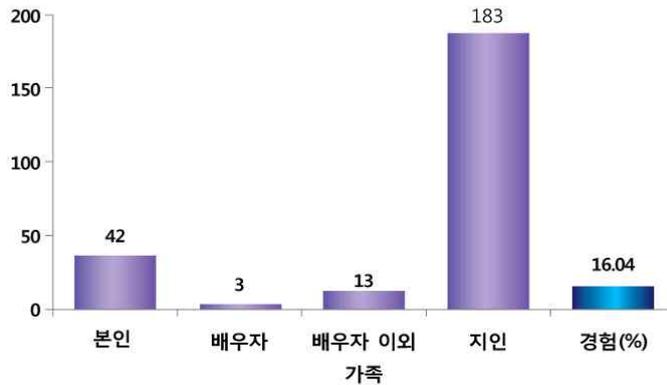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20	9	12	284	22.74	77.26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6	7	11	219	25.27	74.73
	군 지역	402	4	2	1	65	16.92	83.08
성별	남성	661	0	8	7	130	20.73	79.27
	여성	667	20	1	5	154	24.74	75.26
연령	~29세	209	0	0	2	45	22.49	77.51
	30~64세	1,001	19	6	9	210	22.38	77.62
	65세 이상	118	1	3	1	29	26.27	73.73

■ 사상·이념 차이에 의한 차별

정치적 성향, 사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정치적 성향, 사상, 이념의 차이를 이유로 불공정 대우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6.04%가 본인 혹은 본인 주변에서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18.14%, 군 지역 11.19%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16.49%, 여성의 15.59%가 경험했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19.49%), 30~64세 이하(15.98%), 29세 이하(14.35%)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사상·이념 차이에 의한 차별(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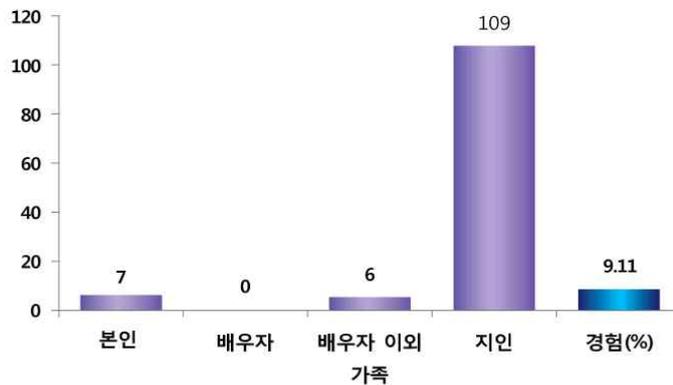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42	3	13	183	16.04	83.96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31	2	12	145	18.14	81.86
	군 지역	402	11	1	1	38	11.19	88.81
성별	남성	661	29	1	8	89	16.49	83.51
	여성	667	13	2	5	94	15.59	84.41
연령	~29세	209	1	0	0	30	14.35	85.65
	30~64세	1,001	33	3	13	133	15.98	84.02
	65세 이상	118	6	0	0	20	19.49	80.51

■ 성적 지향 의한 차별

성적 지향(동성애, 양성애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 성적 지향(동성애, 양성애 등) 이유의 차별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11%가 본인 혹은 본인 주변에서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8.96%, 군 지역 9.45%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8.32%, 여성의 9.90%가 경험했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30~64세 이하(9.69%), 65세 이상(8.47%), 29세 이하(6.70%)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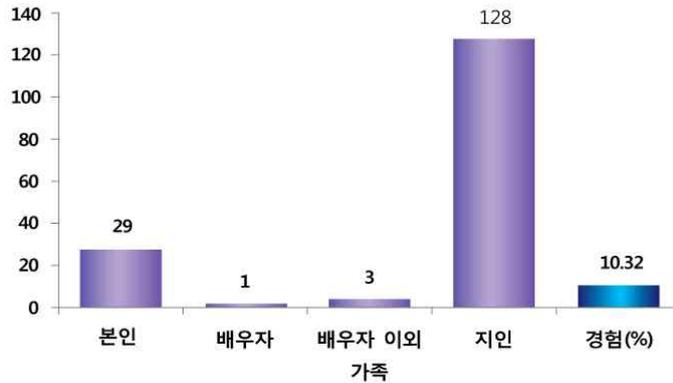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7	0	6	109	9.11	90.89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6	0	5	73	8.96	91.04
	군 지역	402	1	0	1	36	9.45	90.55
성별	남성	661	3	0	3	50	8.32	91.68
	여성	667	4	0	3	59	9.90	90.10
연령	~29세	209	2	0	0	12	6.70	93.30
	30~64세	1,001	4	0	6	88	9.69	90.31
	65세 이상	118	1	0	0	9	8.47	91.53

■ 종교로 인한 차별

종교적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종교적 이유의 불공정 대우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0.32%가 본인 혹은 본인 주변에서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11.45%, 군 지역 7.71%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9.83%, 여성의 10.79%가 경험했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11.48%), 65세 이상(11.02%), 30~64세 이하(9.99%)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종교로 인한 차별(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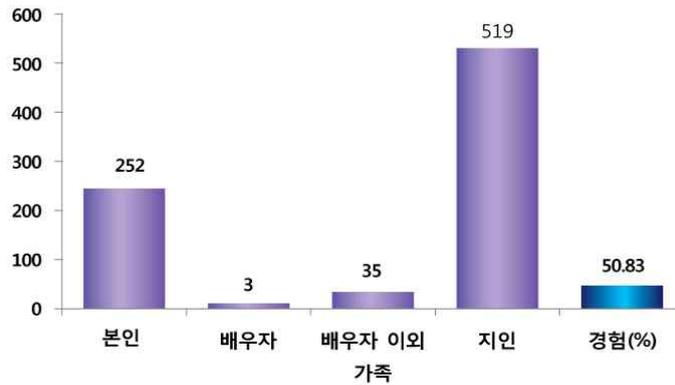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29	1	3	128	10.32	89.68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21	0	3	99	11.45	88.55
	군 지역	402	8	1	0	29	7.71	92.29
성별	남성	661	15	0	2	61	9.83	90.17
	여성	667	14	1	1	67	10.79	89.21
연령	~29세	209	0	0	0	24	11.48	88.52
	30~64세	1,001	25	1	3	92	9.99	90.01
	65세 이상	118	4	0	0	12	11.02	88.98

■ 경제적 이유의 차별

가난하다는 이유로 불공정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경제적인 이유의 불공정 대우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0.83%가 본인 혹은 본인 주변에서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50.43%, 군 지역 51.74%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52.65%, 여성의 49.03%가 경험했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85.59%), 30~64세 이하(48.45%), 29세 이하(42.58%) 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경제적 이유의 차별(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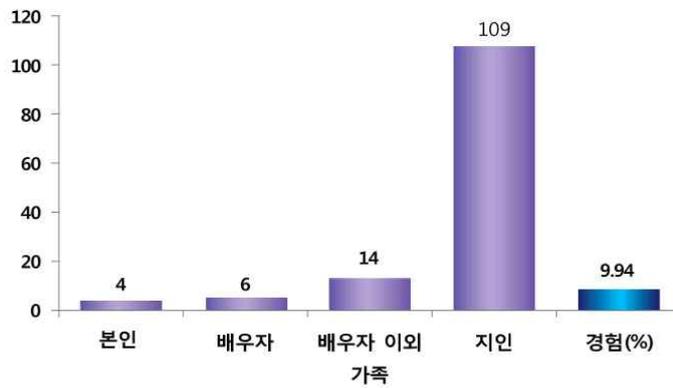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252	3	35	519	50.83	49.17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45	3	31	375	50.43	49.57
	군 지역	402	107	0	4	144	51.74	48.26
성별	남성	661	120	0	22	273	52.65	47.35
	여성	667	132	3	13	246	49.03	50.97
연령	~29세	209	22	0	4	72	42.58	57.42
	30~64세	1,001	157	3	29	385	48.45	51.55
	65세 이상	118	73	0	2	62	85.59	14.41

■ 질병에 의한 차별

간염, 우울증 등 질병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간염, 우울증 등 질병에 의한 불공정 대우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94%가 본인 혹은 본인 주변에서 경험했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시 지역 10.91%, 군 지역 7.71%가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성의 9.98%, 여성의 9.90%가 경험했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15.31%), 65세 이상(14.41%), 30~64세 이하(8.29%) 순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 높음

■ 질병에 의한 차별(중복응답)

(단위: 명, %)

		사례수 (명)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아는 지인 경험	경험률(%)	아무도 경험 없음(%)
전 체		1,328	4	6	14	109	9.94	90.06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3	2	10	87	10.91	89.09
	군 지역	402	1	4	4	22	7.71	92.29
성별	남성	661	2	2	6	57	9.98	90.02
	여성	667	2	4	8	52	9.90	90.10
연령	~29세	209	1	0	5	26	15.31	84.69
	30~64세	1,001	2	5	8	69	8.29	91.71
	65세 이상	118	1	1	1	14	14.41	85.59

5) 인권 침해의 원인

■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

귀하는 충청남도에서 누가 가장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1, 2순위 구분)

- 충청남도 누가 가장 많이 인권을 침해하는가라는 질문에 1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한 경우는 검찰(15.74%)과 경찰(15.66)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교정 시설 직원(14.83%), 군대 상급자(9.56%), 언론인(8.5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음
- 반면 종교인이 4.97%, 복지시설 직원이 5.72% 등으로 응답 비율이 낮음
- 1순위와 2순위의 응답을 합한 결과를 보면 경찰(15.09%)과 검찰(14.88%)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고, 교정시설 직원(13.08%), 공무원(12.00%)도 비교적 응답 비율이 높음
- 반면 종교인(5.47%), 교사(6.50%)는 응답 비율이 낮음

■ 인권 침해하는 사람(1순위)

(단위: %)

		사례수 (명)	군대 상급자	교사	교정시설 직원	공무원	경찰	검찰	종교인	기업인	복지시설 직원	언론인
전 체		1,328	9.56	6.1	14.83	11.97	15.66	15.74	4.97	6.93	5.72	8.51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9.83	5.08	12.53	13.17	17.49	16.20	4.43	7.13	5.62	8.53
	군 지역	402	8.96	8.46	20.15	9.20	11.44	14.68	6.22	6.47	5.97	8.46
성별	남성	661	11.95	6.51	14.83	11.80	15.58	17.25	4.69	5.75	4.69	6.96
	여성	667	7.20	5.70	14.84	12.14	15.74	14.24	5.25	8.10	6.75	10.04
연령	~29세	209	6.70	8.13	10.05	11.48	17.22	18.66	2.39	7.18	10.05	8.13
	30~64세	1,001	9.89	5.79	14.89	12.59	14.89	15.28	5.59	6.79	5.09	9.19
	65세 이상	118	11.86	5.08	22.88	7.63	19.49	14.41	4.24	7.63	3.39	3.39

■ 인권 침해하는 사람(1순위+2순위)

(단위: %)

		사례수 (명)	군대 상급자	교사	교정시설 직원	공무원	경찰	검찰	종교인	기업인	복지시설 직원	언론인
전 체		1,328	8.68	6.50	13.08	12.00	15.09	14.88	5.47	7.48	7.78	9.04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8.75	5.40	11.81	12.81	16.88	15.73	4.93	7.70	6.8	9.18
	군 지역	402	8.54	9.04	16.00	10.12	10.95	12.94	6.72	6.97	10.03	8.71
성별	남성	661	10.04	6.40	12.71	11.50	16.24	16.09	5.24	6.30	7.11	8.37
	여성	667	7.35	6.60	13.44	12.49	13.94	13.69	5.70	8.65	8.45	9.70
연령	~29세	209	6.38	7.81	10.21	11.96	15.47	15.63	4.15	8.45	9.57	10.37
	30~64세	1,001	9.09	6.29	13.09	12.22	14.69	14.95	5.83	7.36	7.39	9.09
	65세 이상	118	9.32	5.93	18.08	10.17	17.80	12.99	4.80	6.78	7.91	6.21

■ 인권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

충청남도에서 인권의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 2순위 구분)

- 충청남도에서 인권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에 1순위를 묻는 것에 대해 경제적 지위(33.33%)가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학력과 학벌(12.29%)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음. 이외에도 임신과 출산을 포함한 성별(7.69%), 나이(7.54%), 용모(6.79%)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
- 반면 동성애 등 성적지향(1.81%), 이혼과 미혼 등 혼인상태(2.04%), 에이즈, 한센병, B형 간염 등 질병(3.09%) 순으로 낮은 응답 비율
-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를 보면 경제적 지위(27.80%)가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학력과 학벌(13.92%), 성별(8.34%), 나이(7.64%), 출신지역(7.01%)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
- 반면 성적 지향(2.14%), 혼인상태(2.69%), 질병(3.17%) 순으로 응답 비율이 낮음

■ 인권 침해나 차별 발생원인(1순위)

(단위: %)

		사례수 (명)	출신 국가	성별	경제 지위	나이	종교	용모	학력 학벌	성적 지향	장애	출신 지역	혼인 상태	질병	정치 입장
전 체		1,328	8.07	7.69	33.33	7.54	3.77	6.79	12.29	1.81	5.13	5.88	2.04	3.09	2.56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8.12	8.12	36.04	8.01	4.11	5.84	11.58	1.95	4.22	4.33	2.38	3.25	2.06
	군 지역	402	7.96	6.72	27.11	6.47	2.99	8.96	13.93	1.49	7.21	9.45	1.24	2.74	3.73
성별	남성	661	7.74	5.16	36.57	8.35	3.49	6.37	12.29	1.67	4.25	6.53	1.67	3.79	2.12
	여성	667	8.40	10.19	30.13	6.75	4.05	7.20	12.29	1.95	6.00	5.25	2.40	2.40	3.00
연령	~29세	209	13.88	9.09	33.01	7.66	1.91	9.57	13.88	1.91	2.87	0.96	0.48	3.35	1.44
	30~64세	1,001	6.41	7.41	33.33	7.61	4.30	6.31	12.31	1.70	5.31	6.91	2.50	3.10	2.8
	65세 이상	118	11.86	7.63	33.9	6.78	2.54	5.93	9.32	2.54	7.63	5.93	0.85	2.54	2.54

■ 인권 침해나 차별 발생원인(1순위+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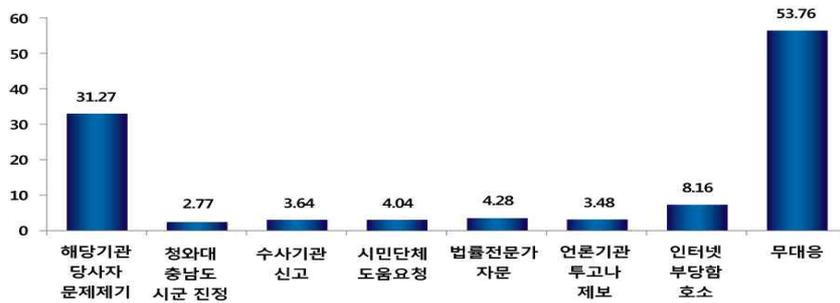
		사례수 (명)	출신 국가	성별	경제 지위	나이	종교	용모	학력 학벌	성적 지향	장애	출신 지역	혼인 상태	질병	정치 입장
전 체		1,328	7.36	8.34	27.80	7.64	3.57	6.76	13.92	2.14	5.53	7.01	2.69	3.17	4.07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7.43	8.87	29.67	7.79	3.82	6.34	14.20	2.09	4.58	5.37	3.10	3.39	3.35
	군 지역	402	7.22	7.14	23.49	7.30	2.99	7.72	13.28	2.24	7.72	10.79	1.74	2.66	5.73
성별	남성	661	7.07	5.66	29.96	8.14	3.54	6.92	14.00	1.97	4.70	7.53	2.78	3.54	4.19
	여성	667	7.65	11.00	25.65	7.15	3.60	6.60	13.85	2.30	6.35	6.50	2.60	2.8	3.95
연령	~29세	209	11.64	9.41	27.11	6.54	2.07	8.93	16.11	1.75	3.99	3.83	2.39	3.83	2.39
	30~64세	1,001	6.30	8.21	27.62	7.84	3.94	6.40	14.04	2.17	5.67	7.40	2.90	3.04	4.47
	65세 이상	118	8.76	7.63	30.51	7.91	3.11	5.93	9.04	2.54	7.06	9.32	1.41	3.11	3.67

6) 인권 침해 시 취했던 행동

■ 인권침해 시 조치사항

인권 침해나 차별을 경험하였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인권 침해나 차별을 경험 시 취한 행동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3.4%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이외에 해당 기관 당사자에게 문제제기 (31.27%), 인터넷에 부당함 호소(8.16%)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



- 지역별로는 시 지역 56.70%, 군 지역 46.8%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음
- 성별로는 남성의 55.52%, 여성의 52.04%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음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의 43.90%, 30~64세 이하의 54.47%, 65세 이상의 65.25%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고 응답

■ 인권침해 시 조치사항(중복응답)

(단위: %)

		사례수 (명)	해당기관 당사자 문제제기	청와대 총남도 시군 진정	수사기관 신고	시민단체 도움요청	법률전문가 자문	언론기관 투고나 제보	인터넷 부당함 호소	기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음
전 체		1,328	31.27	2.77	3.64	4.04	4.28	3.48	8.16	0.24	53.76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29.24	2.79	3.79	3.79	4.35	3.35	8.15	0.22	56.70
	군 지역	402	36.24	2.72	3.27	4.63	4.09	3.81	8.17	0.27	46.59
성별	남성	661	30.88	2.08	2.24	4.48	3.20	2.56	9.12	0.00	55.52
	여성	667	31.66	3.45	5.02	3.61	5.33	4.39	7.21	0.47	52.04
연령	~29세	209	36.59	1.95	2.93	0.98	2.93	3.90	13.66	0.98	43.90
	30~64세	1,001	30.00	3.30	4.04	5.00	5.00	3.83	7.77	0.11	54.47
	65세 이상	118	32.20	0.00	1.69	1.69	0.85	0.00	1.69	0.00	65.25

■ 인권침해 시 취할 행동

만약 인권 침해나 차별을 당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1, 2순의 구분 응답)

- 인권 침해나 차별을 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취할 행동 중 1순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6.82%가 해당 기관 당사자에게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행정기관에 진정(12.05%), 수사기관에 신고(11.14%), 인터넷에 부당함 호소(11.60%)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반면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는 응답의 비율은 0.98%에 불과
-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응답의 경우 해당 기관 당사자에게 문제제기가 28.58%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 이어 인터넷에 부당함 호소(13.77%), 수사기관 신고(13.09%), 행정 기관 진정(12.41%)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
-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0.91%의 응답 비율

■ 인권침해 시 취할 행동(1순위)

(단위: %)

		사례수 (명)	해당기관 당사자 문제제기	청와대 충남도 시군 진정	수사기관 신고	시민단체 도움요청	법률전문가 자문	언론기관 투고나 제보	인터넷 부당함 호소	기타	행동취하지 않음
전 체		1,328	36.82	12.05	11.14	10.92	8.06	8.43	11.60	0.00	0.98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36.93	12.53	12.85	11.02	8.53	6.70	10.69	0.00	0.76
	군 지역	402	36.57	10.95	7.21	10.70	6.97	12.44	13.68	0.00	1.49
성별	남성	661	35.55	12.71	11.35	10.89	8.17	7.72	12.10	0.00	1.51
	여성	667	38.08	11.39	10.94	10.94	7.95	9.15	11.09	0.00	0.45
연령	~29세	209	27.75	9.57	7.18	10.53	9.57	10.53	22.97	0.00	1.91
	30~64세	1,001	37.16	12.49	12.09	11.09	8.09	8.59	9.79	0.00	0.70
	65세 이상	118	50.00	12.71	10.17	10.17	5.08	3.39	6.78	0.00	1.69

■ 인권침해 시 취할 행동(1순위+2순위)

(단위: %)

		사례수 (명)	해당기관 당사자 문제제기	청와대 충남도 시군 진정	수사기관 신고	시민단체 도움요청	법률전문가 자문	언론기관 투고나 제보	인터넷 부당함 호소	기타	행동취하지 않음
전 체		1,328	28.58	12.41	13.09	11.46	9.09	10.5	13.77	0.20	0.91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28.68	12.77	14.39	11.65	9.88	8.69	12.99	0.25	0.69
	군 지역	402	28.33	11.58	10.08	11.00	7.25	14.67	15.58	0.08	1.42
성별	남성	661	27.83	13.48	12.77	10.75	9.33	10.39	13.94	0.10	1.42
	여성	667	29.31	11.36	13.41	12.16	8.85	10.61	13.61	0.30	0.4
연령	~29세	209	21.79	9.94	10.26	9.62	10.26	13.3	23.24	0.00	1.6
	30~64세	1,001	28.91	12.58	13.65	11.92	9.35	10.25	12.48	0.13	0.73
	65세 이상	118	37.78	15.34	13.35	10.80	4.83	7.67	7.95	1.14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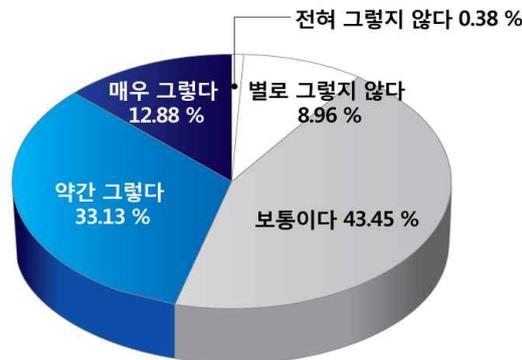
3. 충남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1) 일상생활

■ 노인의 가족 갈등

노인들은 가족 간의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 '노인들은 가족 간의 겪는 경우가 많다'라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중 긍정적인 편(47.21%)이라고 답한 쪽이 부정적인 편(9.34%)이라고 답한 쪽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함



- 여성일수록 노인들의 가족갈등에 긍정적인 답(50.22%)을 함, 남성의 경우 44.18%에 그침
- 65세 이상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답(65.26%)이 압도적으로 많음
- 거주 지역별로는 군 지역(53.23%)이 시 지역(44.60%)보다 긍정으로 답함

■ 노인의 가족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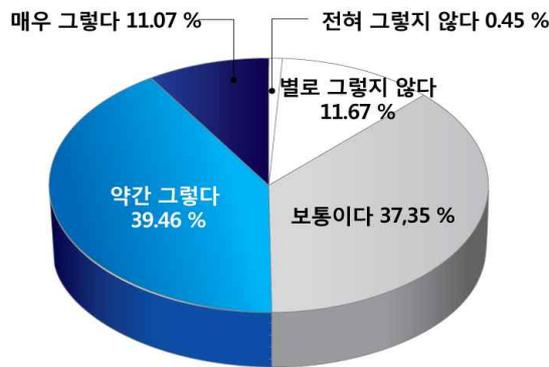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38	8.96	43.45	33.13	14.08	9.34	43.45	47.21	3.52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32	10.91	44.17	35.31	9.29	11.23	44.17	44.60	3.42
	군 지역	402	0.50	4.48	41.79	28.11	25.12	4.98	41.79	53.23	3.73
성별	남성	661	0.61	8.62	46.60	31.77	12.41	9.23	46.60	44.18	3.47
	여성	667	0.15	9.30	40.33	34.48	15.74	9.45	40.33	50.22	3.56
연령	~29세	209	0.00	8.61	42.58	38.28	10.53	8.61	42.58	48.81	3.51
	30~64세	1,001	0.50	9.69	45.05	31.17	13.59	10.19	45.05	44.76	3.48
	65세 이상	118	0.00	3.39	31.36	40.68	24.58	3.39	31.36	65.26	3.86

■ 노인 여가 생활의 어려움

노인들은 여가와 문화 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 ‘노인들은 여가와 문화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라는 문항에 전체응답자 중 긍정으로 답한 쪽(50.33%)이 부정으로 답한 쪽(12.12%)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 이는 65세 이상의 응답자일 경우 더욱 심해짐(72.03%)
- 거주 지역으로 보면 군 지역(55.72%)이 시 지역(48.27%)보다 긍정으로 응답
- 긍정으로 답한 응답자 중 성별로는 큰 편차를 보이지 않음

■ 노인 여가생활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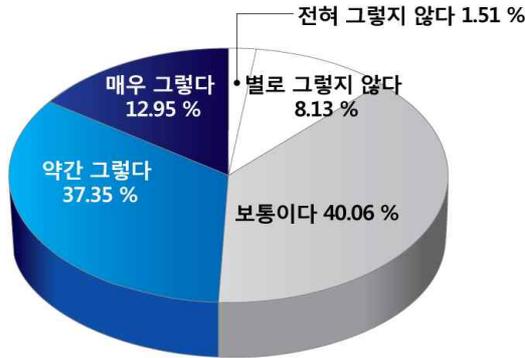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45	11.67	37.35	39.46	11.07	12.12	37.35	50.53	3.49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65	11.56	39.52	39.09	9.18	12.21	39.52	48.27	3.45
	군 지역	402	0.00	11.94	32.34	40.30	15.42	11.94	32.34	55.72	3.59
성별	남성	661	0.45	9.38	40.39	40.85	8.93	9.83	40.39	49.78	3.48
	여성	667	0.45	13.94	34.33	38.08	13.19	14.39	34.33	51.27	3.50
연령	~29세	209	1.44	15.79	43.06	27.75	11.96	17.23	43.06	39.71	3.33
	30~64세	1,001	0.30	11.89	37.56	39.66	10.59	12.19	37.56	50.25	3.48
	65세 이상	118	0.00	2.54	25.42	58.47	13.56	2.54	25.42	72.03	3.83

■ 노인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노인들은 대중교통의 이용 등에 불편을 겪는다

- ‘노인들은 대중교통의 이용 등에 불편을 겪는다’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중 긍정으로 답한 쪽(50.30%)이 부정으로 답한 쪽(9.64%)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 연령별로 '65세 이상'이 66.95%로 가장 높고 '29세 이하'(52.15%), '30~65세'(47.95%) 등의 순임
- 성별로 보면 남성(54.46%)이 여성(46.17%)보다 긍정적인 편으로 답을 함
- 거주 지역별 긍정과 부정의 응답자는 전체적으로 (52.98%&49.13%)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음

■ 노인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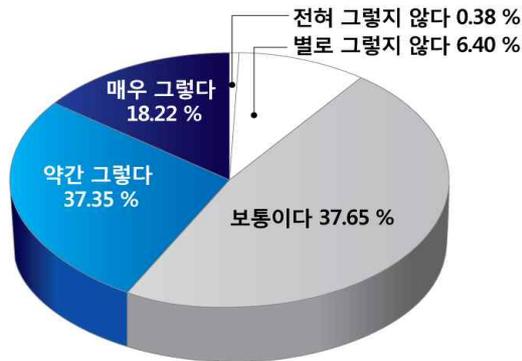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1.51	8.13	40.06	37.35	12.95	9.64	40.06	50.30	3.52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51	8.96	40.39	35.42	13.71	10.47	40.39	49.13	3.51
	군 지역	402	1.49	6.22	39.30	41.79	11.19	7.71	39.30	52.98	3.55
성별	남성	661	1.82	6.81	36.91	42.81	11.65	8.63	36.91	54.46	3.56
	여성	667	1.20	9.45	43.18	31.93	14.24	10.65	43.18	46.17	3.49
연령	~29세	209	3.35	9.09	35.41	34.93	17.22	12.44	35.41	52.15	3.54
	30~64세	1,001	1.30	8.39	42.36	36.06	11.89	9.69	42.36	47.95	3.49
	65세 이상	118	0.00	4.24	28.81	52.54	14.41	4.24	28.81	66.95	3.77

■ 노인의 외로움

노인들은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겪는다

- '노인들은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문항에 긍정으로 답한 쪽이 55.57%로 부정으로 답한 6.78%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



- 연령별로 '65세 이상'이 74.58%로 가장 높고 '29세 이하'(55.50%), '30~65세'(53.34%) 등의 순임
- 거주지역과 성별로 본 응답은 큰 편차가 없음

■ 노인의 외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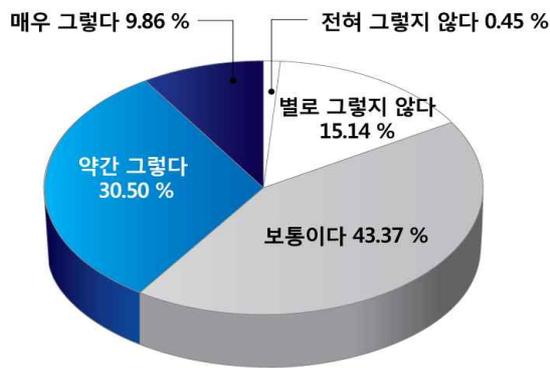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38	6.40	37.65	37.35	18.22	6.78	37.65	55.57	3.67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54	7.45	36.83	38.44	16.74	7.99	36.83	55.18	3.63
	군 지역	402	0.00	3.98	39.55	34.83	21.64	3.98	39.55	56.47	3.74
성별	남성	661	0.00	6.51	39.18	38.73	15.58	6.51	39.18	54.31	3.63
	여성	667	0.75	6.30	36.13	35.98	20.84	7.05	36.13	56.82	3.70
연령	~29세	209	0.96	10.53	33.01	41.15	14.35	11.49	33.01	55.50	3.57
	30~64세	1,001	0.30	5.89	40.46	36.46	16.88	6.19	40.46	53.34	3.64
	65세 이상	118	0.00	3.39	22.03	38.14	36.44	3.39	22.03	74.58	4.08

■ 청소년의 외모 차별

청소년들은 키, 몸무게, 생김새 등 외모로 차별을 받는다

- '청소년들은 키, 몸무게, 생김새 등 외모로 차별을 받는다'라는 문항에 긍정(40.36%)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6.27%)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훨씬 많음



- 성별로 남성이 45.09%로 여성(35.69%)에 비해 높음
- 거주지역으로 보면 군 지역이 43.03%로 시지역(39.21%)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이하'가 46.89%로 가장 높고 '30~65세'가 40.56%, 65세 이상'이 27.12% 등의 순임

■ 청소년의 외모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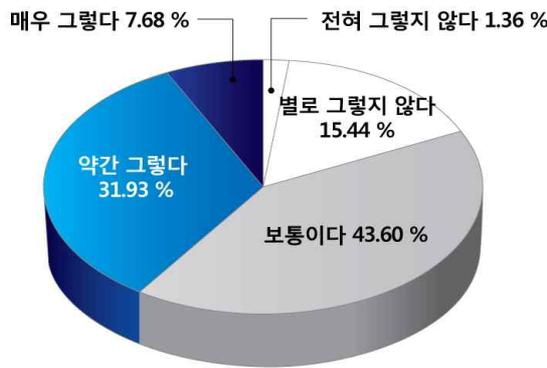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1.13	15.14	43.37	30.50	9.86	16.27	43.37	40.36	3.33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08	16.31	43.41	30.89	8.32	17.39	43.41	39.21	3.29
	군 지역	402	1.24	12.44	43.28	29.60	13.43	13.68	43.28	43.03	3.42
성별	남성	661	0.76	12.10	42.06	34.80	10.29	12.86	42.06	45.09	3.42
	여성	667	1.50	18.14	44.68	26.24	9.45	19.64	44.68	35.69	3.24
연령	~29세	209	1.44	16.75	34.93	32.54	14.35	18.19	34.93	46.89	3.42
	30~64세	1,001	0.60	15.08	43.76	30.87	9.69	15.68	43.76	40.56	3.34
	65세 이상	118	5.08	12.71	55.08	23.73	3.39	17.79	55.08	27.12	3.08

■ 청소년 가정형편 차별

청소년들은 가정형편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 ‘청소년들은 가정형편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라는 문항에 긍정(39.61%)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6.80%)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훨씬 많음



- 군 지역이 51.49%로 시 지역(34.45%)에 비해 긍정의 답이 많음
- 성별로는 남성이 42.21%로 여성(37.04%)에 비해 긍정의 답을 함
- 연령별로는 ‘30~65세’가 40.56%로 가장 높고 29세 이하(37.80%) 65세 이상(34.75%) 순임

■ 청소년 가정형편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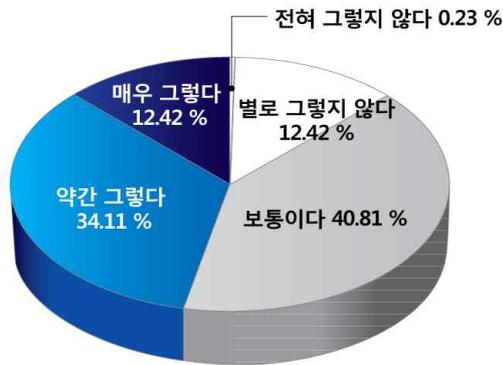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1.36	15.44	43.60	31.93	7.68	16.80	43.60	39.61	3.29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84	17.82	45.90	28.40	6.05	19.66	45.90	34.45	3.19
	군 지역	402	0.25	9.95	38.31	40.05	11.44	10.20	38.31	51.49	3.52
성별	남성	661	1.06	15.43	41.30	35.10	7.11	16.49	41.30	42.21	3.32
	여성	667	1.65	15.44	45.88	28.79	8.25	17.09	45.88	37.04	3.27
연령	~29세	209	0.96	17.70	43.54	28.23	9.57	18.66	43.54	37.80	3.28
	30~64세	1,001	1.50	14.39	43.56	32.87	7.69	15.89	43.56	40.56	3.31
	65세 이상	118	0.85	20.34	44.07	30.51	4.24	21.19	44.07	34.75	3.17

■ 청소년 폭력 노출

청소년들은 학교, 친구, 선후배 등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 '청소년들은 학교, 친구, 선후배 등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문항에 긍정(46.53%)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2.65%)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훨씬 많음



- 군 지역이 58.96%로 시 지역(41.15%)에 비해 긍정의 답이 많음
- 성별로는 남성이 49.77%로 여성(43.32%)에 비해 긍정의 답을 함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55.98%)이 가장 높고 , 65세 이상(55.94%), '30~64세'(43.46%) 순임

■ 청소년 폭력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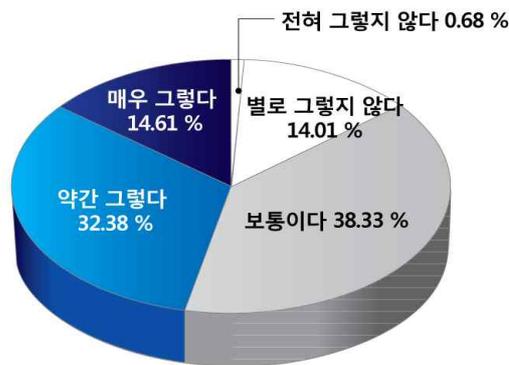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23	12.42	40.81	34.11	12.42	12.65	40.81	46.53	3.46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11	13.93	44.82	31.32	9.83	14.04	44.82	41.15	3.37
	군 지역	402	0.50	8.96	31.59	40.55	18.41	9.46	31.59	58.96	3.67
성별	남성	661	0.00	9.83	40.39	37.97	11.80	9.83	40.39	49.77	3.52
	여성	667	0.45	14.99	41.23	30.28	13.04	15.44	41.23	43.32	3.40
연령	~29세	209	0.00	6.22	37.80	45.45	10.53	6.22	37.80	55.98	3.60
	30~64세	1,001	0.20	14.19	42.16	30.87	12.59	14.39	42.16	43.46	3.41
	65세 이상	118	0.85	8.47	34.75	41.53	14.41	9.32	34.75	55.94	3.60

■ 청소년 여가시설 부족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라는 문항에 긍정(46.99%)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4.69%)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이 59.20%로 시 지역(41.69%)에 비해 긍정의 답이 많음
- 성별로는 남성이 48.56%로 여성(45.42%)에 비해 긍정의 답을 함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58.47%)이 가장 높고 '30~65세'(46.26%), 29세 이하(44.02%)순임

■ 청소년 여가시설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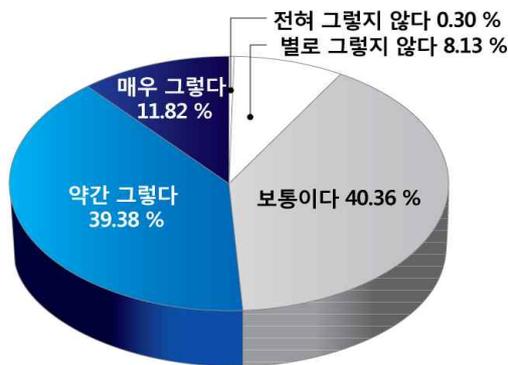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68	14.01	38.33	32.38	14.61	14.69	38.33	46.99	3.46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54	16.20	41.58	31.75	9.94	16.74	41.58	41.69	3.34
	군 지역	402	1.00	8.96	30.85	33.83	25.37	9.96	30.85	59.20	3.74
성별	남성	661	0.61	12.86	37.97	33.43	15.13	13.47	37.97	48.56	3.50
	여성	667	0.75	15.14	38.68	31.33	14.09	15.89	38.68	45.42	3.43
연령	~29세	209	1.44	12.44	42.11	30.62	13.40	13.88	42.11	44.02	3.42
	30~64세	1,001	0.60	14.99	38.16	32.37	13.89	15.59	38.16	46.26	3.44
	65세 이상	118	0.00	8.47	33.05	35.59	22.88	8.47	33.05	58.47	3.73

■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부족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문항에 긍정(51.20%)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8.43%)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이 54.97%로 시 지역(49.57%)에 비해 긍정의 답이 많음
- 성별로는 남성이 52.80%로 여성(49.62%)에 비해 긍정의 답을 함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56.93%로 가장 높고 65세 이상(53.39%), 30~64세 (49.75%)순임

■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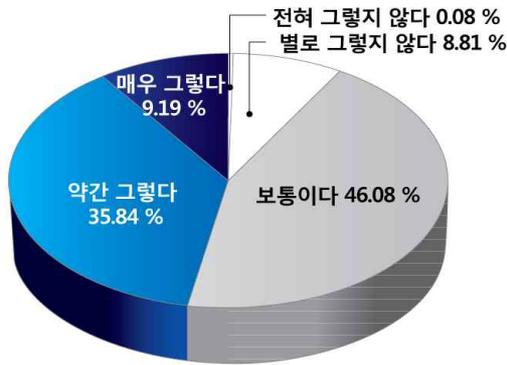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30	8.13	40.36	39.38	11.82	8.43	40.36	51.20	3.54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11	7.99	42.33	36.83	12.74	8.10	42.33	49.57	3.54
	군 지역	402	0.75	8.46	35.82	45.27	9.70	9.21	35.82	54.97	3.55
성별	남성	661	0.30	8.17	38.73	42.51	10.29	8.47	38.73	52.80	3.54
	여성	667	0.30	8.10	41.98	36.28	13.34	8.40	41.98	49.62	3.54
연령	~29세	209	0.00	9.09	33.97	42.58	14.35	9.09	33.97	56.93	3.62
	30~64세	1,001	0.40	7.99	41.86	38.26	11.49	8.39	41.86	49.75	3.52
	65세 이상	118	0.00	7.63	38.98	43.22	10.17	7.63	38.98	53.39	3.56

■ 장애인 가족 갈등 원인

장애인들은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장애인들은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문항에 긍정(45.03%)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3.89%)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 군 지역이 45.52%로 시 지역(44.82%)에 비해 큰 편차가 나지는 않음
- 성별로는 남성이 45.84%로 여성(44.23%)에 비해 편차가 나지는 않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53.11%로 가장 높고 30~64세(43.95%), 65세 이상(39.83%) 순임

■ 장애인 가족 갈등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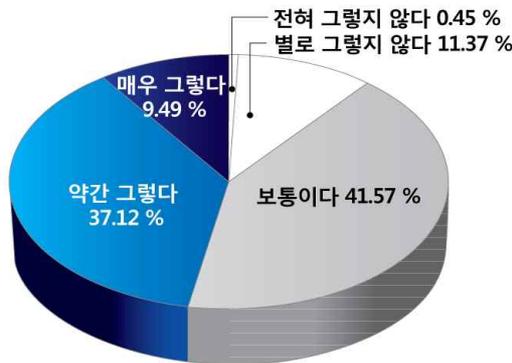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08	8.81	46.08	35.84	9.19	8.89	46.08	45.03	3.45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00	8.75	46.44	36.07	8.75	8.75	46.44	44.82	3.45
	군 지역	402	0.25	8.96	45.27	35.32	10.20	9.21	45.27	45.52	3.46
성별	남성	661	0.00	8.77	45.39	36.61	9.23	8.77	45.39	45.84	3.46
	여성	667	0.15	8.85	46.78	35.08	9.15	9.00	46.78	44.23	3.44
연령	~29세	209	0.00	7.18	39.71	38.76	14.35	7.18	39.71	53.11	3.60
	30~64세	1,001	0.10	9.29	46.65	35.26	8.69	9.39	46.65	43.95	3.43
	65세 이상	118	0.00	7.63	52.54	35.59	4.24	7.63	52.54	39.83	3.36

■ 장애인 비하 언어폭력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언어폭력이 많이 발생한다

- ‘장애인들은 비하하는 언어폭력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문항에 긍정(46.61%)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1.83%)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시 지역(46.87%)과 군 지역(46.02)%은 큰 편차가 나지는 않음
- 성별로는 남성이 49.02%로 여성(44.23%)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50.72%)가 가장 높고 30~65세(45.85%), 65세 이상(45.77%) 순임

■ 장애인 비하 언어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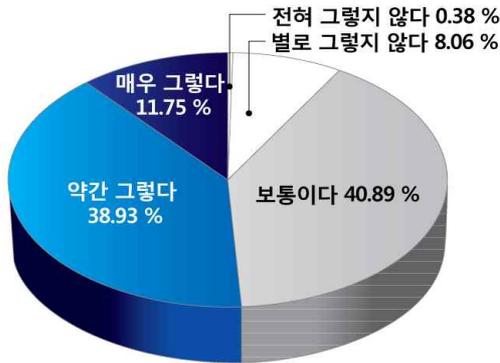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45	11.37	41.57	37.12	9.49	11.82	41.57	46.61	3.44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32	12.20	40.60	36.93	9.94	12.52	40.60	46.87	3.44
	군 지역	402	0.75	9.45	43.78	37.56	8.46	10.20	43.78	46.02	3.44
성별	남성	661	0.45	9.68	40.85	38.73	10.29	10.13	40.85	49.02	3.49
	여성	667	0.45	13.04	42.28	35.53	8.70	13.49	42.28	44.23	3.39
연령	~29세	209	0.48	10.53	38.28	34.93	15.79	11.01	38.28	50.72	3.55
	30~64세	1,001	0.40	11.99	41.76	37.06	8.79	12.39	41.76	45.85	3.42
	65세 이상	118	0.85	7.63	45.76	41.53	4.24	8.48	45.76	45.77	3.41

■ 다문화 여성 언어 문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언어 때문에 일상의 불편함이 많다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언어 때문에 일상의 불편함이 많다'라는 문항에 긍정(50.68%)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8.44%)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시 지역(50.43%)과 군 지역(51.24%)은 큰 편차가 나지는 않음
- 성별로는 남성이 55.37%로 여성(46.03%)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58.37% 가장 높고, 65세 이상(55.08%), 30~64세 (48.55%) 순임

■ 다문화 여성 언어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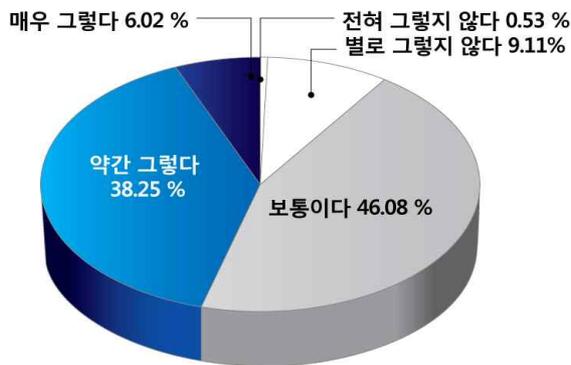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38	8.06	40.89	38.93	11.75	8.44	40.89	50.68	3.54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11	7.13	42.33	38.77	11.66	7.24	42.33	50.43	3.55
	군 지역	402	1.00	10.20	37.56	39.30	11.94	11.20	37.56	51.24	3.51
성별	남성	661	0.76	7.72	36.16	41.60	13.77	8.48	36.16	55.37	3.60
	여성	667	0.00	8.40	45.58	36.28	9.75	8.40	45.58	46.03	3.47
연령	~29세	209	0.00	6.70	34.93	44.02	14.35	6.70	34.93	58.37	3.66
	30~64세	1,001	0.50	8.39	42.56	36.96	11.59	8.89	42.56	48.55	3.51
	65세 이상	118	0.00	7.63	37.29	46.61	8.47	7.63	37.29	55.08	3.56

■ 다문화 여성 외모 차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외모의 차이로 차별을 받는다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외모의 차이로 차별을 받는다'라는 문항에 긍정(44.27%)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9.64%)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훨씬 많음



- 시 지역(44.82%)과 군 지역(43.04)%은 큰 편차가 나지는 않음
- 성별로는 남성이 46.37%로 여성(42.43%)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51.20%로 가장 높고, 65세 이상(46.61%), 30~65세(42.55%) 순임

■ 다문화 여성 외모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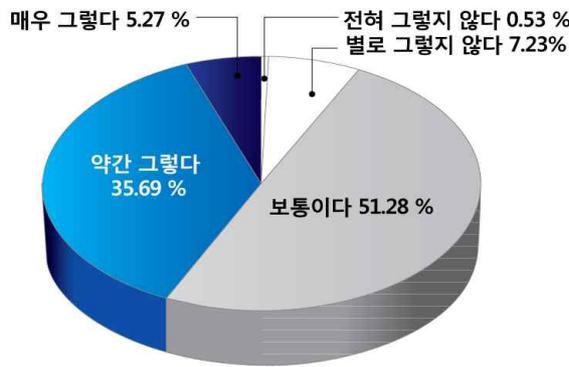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53	9.11	46.08	38.25	6.02	9.64	46.08	44.27	3.40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22	8.42	46.54	38.34	6.48	8.64	46.54	44.82	3.42
	군 지역	402	1.24	10.70	45.02	38.06	4.98	11.94	45.02	43.04	3.35
성별	남성	661	0.76	8.47	44.63	40.39	5.75	9.23	44.63	46.14	3.42
	여성	667	0.30	9.75	47.53	36.13	6.30	10.05	47.53	42.43	3.38
연령	~29세	209	0.00	10.05	38.76	42.11	9.09	10.05	38.76	51.20	3.50
	30~64세	1,001	0.50	8.89	48.05	37.26	5.29	9.39	48.05	42.55	3.38
	65세 이상	118	1.69	9.32	42.37	39.83	6.78	11.01	42.37	46.61	3.41

■ 다문화 여성 국적 차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모국의 가족들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모국의 가족들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문항에 긍정(40.96%)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7.76%)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시 지역(42.23%)이 군 지역(38.06%)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41.15%로 여성(40.78%)에 비해 근소하게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44.06%), 30~65세(40.76%), 29세 이하(40.19%) 순임

■ 다문화 여성 국적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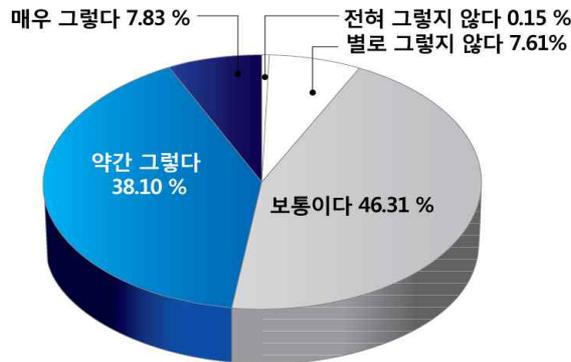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53	7.23	51.28	35.69	5.27	7.76	51.28	40.96	3.38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43	6.48	50.86	37.15	5.08	6.91	50.86	42.23	3.40
	군 지역	402	0.75	8.96	52.24	32.34	5.72	9.71	52.24	38.06	3.33
성별	남성	661	0.45	8.02	50.38	37.22	3.93	8.47	50.38	41.15	3.36
	여성	667	0.60	6.45	52.17	34.18	6.60	7.05	52.17	40.78	3.40
연령	~29세	209	0.00	5.74	54.07	37.32	2.87	5.74	54.07	40.19	3.37
	30~64세	1,001	0.70	7.89	50.65	34.97	5.79	8.59	50.65	40.76	3.37
	65세 이상	118	0.00	4.24	51.69	38.98	5.08	4.24	51.69	44.06	3.45

■ 외국인 노동자 국적, 외모 차별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출신국가나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출신국가나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라는 문항에 긍정(45.93%)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7.76%)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시 지역(46.87%)이 군 지역(43.78%)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47.81%로 여성(44.08%)에 비해 근소하게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50.24%), 64세 이상(47.46%), 30~65세(44.85%) 순임

■ 외국인 노동자 국적 외모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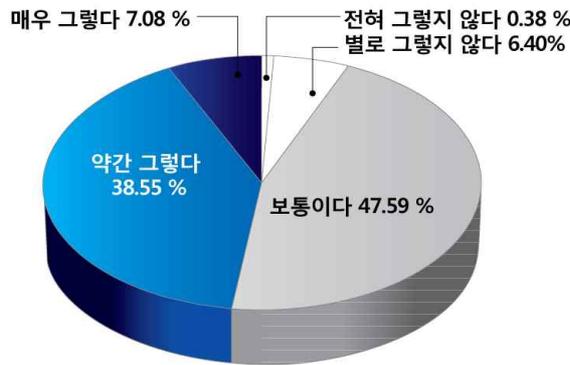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15	7.61	46.31	38.10	7.83	7.76	46.31	45.93	3.46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11	6.70	46.33	38.34	8.53	6.81	46.33	46.87	3.48
	군 지역	402	0.25	9.70	46.27	37.56	6.22	9.95	46.27	43.78	3.40
성별	남성	661	0.15	5.60	46.44	40.70	7.11	5.75	46.44	47.81	3.49
	여성	667	0.15	9.60	46.18	35.53	8.55	9.75	46.18	44.08	3.43
연령	~29세	209	0.48	5.74	43.54	38.28	11.96	6.22	43.54	50.24	3.56
	30~64세	1,001	0.10	8.09	46.95	37.86	6.99	8.19	46.95	44.85	3.44
	65세 이상	118	0.00	6.78	45.76	39.83	7.63	6.78	45.76	47.46	3.48

■ 외국인 노동자 언어 차별

외국인 노동자들은 서툰 한국말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 ‘외국인 노동자들은 서툰 한국말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라는 문항에 긍정(45.63%)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6.78%)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시 지역(45.90%)이 군 지역(45.02%)에 비해 근소하게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45.69%로 여성(45.58%)에 비해 근소하게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51.69%), 29세 이하(51.68%), 30~65세(43.65%) 순임

■ 외국인 노동자 언어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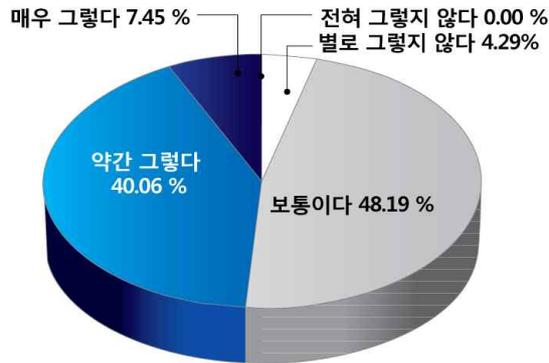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38	6.40	47.59	38.55	7.08	6.78	47.59	45.63	3.46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22	6.48	47.41	38.23	7.67	6.70	47.41	45.90	3.47
	군 지역	402	0.75	6.22	48.01	39.30	5.72	6.97	48.01	45.02	3.43
성별	남성	661	0.61	6.35	47.35	38.73	6.96	6.96	47.35	45.69	3.45
	여성	667	0.15	6.45	47.83	38.38	7.20	6.60	47.83	45.58	3.46
연령	~29세	209	0.48	6.22	41.63	44.98	6.70	6.70	41.63	51.68	3.51
	30~64세	1,001	0.40	6.39	49.55	36.36	7.29	6.79	49.55	43.65	3.44
	65세 이상	118	0.00	6.78	41.53	45.76	5.93	6.78	41.53	51.69	3.51

■ 외국인 노동자의 편견과 차별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라는 문항에 긍정(47.51%)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4.29%)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시 지역(48.38%)이 군 지역(45.52%)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49.62%로 여성(45.43%)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55.50%), 30~65세(46.25%), 65세 이상(44.07%) 순임

■ 외국인 노동자의 편견과 차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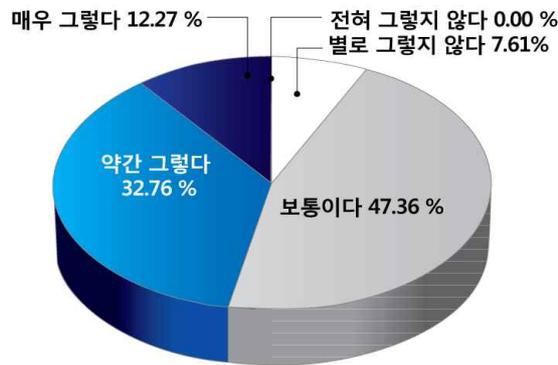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00	4.29	48.19	40.06	7.45	4.29	48.19	47.51	3.51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00	4.32	47.30	40.50	7.88	4.32	47.30	48.38	3.52
	군 지역	402	0.00	4.23	50.25	39.05	6.47	4.23	50.25	45.52	3.48
성별	남성	661	0.00	4.84	45.54	42.06	7.56	4.84	45.54	49.62	3.52
	여성	667	0.00	3.75	50.82	38.08	7.35	3.75	50.82	45.43	3.49
연령	~29세	209	0.00	7.18	37.32	46.41	9.09	7.18	37.32	55.50	3.57
	30~64세	1,001	0.00	4.00	49.75	39.16	7.09	4.00	49.75	46.25	3.49
	65세 이상	118	0.00	1.69	54.24	36.44	7.63	1.69	54.24	44.07	3.50

2) 경제활동

■ 노인 경제적 어려움

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 '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문항에 긍정(45.03%)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7.61%)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53.98%)이 시 지역(41.14%)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여성이 47.07%로 남성(42.96%)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73.73%), 30~65세(43.76%), 29세 이하 (34.93%) 순임

■ 노인 경제적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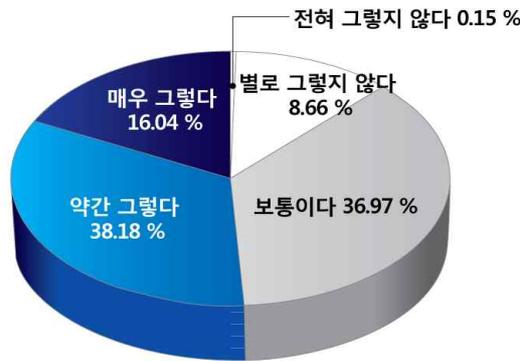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00	7.61	47.36	32.76	12.27	7.61	47.36	45.03	3.50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00	9.40	49.46	33.26	7.88	9.40	49.46	41.14	3.40
	군 지역	402	0.00	3.48	42.54	31.59	22.39	3.48	42.54	53.98	3.73
성별	남성	661	0.00	6.35	50.68	30.71	12.25	6.35	50.68	42.96	3.49
	여성	667	0.00	8.85	44.08	34.78	12.29	8.85	44.08	47.07	3.51
연령	~29세	209	0.00	11.96	53.11	29.19	5.74	11.96	53.11	34.93	3.29
	30~64세	1,001	0.00	7.29	48.95	32.27	11.49	7.29	48.95	43.76	3.48
	65세 이상	118	0.00	2.54	23.73	43.22	30.51	2.54	23.73	73.73	4.02

■ 노인 구직 어려움

노인들은 일이나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 '노인들은 일이나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문항에 긍정(54.22%)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3.81%)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57.96%)이 시 지역(52.59%)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여성이 54.57%로 남성(53.86%)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78.82%), 29세 이하 (53.59%), 30~65세(51.45%) 순임

■ 노인 구직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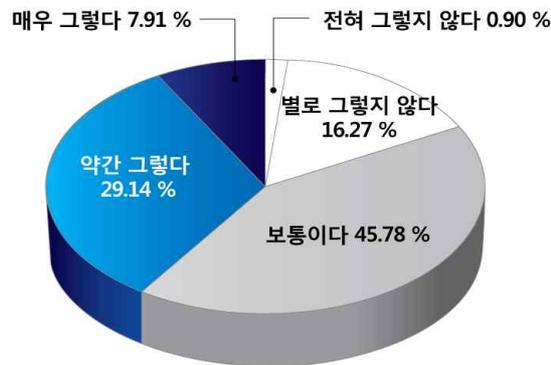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15	8.66	36.97	38.18	16.04	8.81	36.97	54.22	3.61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11	8.21	39.09	38.66	13.93	8.32	39.09	52.59	3.58
	군 지역	402	0.25	9.70	32.09	37.06	20.90	9.95	32.09	57.96	3.69
성별	남성	661	0.00	6.66	39.49	38.73	15.13	6.66	39.49	53.86	3.62
	여성	667	0.30	10.64	34.48	37.63	16.94	10.94	34.48	54.57	3.60
연령	~29세	209	0.00	9.57	36.84	41.15	12.44	9.57	36.84	53.59	3.56
	30~64세	1,001	0.20	9.49	38.86	37.26	14.19	9.69	38.86	51.45	3.56
	65세 이상	118	0.00	0.00	21.19	40.68	38.14	0.00	21.19	78.82	4.17

■ 청소년 임금 부당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지급 등 부당한 경우가 많다

-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지급 등 부당한 경우가 많다’라는 문항에 긍정(37.05%)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7.17%)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41.29%)이 시 지역(35.21%) 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42.21%로 여성(31.94%)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44.98%), 65세 이상(40.68%), 30~65세(34.96%) 순임

■ 청소년 임금 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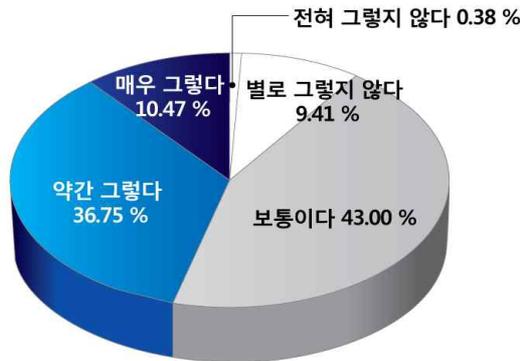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90	16.27	45.78	29.14	7.91	17.17	45.78	37.05	3.27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76	17.28	46.76	29.05	6.16	18.04	46.76	35.21	3.23
	군 지역	402	1.24	13.93	43.53	29.35	11.94	15.17	43.53	41.29	3.37
성별	남성	661	0.76	14.67	42.36	34.80	7.41	15.43	42.36	42.21	3.33
	여성	667	1.05	17.84	49.18	23.54	8.40	18.89	49.18	31.94	3.20
연령	~29세	209	0.96	14.83	39.23	29.67	15.31	15.79	39.23	44.98	3.44
	30~64세	1,001	1.00	16.78	47.25	28.47	6.49	17.78	47.25	34.96	3.23
	65세 이상	118	0.00	14.41	44.92	33.90	6.78	14.41	44.92	40.68	3.33

■ 장애인 구직 어려움

장애인이러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

- '장애인이러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라는 문항에 긍정(47.22%)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9.79%)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51.25%)이 시 지역(45.47%)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51.44%로 여성(43.02%)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53.39%), 29세 이하 (53.11%), 30~65세(45.26%)순임

■ 장애인 구직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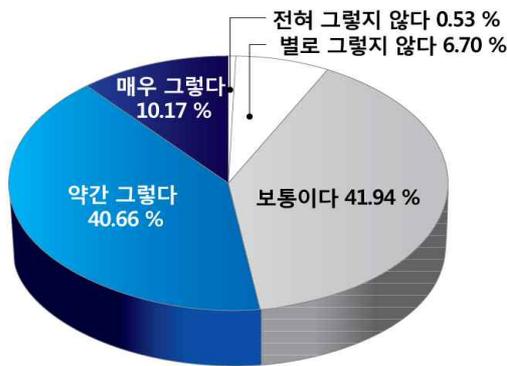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38	9.41	43.00	36.75	10.47	9.79	43.00	47.22	3.48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11	9.61	44.82	35.10	10.37	9.72	44.82	45.47	3.46
	군 지역	402	1.00	8.96	38.81	40.55	10.70	9.96	38.81	51.25	3.51
성별	남성	661	0.15	7.72	40.70	42.06	9.38	7.87	40.70	51.44	3.53
	여성	667	0.60	11.09	45.28	31.48	11.54	11.69	45.28	43.02	3.42
연령	~29세	209	0.00	8.13	38.76	41.15	11.96	8.13	38.76	53.11	3.57
	30~64세	1,001	0.30	10.09	44.36	34.97	10.29	10.39	44.36	45.26	3.45
	65세 이상	118	1.69	5.93	38.98	44.07	9.32	7.62	38.98	53.39	3.53

■ 장애인 승진 임금 차별

장애인들은 승진이나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다

- '장애인들은 승진이나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다'라는 문항에 긍정(50.83%)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7.23%)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52.49%)이 시 지역(50.11%)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53.40%로 여성(48.28%)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55.98%), 65세 이상(54.24%), 30~65세(49.35%) 순임

■ 장애인 승진 임금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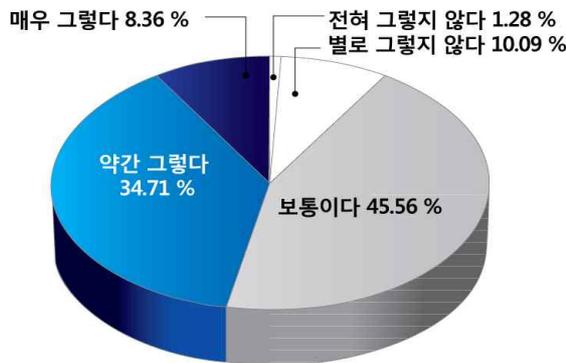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53	6.70	41.94	40.66	10.17	7.23	41.94	50.83	3.53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43	7.24	42.22	39.85	10.26	7.67	42.22	50.11	3.52
	군 지역	402	0.75	5.47	41.29	42.54	9.95	6.22	41.29	52.49	3.55
성별	남성	661	0.45	5.60	40.54	41.60	11.80	6.05	40.54	53.40	3.59
	여성	667	0.60	7.80	43.33	39.73	8.55	8.40	43.33	48.28	3.48
연령	~29세	209	0.48	7.18	36.36	46.41	9.57	7.66	36.36	55.98	3.57
	30~64세	1,001	0.30	6.99	43.36	39.46	9.89	7.29	43.36	49.35	3.52
	65세 이상	118	2.54	3.39	39.83	40.68	13.56	5.93	39.83	54.24	3.59

■ 장애인 주거 구하는 어려움

장애인이러는 이유로 집이나 방을 구하는데 힘들다

○ '장애인이러는 이유로 집이나 방을 구하는데 힘들다'라는 문항에 긍정(43.07%)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1.37%)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46.52%)이 시 지역(41.58%)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여성이 43.48%로 남성(42.67%)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52.54%), 29세 이하 (48.80%), 30~65세(40.76%) 순임

■ 장애인 주거 구하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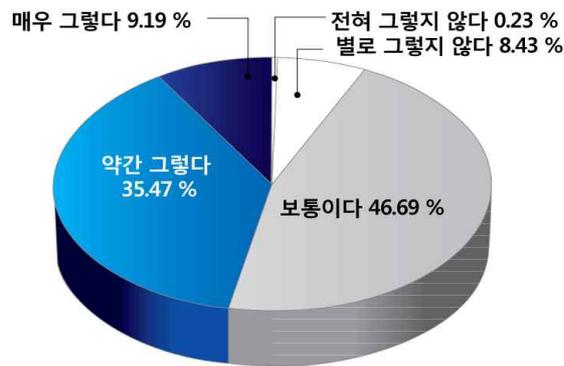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1.28	10.09	45.56	34.71	8.36	11.37	45.56	43.07	3.39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08	10.26	47.08	33.05	8.53	11.34	47.08	41.58	3.38
	군 지역	402	1.74	9.70	42.04	38.56	7.96	11.44	42.04	46.52	3.41
성별	남성	661	1.36	10.89	45.08	33.74	8.93	12.25	45.08	42.67	3.38
	여성	667	1.20	9.30	46.03	35.68	7.80	10.50	46.03	43.48	3.40
연령	~29세	209	3.83	10.05	37.32	36.36	12.44	13.88	37.32	48.80	3.44
	30~64세	1,001	0.90	10.09	48.25	32.97	7.79	10.99	48.25	40.76	3.37
	65세 이상	118	0.00	10.17	37.29	46.61	5.93	10.17	37.29	52.54	3.48

■ 다문화 여성 경제적 어려움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 '다문화가족 이주 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라는 문항에 긍정(44.66%)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8.66%)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46.27%)이 시 지역(43.96%)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여성이 44.68%로 남성(44.63%)에 비해 근소하게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45.94%), 30~65세(44.65%), 65세 이상(42.37%) 순임

■ 다문화 여성 경제적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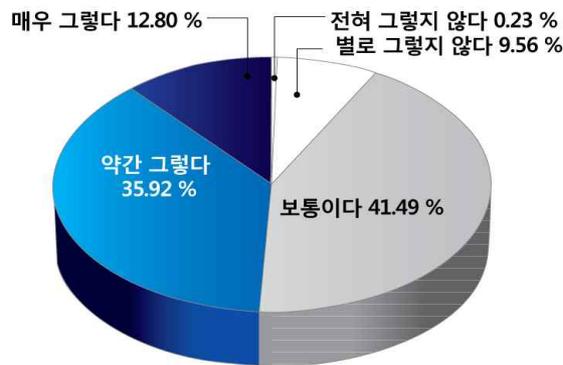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23	8.43	46.69	35.47	9.19	8.66	46.69	44.66	3.45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22	7.99	47.84	35.21	8.75	8.21	47.84	43.96	3.44
	군 지역	402	0.25	9.45	44.03	36.07	10.20	9.70	44.03	46.27	3.47
성별	남성	661	0.00	7.72	47.66	35.25	9.38	7.72	47.66	44.63	3.46
	여성	667	0.45	9.15	45.73	35.68	9.00	9.60	45.73	44.68	3.44
연령	~29세	209	0.48	10.53	43.06	32.54	13.40	11.01	43.06	45.94	3.48
	30~64세	1,001	0.20	8.09	47.05	36.26	8.39	8.29	47.05	44.65	3.45
	65세 이상	118	0.00	7.63	50.00	33.90	8.47	7.63	50.00	42.37	3.43

■ 다문화 여성 구직 어려움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일자리나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일자리나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라는 문항에 긍정(48.72%)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9.79%)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시 지역(50.11%)이 군 지역(45.53%)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50.69%로 여성(46.77%)에 비해 근소하게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55.02%), 65세 이상(52.54%), 30~65세(46.96%) 순임

■ 다문화 여성 구직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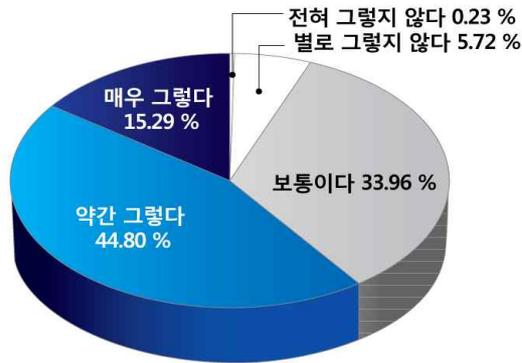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23	9.56	41.49	35.92	12.80	9.79	41.49	48.72	3.52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22	8.64	41.04	36.50	13.61	8.86	41.04	50.11	3.55
	군 지역	402	0.25	11.69	42.54	34.58	10.95	11.94	42.54	45.53	3.44
성별	남성	661	0.15	7.72	41.45	38.28	12.41	7.87	41.45	50.69	3.55
	여성	667	0.30	11.39	41.53	33.58	13.19	11.69	41.53	46.77	3.48
연령	~29세	209	0.48	9.57	34.93	39.23	15.79	10.05	34.93	55.02	3.60
	30~64세	1,001	0.20	9.29	43.56	34.87	12.09	9.49	43.56	46.96	3.49
	65세 이상	118	0.00	11.86	35.59	38.98	13.56	11.86	35.59	52.54	3.54

■ 다문화 여성 승진 임금 차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승진이나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다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승진이나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다'라는 문항에 긍정(60.09%)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5.95%)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시 지역(61.44%)이 군 지역(56.96%)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63.38%로 여성(56.82%)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62.71%), 29세 이하 (60.77%), 30~65세(59.64%) 순임

■ 다문화 여성 승진 임금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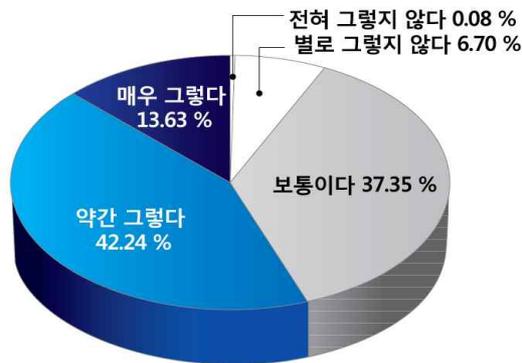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23	5.72	33.96	44.80	15.29	5.95	33.96	60.09	3.69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00	5.51	33.05	45.57	15.87	5.51	33.05	61.44	3.72
	군 지역	402	0.75	6.22	36.07	43.03	13.93	6.97	36.07	56.96	3.63
성별	남성	661	0.30	5.30	31.01	48.71	14.67	5.60	31.01	63.38	3.72
	여성	667	0.15	6.15	36.88	40.93	15.89	6.30	36.88	56.82	3.66
연령	~29세	209	0.00	6.22	33.01	44.98	15.79	6.22	33.01	60.77	3.70
	30~64세	1,001	0.30	5.59	34.47	44.26	15.38	5.89	34.47	59.64	3.69
	65세 이상	118	0.00	5.93	31.36	49.15	13.56	5.93	31.36	62.71	3.70

■ 외국인 노동자 동일 노동 차별

외국인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해도 한국인과 심한 차별이 존재한다

- ‘외국인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해도 한국인과 심한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문항에 긍정(55.87%)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6.78%)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시 지역(58.31%)이 군 지역(50.25%)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58.70%로 여성(53.07%)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64.12%), 65세 이상(58.48%), 30~65세(53.85%) 순임

■ 외국인 노동자 동일 노동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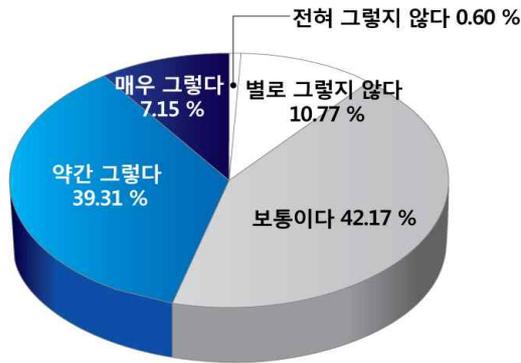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08	6.70	37.35	42.24	13.63	6.78	37.35	55.87	3.63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00	5.94	35.75	43.30	15.01	5.94	35.75	58.31	3.67
	군 지역	402	0.25	8.46	41.04	39.80	10.45	8.71	41.04	50.25	3.52
성별	남성	661	0.00	6.35	34.95	46.60	12.10	6.35	34.95	58.70	3.64
	여성	667	0.15	7.05	39.73	37.93	15.14	7.20	39.73	53.07	3.61
연령	~29세	209	0.00	8.13	27.75	47.85	16.27	8.13	27.75	64.12	3.72
	30~64세	1,001	0.10	6.89	39.16	40.06	13.79	6.99	39.16	53.85	3.61
	65세 이상	118	0.00	2.54	38.98	50.85	7.63	2.54	38.98	58.48	3.64

■ 외국인 노동자 직장 폭력

인국인노동자들은 직장 내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 '외국인노동자들은 직장 내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문항에 긍정(46.46%)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1.37%)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시 지역(47.30%)이 군 지역(44.53%)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49.62%로 여성(43.33%)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50.00%), 29세 이하 (49.76%), 30~65세(45.35%) 순임

■ 외국인 노동자 직장 폭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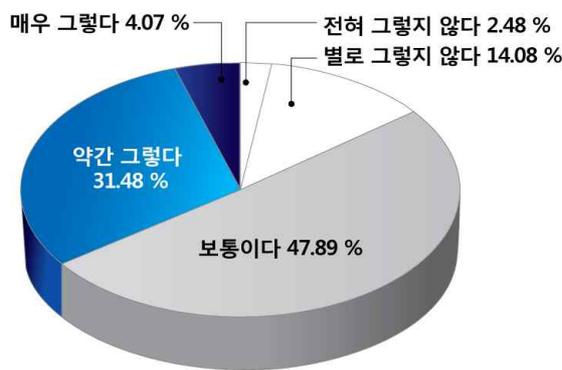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60	10.77	42.17	39.31	7.15	11.37	42.17	46.46	3.42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32	9.50	42.87	39.96	7.34	9.82	42.87	47.30	3.44
	군 지역	402	1.24	13.68	40.55	37.81	6.72	14.92	40.55	44.53	3.35
성별	남성	661	1.06	9.98	39.33	41.30	8.32	11.04	39.33	49.62	3.46
	여성	667	0.15	11.54	44.98	37.33	6.00	11.69	44.98	43.33	3.37
연령	~29세	209	1.44	11.00	37.80	42.58	7.18	12.44	37.80	49.76	3.43
	30~64세	1,001	0.50	11.09	43.06	38.16	7.19	11.59	43.06	45.35	3.40
	65세 이상	118	0.00	7.63	42.37	43.22	6.78	7.63	42.37	50.00	3.49

3) 사회복지

■ 노인 의료서비스 어려움

노인들은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 '노인들은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문항에 긍정(35.55%)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6.56%)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43.78%)이 시 지역(31.97%)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여성 37.78%로 남성(33.28%)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59.32%), 29세 이하 (34.45%), 30~65세(32.97%) 순임

■ 노인 의료서비스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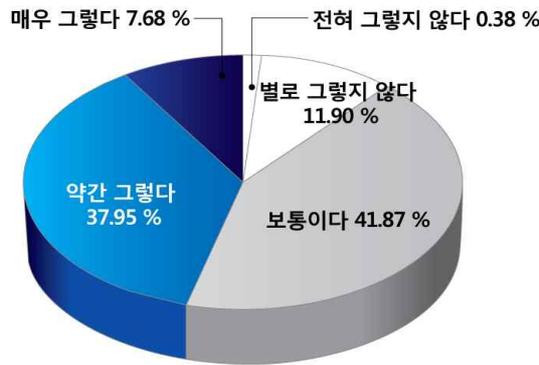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2.48	14.08	47.89	31.48	4.07	16.56	47.89	35.55	3.21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3.24	16.41	48.38	29.05	2.92	19.65	48.38	31.97	3.12
	군 지역	402	0.75	8.71	46.77	37.06	6.72	9.46	46.77	43.78	3.40
성별	남성	661	2.87	13.77	50.08	29.20	4.08	16.64	50.08	33.28	3.18
	여성	667	2.10	14.39	45.73	33.73	4.05	16.49	45.73	37.78	3.23
연령	~29세	209	4.78	15.31	45.45	32.54	1.91	20.09	45.45	34.45	3.11
	30~64세	1,001	2.20	14.59	50.25	29.17	3.80	16.79	50.25	32.97	3.18
	65세 이상	118	0.85	7.63	32.20	49.15	10.17	8.48	32.20	59.32	3.60

■ 노인 운동 시설 프로그램 부족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라는 문항에 긍정(45.63%)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2.50%)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50.50%)이 시 지역(43.53%)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46.74%로 여성(44.53%)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62.72%), 30~65세(45.95%), 29세 이하 (34.45%) 순임

■ 노인 운동 시설 프로그램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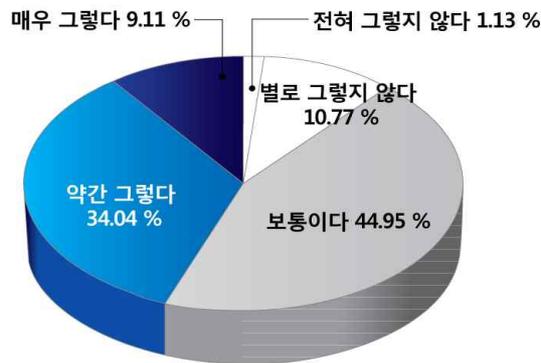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60	11.90	41.87	37.95	7.68	12.50	41.87	45.63	3.40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86	12.42	43.20	36.83	6.70	13.28	43.20	43.53	3.36
	군 지역	402	0.00	10.70	38.81	40.55	9.95	10.70	38.81	50.50	3.50
성별	남성	661	0.61	11.95	40.70	39.18	7.56	12.56	40.70	46.74	3.41
	여성	667	0.60	11.84	43.03	36.73	7.80	12.44	43.03	44.53	3.39
연령	~29세	209	2.39	12.92	50.24	26.79	7.66	15.31	50.24	34.45	3.24
	30~64세	1,001	0.30	12.69	41.06	39.46	6.49	12.99	41.06	45.95	3.39
	65세 이상	118	0.00	3.39	33.90	44.92	17.80	3.39	33.90	62.72	3.77

■ 노인 사회복지관 부족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관 시설은 부족한 편이다

-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관 시설은 부족한 편이다'라는 문항에 긍정(43.15%)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1.90%)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48.51%)이 시 지역(40.82%)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49.17%로 여성(37.9%)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62.71%), 30~65세(41.26%), 29세 이하(41.15%) 순임

■ 노인 사회복지관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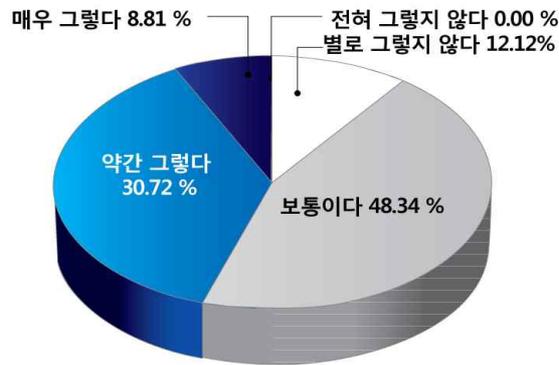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1.13	10.77	44.95	34.04	9.11	11.90	44.95	43.15	3.39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40	11.77	46.00	33.37	7.45	13.17	46.00	40.82	3.34
	군 지역	402	0.50	8.46	42.54	35.57	12.94	8.96	42.54	48.51	3.52
성별	남성	661	1.36	9.53	39.94	40.85	8.32	10.89	39.94	49.17	3.45
	여성	667	0.90	11.99	49.93	27.29	9.90	12.89	49.93	37.19	3.33
연령	~29세	209	4.31	16.27	38.28	30.62	10.53	20.58	38.28	41.15	3.27
	30~64세	1,001	0.60	10.39	47.75	33.57	7.69	10.99	47.75	41.26	3.37
	65세 이상	118	0.00	4.24	33.05	44.07	18.64	4.24	33.05	62.71	3.77

■ 노인 주거 편의시설 부족

노인들의 생활을 위한 주거 편의시설은 부족하다

- '노인들의 생활을 위한 주거 편의시설은 부족하다'라는 문항에 긍정(39.53%)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2.12%)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40.05%)이 시 지역(39.31%)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여성이 39.43%로 남성(39.63%)에 근소하게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63.56%), 30~65세(37.76%), 29세 이하 (34.45%), 순임

■ 노인 주거 편의시설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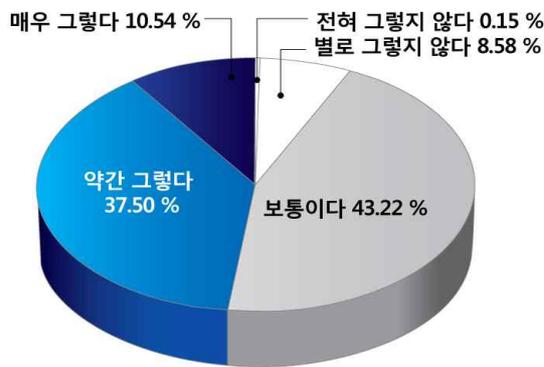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00	12.12	48.34	30.72	8.81	12.12	48.34	39.53	3.36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00	12.85	47.84	29.81	9.50	12.85	47.84	39.31	3.36
	군 지역	402	0.00	10.45	49.50	32.84	7.21	10.45	49.50	40.05	3.37
성별	남성	661	0.00	10.44	49.92	29.80	9.83	10.44	49.92	39.63	3.39
	여성	667	0.00	13.79	46.78	31.63	7.80	13.79	46.78	39.43	3.33
연령	~29세	209	0.00	15.79	49.76	25.36	9.09	15.79	49.76	34.45	3.28
	30~64세	1,001	0.00	12.19	50.05	29.87	7.89	12.19	50.05	37.76	3.33
	65세 이상	118	0.00	5.08	31.36	47.46	16.10	5.08	31.36	63.56	3.75

■ 장애인 복지기관 부족

장애인 복지기관은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 '장애인 복지기관은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라는 문항에 긍정(48.04%)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8.73%)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50.75%)이 시 지역(46.87%)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51.29%로 여성(44.82%)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51.68%), 65세 이상(50.85%), 30~65세(46.95%) 순임

■ 장애인 복지기관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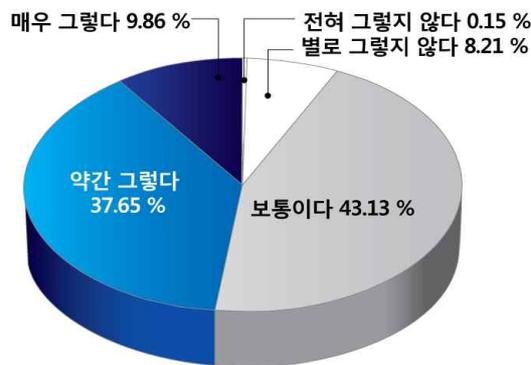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15	8.58	43.22	37.50	10.54	8.73	43.22	48.04	3.50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00	8.75	44.38	37.15	9.72	8.75	44.38	46.87	3.48
	군 지역	402	0.50	8.21	40.55	38.31	12.44	8.71	40.55	50.75	3.54
성별	남성	661	0.15	6.96	41.60	41.91	9.38	7.11	41.60	51.29	3.53
	여성	667	0.15	10.19	44.83	33.13	11.69	10.34	44.83	44.82	3.46
연령	~29세	209	0.00	9.09	39.23	38.28	13.40	9.09	39.23	51.68	3.56
	30~64세	1,001	0.20	8.59	44.26	37.36	9.59	8.79	44.26	46.95	3.48
	65세 이상	118	0.00	7.63	41.53	37.29	13.56	7.63	41.53	50.85	3.57

■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불편

장애인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

-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문항에 긍정(47.51%)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8.36%)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49.25%)이 시 지역(46.76%)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53.40%로 여성(41.68%)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54.54%), 30~65세(46.85%), 65세 이상(40.68%) 순임

■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불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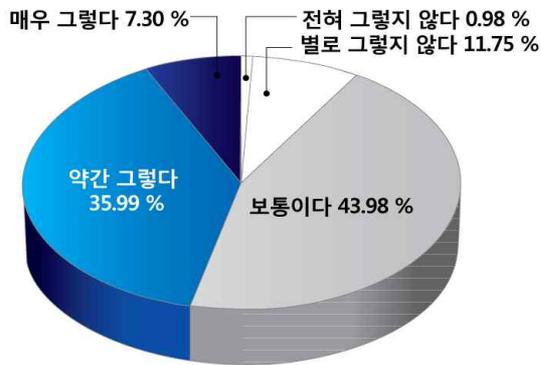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15	8.21	44.13	37.65	9.86	8.36	44.13	47.51	3.49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00	8.64	44.60	37.47	9.29	8.64	44.60	46.76	3.47
	군 지역	402	0.50	7.21	43.03	38.06	11.19	7.71	43.03	49.25	3.52
성별	남성	661	0.30	6.66	39.64	42.51	10.89	6.96	39.64	53.40	3.57
	여성	667	0.00	9.75	48.58	32.83	8.85	9.75	48.58	41.68	3.41
연령	~29세	209	0.00	7.66	37.80	43.06	11.48	7.66	37.80	54.54	3.58
	30~64세	1,001	0.20	8.89	44.06	36.96	9.89	9.09	44.06	46.85	3.47
	65세 이상	118	0.00	3.39	55.93	33.90	6.78	3.39	55.93	40.68	3.44

■ 장애인 걱정 의료서비스 미제공

장애인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 '장애인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항에 긍정(43.29%)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2.73%)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47.26%)이 시 지역(41.58%)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46.29%로 여성(40.33%)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44.91%), 30~65세(43.75%), 29세 이하(40.20%) 순임

■ 장애인 걱정 의료서비스 미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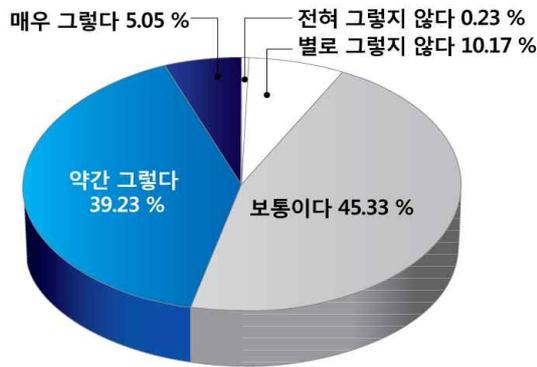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98	11.75	43.98	35.99	7.30	12.73	43.98	43.29	3.37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76	11.45	46.22	34.56	7.02	12.21	46.22	41.58	3.36
	군 지역	402	1.49	12.44	38.81	39.30	7.96	13.93	38.81	47.26	3.40
성별	남성	661	0.61	10.59	42.51	38.88	7.41	11.20	42.51	46.29	3.42
	여성	667	1.35	12.89	45.43	33.13	7.20	14.24	45.43	40.33	3.32
연령	~29세	209	0.96	13.40	45.45	32.54	7.66	14.36	45.45	40.20	3.33
	30~64세	1,001	1.00	12.19	43.06	35.96	7.79	13.19	43.06	43.75	3.37
	65세 이상	118	0.85	5.08	49.15	42.37	2.54	5.93	49.15	44.91	3.41

■ 장애인 복지기관 의견 미반영

장애인 복지기관은 장애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 '장애인 복지기관은 장애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문항에 긍정(44.28%)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0.40%)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시 지역(44.82%)이 군 지역(43.04%)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44.33%로 여성(44.23%)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30~65세(44.85%), 29세 이하(42.58%), 65세 이상(42.37%) 순임

■ 장애인 복지기관 의견 미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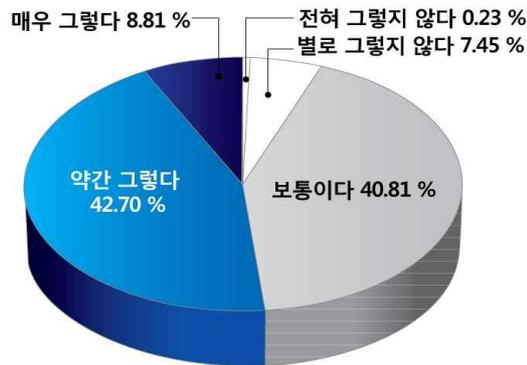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23	10.17	45.33	39.23	5.05	10.40	45.33	44.28	3.39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11	9.72	45.36	39.74	5.08	9.83	45.36	44.82	3.40
	군 지역	402	0.50	11.19	45.27	38.06	4.98	11.69	45.27	43.04	3.36
성별	남성	661	0.00	12.41	43.27	39.79	4.54	12.41	43.27	44.33	3.36
	여성	667	0.45	7.95	47.38	38.68	5.55	8.40	47.38	44.23	3.41
연령	~29세	209	0.00	8.61	48.80	37.32	5.26	8.61	48.80	42.58	3.39
	30~64세	1,001	0.30	9.99	44.86	39.66	5.19	10.29	44.86	44.85	3.39
	65세 이상	118	0.00	14.41	43.22	38.98	3.39	14.41	43.22	42.37	3.31

■ 장애인 주거 편의시설 부족

장애인들의 생활을 위한 주거 편의시설은 부족하다

- '장애인 복지기관은 장애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문항에 긍정(51.51%)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7.68%)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52.24%)이 시 지역(51.19%)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여성이 52.33%로 남성(50.68%)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56.78%), 29세 이하(56.46%), 30~65세(49.85%) 순임

■ 장애인 주거 편의시설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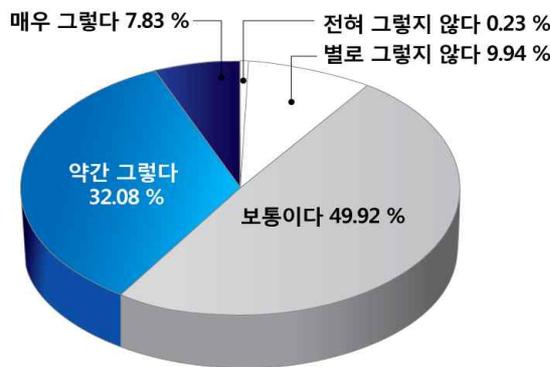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23	7.45	40.81	42.70	8.81	7.68	40.81	51.51	3.52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11	6.91	41.79	42.98	8.21	7.02	41.79	51.19	3.52
	군 지역	402	0.50	8.71	38.56	42.04	10.20	9.21	38.56	52.24	3.53
성별	남성	661	0.00	6.20	43.12	41.91	8.77	6.20	43.12	50.68	3.53
	여성	667	0.45	8.70	38.53	43.48	8.85	9.15	38.53	52.33	3.52
연령	~29세	209	0.00	6.22	37.32	48.33	8.13	6.22	37.32	56.46	3.58
	30~64세	1,001	0.20	7.89	42.06	41.06	8.79	8.09	42.06	49.85	3.50
	65세 이상	118	0.85	5.93	36.44	46.61	10.17	6.78	36.44	56.78	3.59

■ 다문화 여성가족 의료시설 이용 어려움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은 본인과 자녀들의 의료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은 본인과 자녀들의 의료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문항에 긍정(39.91%)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0.17%)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시 지역(40.82%)이 군 지역(37.82%)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41.45%로 여성(38.38%)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49.77%), 65세 이상(38.14%), 30~65세(38.06%) 순임

■ 다문화 여성가족 의료시설 이용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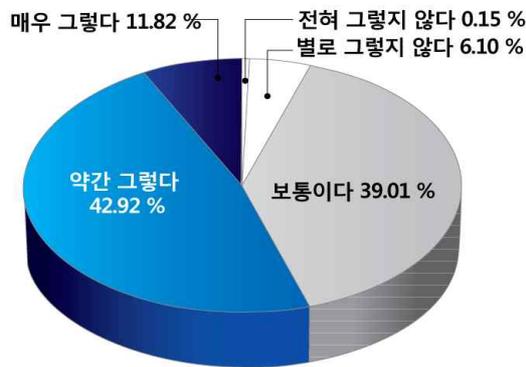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23	9.94	49.92	32.08	7.83	10.17	49.92	39.91	3.37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32	9.18	49.68	32.61	8.21	9.50	49.68	40.82	3.39
	군 지역	402	0.00	11.69	50.50	30.85	6.97	11.69	50.50	37.82	3.33
성별	남성	661	0.30	10.74	47.50	33.43	8.02	11.04	47.50	41.45	3.38
	여성	667	0.15	9.15	52.32	30.73	7.65	9.30	52.32	38.38	3.37
연령	~29세	209	0.96	8.61	40.67	35.89	13.88	9.57	40.67	49.77	3.53
	30~64세	1,001	0.10	10.49	51.35	31.37	6.69	10.59	51.35	38.06	3.34
	65세 이상	118	0.00	7.63	54.24	31.36	6.78	7.63	54.24	38.14	3.37

■ 외국인 노동자 의료/산재보험 혜택 어려움

인국인 노동자도 의료보험과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외국인 노동자도 의료보험과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문항에 긍정(54.74%)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6.25%)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시 지역(56.26%)이 군 지역(51.25%)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58.10%로 여성(51.42%)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67.94%), 65세 이상(57.62%), 30~65세(51.65%) 순임

■ 외국인 노동자 의료/산재보험 혜택 어려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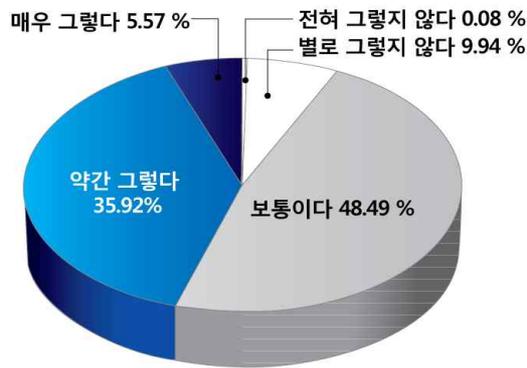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15	6.10	39.01	42.92	11.82	6.25	39.01	54.74	3.60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11	5.51	38.12	43.95	12.31	5.62	38.12	56.26	3.63
	군 지역	402	0.25	7.46	41.04	40.55	10.70	7.71	41.04	51.25	3.54
성별	남성	661	0.15	6.20	35.55	45.54	12.56	6.35	35.55	58.10	3.64
	여성	667	0.15	6.00	42.43	40.33	11.09	6.15	42.43	51.42	3.56
연령	~29세	209	0.00	4.78	27.27	55.50	12.44	4.78	27.27	67.94	3.76
	30~64세	1,001	0.20	6.99	41.16	39.56	12.09	7.19	41.16	51.65	3.56
	65세 이상	118	0.00	0.85	41.53	49.15	8.47	0.85	41.53	57.62	3.65

4) 교육

■ 노인 교육프로그램 부족

노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노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문항에 긍정(41.49%)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0.02%)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47.02%)이 시 지역(39.10%)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여성이 45.28%로 남성(37.67%)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64.40%), 30~65세(39.66%), 29세 이하(37.32%) 순임

■ 노인 교육프로그램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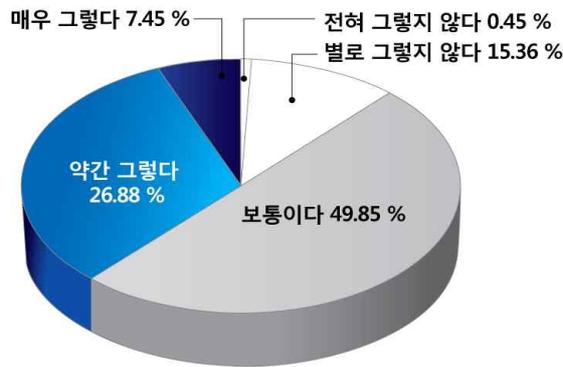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08	9.94	48.49	35.92	5.57	10.02	48.49	41.49	3.37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11	11.34	49.46	34.02	5.08	11.45	49.46	39.10	3.33
	군 지역	402	0.00	6.72	46.27	40.30	6.72	6.72	46.27	47.02	3.47
성별	남성	661	0.00	11.50	50.83	33.28	4.39	11.50	50.83	37.67	3.31
	여성	667	0.15	8.40	46.18	38.53	6.75	8.55	46.18	45.28	3.43
연령	~29세	209	0.00	13.88	48.80	31.10	6.22	13.88	48.80	37.32	3.30
	30~64세	1,001	0.10	9.79	50.45	34.17	5.49	9.89	50.45	39.66	3.35
	65세 이상	118	0.00	4.24	31.36	59.32	5.08	4.24	31.36	64.40	3.65

■ 청소년 특별활동 제한

청소년들은 정규과목 이외의 특별활동을 제한당하고 있다

- ‘청소년들은 정규과목 이외의 특별활동을 제한당하고 있다’라는 문항에 긍정(34.33%)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5.81%)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39.55%)이 시 지역(32.07%)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34.95%로 여성(33.74%)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41.52%), 30~65세(34.06%), 29세 이하 (31.58%) 순임

■ 청소년 특별활동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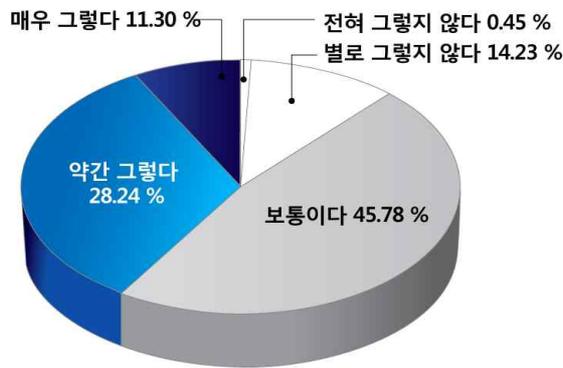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45	15.36	49.85	26.88	7.45	15.81	49.85	34.33	3.26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54	16.52	50.86	27.21	4.86	17.06	50.86	32.07	3.19
	군 지역	402	0.25	12.69	47.51	26.12	13.43	12.94	47.51	39.55	3.40
성별	남성	661	0.15	14.37	50.53	27.84	7.11	14.52	50.53	34.95	3.27
	여성	667	0.75	16.34	49.18	25.94	7.80	17.09	49.18	33.74	3.24
연령	~29세	209	0.48	16.75	51.20	25.36	6.22	17.23	51.20	31.58	3.20
	30~64세	1,001	0.30	14.99	50.65	27.27	6.79	15.29	50.65	34.06	3.25
	65세 이상	118	1.69	16.10	40.68	26.27	15.25	17.79	40.68	41.52	3.37

■ 청소년 성적으로 불공정 대우

청소년들은 학업성적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 '청소년들은 학업성적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문항에 긍정(39.54%)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4.68%)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51.99%)이 시 지역(34.12%)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40.69%로 여성(38.38%)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48.30%), 30~65세(39.06%), 29세 이하 (36.84%) 순임

■ 청소년 성적으로 불공정 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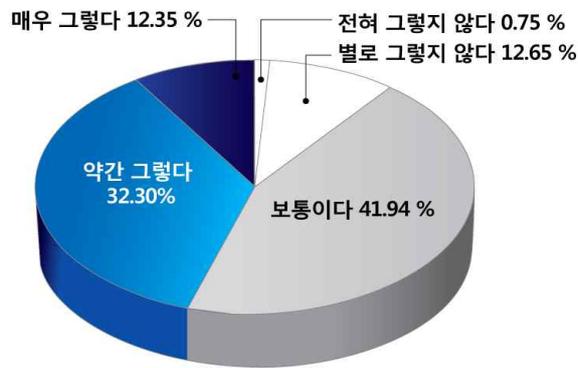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45	14.23	45.78	28.24	11.30	14.68	45.78	39.54	3.36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54	17.28	48.06	26.24	7.88	17.82	48.06	34.12	3.24
	군 지역	402	0.25	7.21	40.55	32.84	19.15	7.46	40.55	51.99	3.63
성별	남성	661	0.45	12.41	46.44	30.86	9.83	12.86	46.44	40.69	3.37
	여성	667	0.45	16.04	45.13	25.64	12.74	16.49	45.13	38.38	3.34
연령	~29세	209	0.48	18.18	44.50	25.84	11.00	18.66	44.50	36.84	3.29
	30~64세	1,001	0.50	13.89	46.55	28.17	10.89	14.39	46.55	39.06	3.35
	65세 이상	118	0.00	10.17	41.53	33.05	15.25	10.17	41.53	48.30	3.53

■ 청소년 보충/야간자율학습 강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보충학습·야간자율학습을 강요받는다

-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보충학습·야간자율학습을 강요받는다'라는 문항에 긍정(44.65%)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3.40%)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51.50%)이 시 지역(41.68%)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46.15%로 여성(43.17%)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47.46%), 30~65세(44.46%), 29세 이하 (44.02%) 순임

■ 청소년 보충/야간자율학습 강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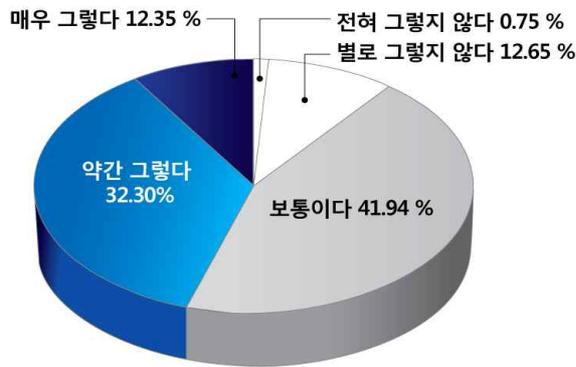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75	12.65	41.94	32.30	12.35	13.40	41.94	44.65	3.43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97	13.93	43.41	32.07	9.61	14.90	43.41	41.68	3.35
	군 지역	402	0.25	9.70	38.56	32.84	18.66	9.95	38.56	51.50	3.60
성별	남성	661	0.76	11.65	41.45	33.74	12.41	12.41	41.45	46.15	3.45
	여성	667	0.75	13.64	42.43	30.88	12.29	14.39	42.43	43.17	3.40
연령	~29세	209	0.48	13.88	41.63	28.23	15.79	14.36	41.63	44.02	3.45
	30~64세	1,001	0.50	12.49	42.56	33.07	11.39	12.99	42.56	44.46	3.42
	65세 이상	118	3.39	11.86	37.29	33.05	14.41	15.25	37.29	47.46	3.43

■ 청소년 학교 외부활동 제한

청소년들은 학교 외부활동을 제한 받고 있다

- '청소년들은 학교 외부활동을 제한 받고 있다'라는 문항에 긍정(39.99%)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5.81%)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49.76%)이 시 지역(35.74%)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41.00%로 여성(38.98%)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44.06%), 30~65세(40.16%), 29세 이하(36.85%) 순임

■ 청소년 학교 외부활동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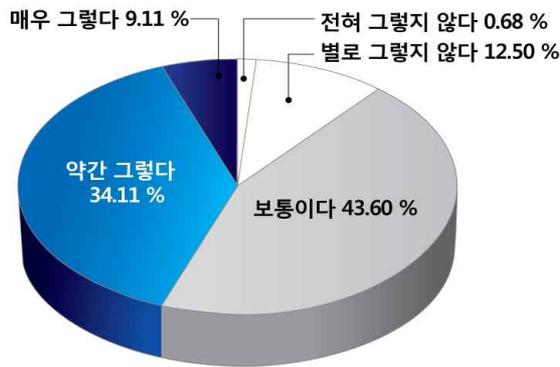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83	14.98	44.20	29.07	10.92	15.81	44.20	39.99	3.34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19	16.41	46.65	28.29	7.45	17.60	46.65	35.74	3.24
	군 지역	402	0.00	11.69	38.56	30.85	18.91	11.69	38.56	49.76	3.57
성별	남성	661	0.61	13.62	44.78	29.20	11.80	14.23	44.78	41.00	3.38
	여성	667	1.05	16.34	43.63	28.94	10.04	17.39	43.63	38.98	3.31
연령	~29세	209	1.91	17.70	43.54	26.32	10.53	19.61	43.54	36.85	3.26
	30~64세	1,001	0.60	14.89	44.36	29.67	10.49	15.49	44.36	40.16	3.35
	65세 이상	118	0.85	11.02	44.07	28.81	15.25	11.87	44.07	44.06	3.47

■ 청소년 학교운영 의사 반영 부족

학교의 운영은 청소년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 '학교의 운영은 청소년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문항에 긍정(43.22%)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3.18%)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48.75%)이 시 지역(40.82%)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46.90%로 여성(39.59%)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46.89%), 30~65세(42.76%) 65세 이상(46.68%) 순임

■ 청소년 학교운영 의사 반영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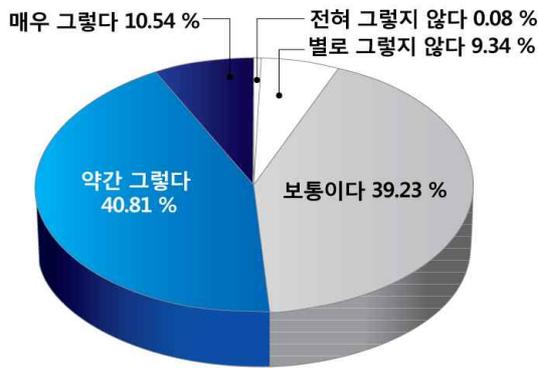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68	12.50	43.60	34.11	9.11	13.18	43.60	43.22	3.38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54	13.28	45.36	33.69	7.13	13.82	45.36	40.82	3.34
	군 지역	402	1.00	10.70	39.55	35.07	13.68	11.70	39.55	48.75	3.50
성별	남성	661	0.91	11.04	41.15	38.43	8.47	11.95	41.15	46.90	3.43
	여성	667	0.45	13.94	46.03	29.84	9.75	14.39	46.03	39.59	3.34
연령	~29세	209	0.00	9.09	44.02	34.45	12.44	9.09	44.02	46.89	3.50
	30~64세	1,001	0.90	12.79	43.56	34.17	8.59	13.69	43.56	42.76	3.37
	65세 이상	118	0.00	16.10	43.22	33.05	7.63	16.10	43.22	40.68	3.32

■ 장애인 전문 교육시설 부족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 교육시설이 부족하다

-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 교육시설이 부족하다'라는 문항에 긍정(51.35%)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9.42%)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52.98%)이 시 지역(50.65%)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55.98%로 여성(46.78%)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55.02%), 65세 이상(53.39%), 30~65세(50.35%) 순임

■ 장애인 전문 교육시설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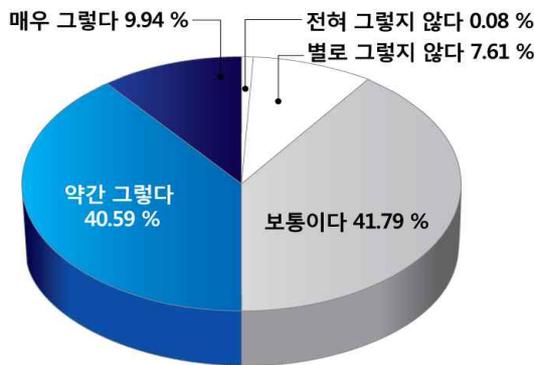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08	9.34	39.23	40.81	10.54	9.42	39.23	51.35	3.52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00	9.40	39.96	39.85	10.80	9.40	39.96	50.65	3.52
	군 지역	402	0.25	9.20	37.56	43.03	9.95	9.45	37.56	52.98	3.53
성별	남성	661	0.15	8.47	35.40	44.78	11.20	8.62	35.40	55.98	3.58
	여성	667	0.00	10.19	43.03	36.88	9.90	10.19	43.03	46.78	3.46
연령	~29세	209	0.48	8.61	35.89	39.23	15.79	9.09	35.89	55.02	3.61
	30~64세	1,001	0.00	9.79	39.86	40.56	9.79	9.79	39.86	50.35	3.50
	65세 이상	118	0.00	6.78	39.83	45.76	7.63	6.78	39.83	53.39	3.54

■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학업을 수행하는데 불편하다

-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학업을 수행하는데 불편하다'라는 문항에 긍정(50.53%)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7.69%)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52.49%)이 시 지역(49.68%)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54.61%로 여성(46.47%)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60.29%), 65세 이상(53.39%), 30~65세(48.15%) 순임

■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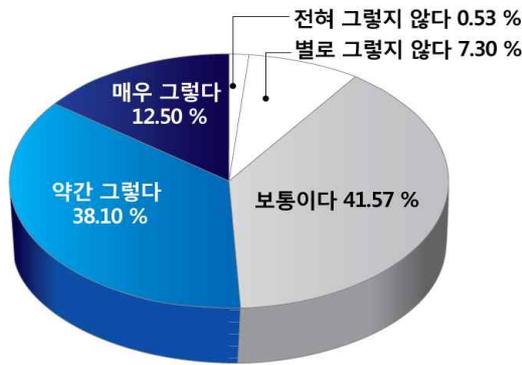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08	7.61	41.79	40.59	9.94	7.69	41.79	50.53	3.53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00	7.45	42.87	41.04	8.64	7.45	42.87	49.68	3.51
	군 지역	402	0.25	7.96	39.30	39.55	12.94	8.21	39.30	52.49	3.57
성별	남성	661	0.15	5.90	39.33	45.23	9.38	6.05	39.33	54.61	3.58
	여성	667	0.00	9.30	44.23	35.98	10.49	9.30	44.23	46.47	3.48
연령	~29세	209	0.48	7.66	31.58	49.76	10.53	8.14	31.58	60.29	3.62
	30~64세	1,001	0.00	7.79	44.06	37.76	10.39	7.79	44.06	48.15	3.51
	65세 이상	118	0.00	5.93	40.68	48.31	5.08	5.93	40.68	53.39	3.53

■ 다문화 여성 자녀 학교 차별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학교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

-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학교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문항에 긍정(46.31%)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0.31%)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시 지역(47.19%)이 군 지역(44.28%)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50.53%로 여성(42.13%)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52.64%), 65세 이상(52.54%), 30~65세(44.25%) 순임

■ 다문화 여성자녀 학교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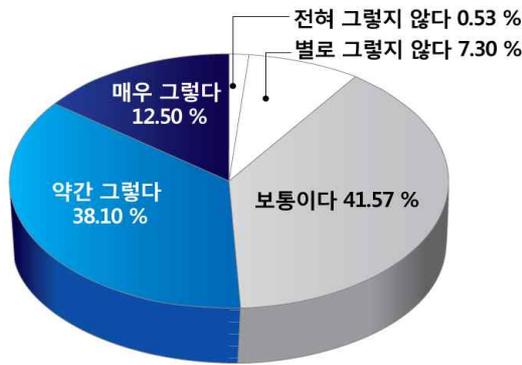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45	9.86	43.37	38.86	7.45	10.31	43.37	46.31	3.43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32	8.96	43.52	39.85	7.34	9.28	43.52	47.19	3.45
	군 지역	402	0.75	11.94	43.03	36.57	7.71	12.69	43.03	44.28	3.39
성별	남성	661	0.45	9.53	39.49	42.97	7.56	9.98	39.49	50.53	3.48
	여성	667	0.45	10.19	47.23	34.78	7.35	10.64	47.23	42.13	3.38
연령	~29세	209	1.44	8.13	37.80	44.98	7.66	9.57	37.80	52.64	3.49
	30~64세	1,001	0.30	10.79	44.66	37.16	7.09	11.09	44.66	44.25	3.40
	65세 이상	118	0.00	5.08	42.37	42.37	10.17	5.08	42.37	52.54	3.58

■ 다문화 여성 교육프로그램 부족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라는 문항에 긍정(50.60%)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7.83%)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시 지역(53.45%)이 군 지역(44.03%)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50.83%로 여성(50.37%)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56.78%), 29세 이하(50.72%), 30~65세(49.85%) 순임

■ 다문화 여성 교육프로그램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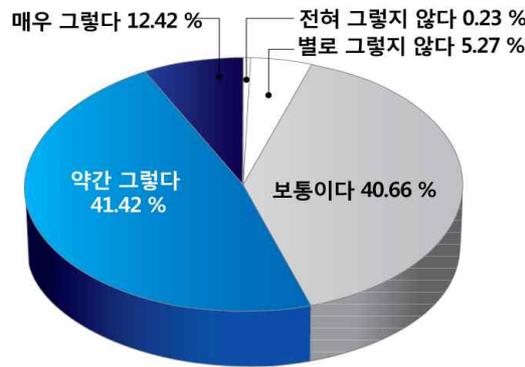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53	7.30	41.57	38.10	12.50	7.83	41.57	50.60	3.55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43	6.48	39.63	40.17	13.28	6.91	39.63	53.45	3.59
	군 지역	402	0.75	9.20	46.02	33.33	10.70	9.95	46.02	44.03	3.44
성별	남성	661	0.61	7.26	41.30	39.18	11.65	7.87	41.30	50.83	3.54
	여성	667	0.45	7.35	41.83	37.03	13.34	7.80	41.83	50.37	3.55
연령	~29세	209	0.00	9.09	40.19	34.45	16.27	9.09	40.19	50.72	3.58
	30~64세	1,001	0.70	7.39	42.06	37.56	12.29	8.09	42.06	49.85	3.53
	65세 이상	118	0.00	3.39	39.83	49.15	7.63	3.39	39.83	56.78	3.61

■ 외국인 노동자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 부족

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

-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라는 문항에 긍정(53.84%)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5.50%)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시 지역(56.69%)이 군 지역(47.26%)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55.97%로 여성(51.72%)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61.24%), 65세 이상(54.24%), 30~65세(52.25%) 순임

■ 외국인 노동자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 부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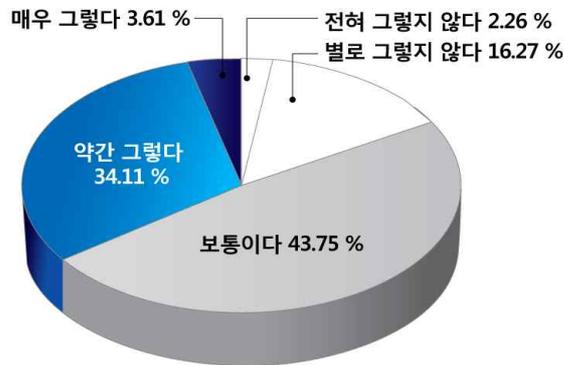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23	5.27	40.66	41.42	12.42	5.50	40.66	53.84	3.61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32	4.64	38.34	42.87	13.82	4.96	38.34	56.69	3.65
	군 지역	402	0.00	6.72	46.02	38.06	9.20	6.72	46.02	47.26	3.50
성별	남성	661	0.15	5.30	38.58	43.72	12.25	5.45	38.58	55.97	3.63
	여성	667	0.30	5.25	42.73	39.13	12.59	5.55	42.73	51.72	3.58
연령	~29세	209	0.00	7.18	31.58	45.45	15.79	7.18	31.58	61.24	3.70
	30~64세	1,001	0.30	5.09	42.36	39.86	12.39	5.39	42.36	52.25	3.59
	65세 이상	118	0.00	3.39	42.37	47.46	6.78	3.39	42.37	54.24	3.58

5) 사회참여

■ 노인 모임 장소 부족

경로당같이 노인들이 모여 사회현안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 '경로당같이 노인들이 모여 사회현안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라는 문항에 긍정(37.72%)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8.53%)으로 답한 응답자 보다 많음



- 군 지역(46.02%)이 시 지역(34.13%)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여성이 39.28%로 남성(36.15%)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57.62%), 30~65세(36.07%), 29세 이하(34.45%) 순임

■ 노인 모임 장소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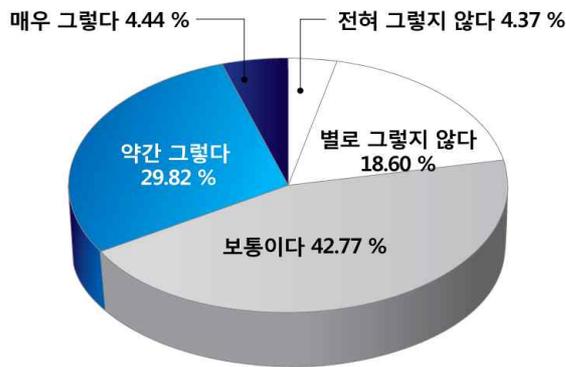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2.26	16.27	43.75	34.11	3.61	18.53	43.75	37.72	3.21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2.81	20.19	42.87	31.21	2.92	23.00	42.87	34.13	3.11
	군 지역	402	1.00	7.21	45.77	40.80	5.22	8.21	45.77	46.02	3.42
성별	남성	661	2.72	16.34	44.78	33.28	2.87	19.06	44.78	36.15	3.17
	여성	667	1.80	16.19	42.73	34.93	4.35	17.99	42.73	39.28	3.24
연령	~29세	209	3.35	17.22	44.98	32.06	2.39	20.57	44.98	34.45	3.13
	30~64세	1,001	2.20	16.68	45.05	32.77	3.30	18.88	45.05	36.07	3.18
	65세 이상	118	0.85	11.02	30.51	49.15	8.47	11.87	30.51	57.62	3.53

■ 노인 투표 참여 어려움

노인들의 이동거리 등의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 '노인들의 이동거리 등의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문항에 긍정(34.26%)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22.97%)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40.30%)이 시 지역(31.64%)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37.52%로 여성(31.04%)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50.85%), 30~65세(33.97%), 29세 이하(26.31%) 순임

■ 노인 투표 참여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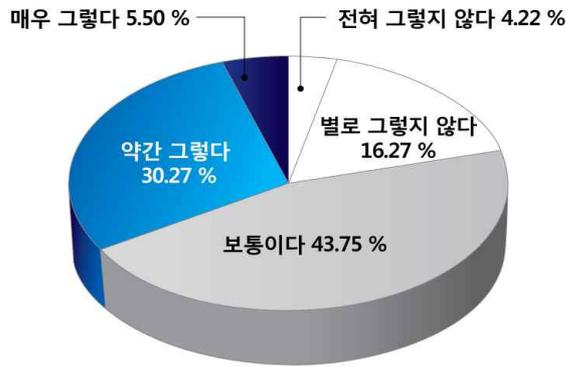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4.37	18.60	42.77	29.82	4.44	22.97	42.77	34.26	3.11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4.97	20.52	42.87	27.00	4.64	25.49	42.87	31.64	3.06
	군 지역	402	2.99	14.18	42.54	36.32	3.98	17.17	42.54	40.30	3.24
성별	남성	661	4.39	16.94	41.15	34.19	3.33	21.33	41.15	37.52	3.15
	여성	667	4.35	20.24	44.38	25.49	5.55	24.59	44.38	31.04	3.08
연령	~29세	209	6.70	23.44	43.54	18.18	8.13	30.14	43.54	26.31	2.98
	30~64세	1,001	4.40	18.28	43.36	30.07	3.90	22.68	43.36	33.97	3.11
	65세 이상	118	0.00	12.71	36.44	48.31	2.54	12.71	36.44	50.85	3.41

■ 노인 공공시설 이용 차별

노인들은 공공시설, 공공기관의 입장 및 이용에 차별을 받는다

- '노인들은 공공시설, 공공기관의 입장 및 이용에 차별을 받는다'라는 문항에 긍정(35.77%)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20.49%)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42.78%)이 시 지역(32.72%)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37.68%로 여성(33.89%)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50.85%), 29세 이하(33.76%), 30~65세(36.84%) 순임

■ 노인 공공시설 이용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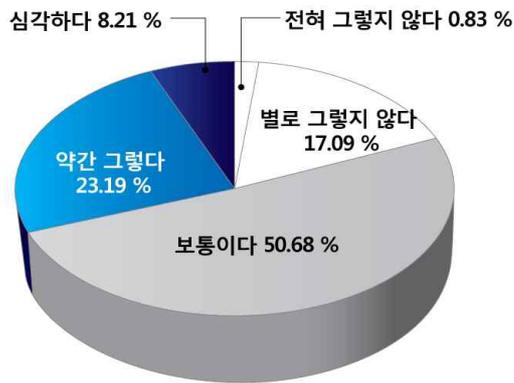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4.22	16.27	43.75	30.27	5.50	20.49	43.75	35.77	3.17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5.40	18.47	43.41	27.97	4.75	23.87	43.41	32.72	3.08
	군 지역	402	1.49	11.19	44.53	35.57	7.21	12.68	44.53	42.78	3.36
성별	남성	661	4.08	13.46	44.78	32.38	5.30	17.54	44.78	37.68	3.21
	여성	667	4.35	19.04	42.73	28.19	5.70	23.39	42.73	33.89	3.12
연령	~29세	209	5.26	21.53	36.36	30.62	6.22	26.79	36.36	36.84	3.11
	30~64세	1,001	4.30	15.78	46.15	28.47	5.29	20.08	46.15	33.76	3.15
	65세 이상	118	1.69	11.02	36.44	44.92	5.93	12.71	36.44	50.85	3.42

■ 청소년 외부 행사 참여 제한

청소년들은 외부집회나 행사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

- '청소년들은 외부집회나 행사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라는 문항에 긍정(31.40%)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7.92%)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39.55%)이 시 지역(27.86%)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32.99%로 여성(29.80%)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36.44%), 29세 이하(34.93%), 30~65세(30.07%) 순임

■ 청소년 외부 행사 참여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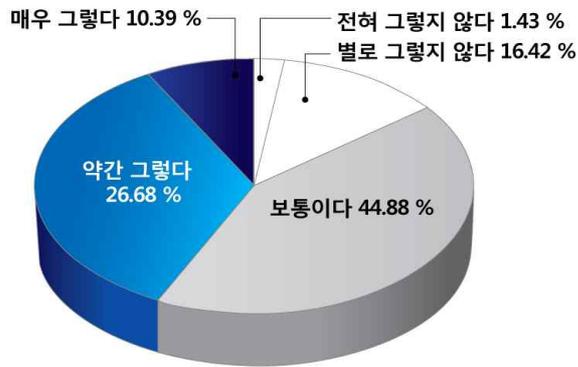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83	17.09	50.68	23.19	8.21	17.92	50.68	31.40	3.21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97	19.65	51.51	22.03	5.83	20.62	51.51	27.86	3.12
	군 지역	402	0.50	11.19	48.76	25.87	13.68	11.69	48.76	39.55	3.41
성별	남성	661	0.76	15.13	54.31	21.63	8.17	15.89	54.31	29.80	3.21
	여성	667	0.90	19.04	47.08	24.74	8.25	19.94	47.08	32.99	3.20
연령	~29세	209	0.96	17.70	46.41	25.36	9.57	18.66	46.41	34.93	3.25
	30~64세	1,001	0.90	17.48	51.55	22.28	7.79	18.38	51.55	30.07	3.19
	65세 이상	118	0.00	12.71	50.85	27.12	9.32	12.71	50.85	36.44	3.33

■ 청소년 학교 종교행사 강요

청소년들은 학교 측에서 정한 종교행사를 종종 강요 당한다

- '청소년들은 학교 측에서 정한 종교행사를 종종 강요 당한다'라는 문항에 긍정(37.27%)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7.85%)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46.76%)이 시 지역(33.15%)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39.48%로 여성(35.09%)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40.19%), 65세 이상(39.83%), 30~65세(36.39%) 순임

■ 청소년 학교 종교행사 강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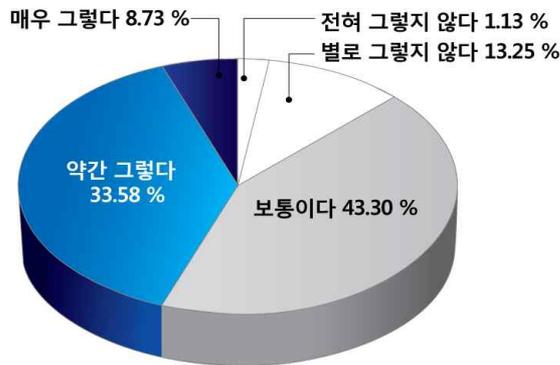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1.43	16.42	44.88	26.88	10.39	17.85	44.88	37.27	3.28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73	16.95	48.16	25.05	8.10	18.68	48.16	33.15	3.21
	군 지역	402	0.75	15.17	37.31	31.09	15.67	15.92	37.31	46.76	3.46
성별	남성	661	1.82	15.73	42.97	28.44	11.04	17.55	42.97	39.48	3.31
	여성	667	1.05	17.09	46.78	25.34	9.75	18.14	46.78	35.09	3.26
연령	~29세	209	3.35	17.22	39.23	25.84	14.35	20.57	39.23	40.19	3.31
	30~64세	1,001	1.10	16.18	46.35	26.77	9.59	17.28	46.35	36.36	3.28
	65세 이상	118	0.85	16.95	42.37	29.66	10.17	17.80	42.37	39.83	3.31

■ 장애인 투표 어려움

장애인들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다

- '장애인들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문항에 긍정(42.31%)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4.38%)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45.77%)이 시 지역(40.82%)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46.90%로 여성(37.79%)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45.93%), 65세 이상(43.22%), 30~65세(41.46%) 순임

■ 장애인 투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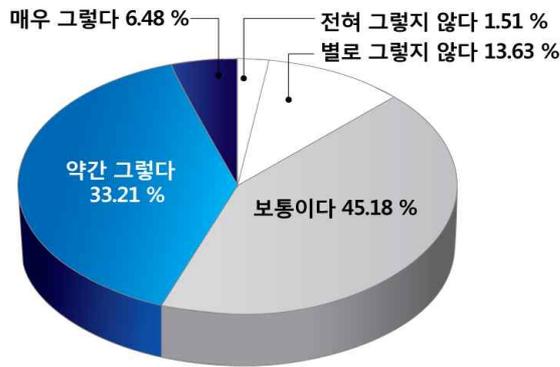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1.13	13.25	43.30	33.58	8.73	14.38	43.30	42.31	3.36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08	13.61	44.49	32.40	8.42	14.69	44.49	40.82	3.33
	군 지역	402	1.24	12.44	40.55	36.32	9.45	13.68	40.55	45.77	3.40
성별	남성	661	0.91	10.89	41.30	37.22	9.68	11.80	41.30	46.90	3.44
	여성	667	1.35	15.59	45.28	29.99	7.80	16.94	45.28	37.79	3.27
연령	~29세	209	0.48	12.44	41.15	33.01	12.92	12.92	41.15	45.93	3.45
	30~64세	1,001	1.20	12.89	44.46	33.57	7.89	14.09	44.46	41.46	3.34
	65세 이상	118	1.69	17.80	37.29	34.75	8.47	19.49	37.29	43.22	3.31

■ 장애인 대중시설 출입 거절

장애인들은 종종 식당이나 목욕탕의 출입을 거절 당한다

- '장애인들은 종종 식당이나 목욕탕의 출입을 거절 당한다'라는 문항에 긍정(39.69%)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5.14%)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44.52%)이 시 지역(37.58%)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42.51%로 여성(36.89%)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44.50%), 65세 이상(43.22%), 30~65세(38.26%) 순임

■ 장애인 대중시설 출입 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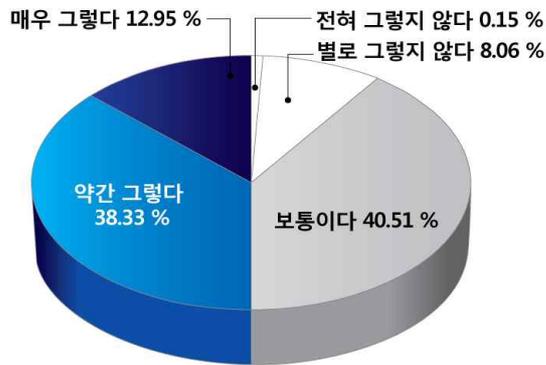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1.51	13.63	45.18	33.21	6.48	15.14	45.18	39.69	3.30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73	14.15	46.54	31.53	6.05	15.88	46.54	37.58	3.26
	군 지역	402	1.00	12.44	42.04	37.06	7.46	13.44	42.04	44.52	3.38
성별	남성	661	1.66	11.50	44.33	36.61	5.90	13.16	44.33	42.51	3.34
	여성	667	1.35	15.74	46.03	29.84	7.05	17.09	46.03	36.89	3.25
연령	~29세	209	1.44	15.31	38.76	34.93	9.57	16.75	38.76	44.50	3.36
	30~64세	1,001	1.30	14.09	46.35	32.47	5.79	15.39	46.35	38.26	3.27
	65세 이상	118	3.39	6.78	46.61	36.44	6.78	10.17	46.61	43.22	3.36

■ 장애인 공무처리 어려움

장애인들은 이동편의시설의 부족으로 공무를 처리하기 힘들다

- '장애인들은 이동편의시설의 부족으로 공무를 처리하기 힘들다'라는 문항에 긍정(51.28%)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8.21%)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55.72%)이 시 지역(49.35%)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53.85%로 여성(48.72%)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55.50%), 65세 이상(53.39%), 30~65세(50.15%) 순임

■ 장애인 공무처리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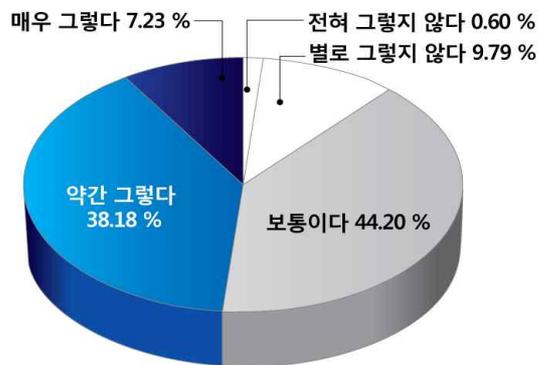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15	8.06	40.51	38.33	12.95	8.21	40.51	51.28	3.56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00	8.21	42.44	36.07	13.28	8.21	42.44	49.35	3.54
	군 지역	402	0.50	7.71	36.07	43.53	12.19	8.21	36.07	55.72	3.59
성별	남성	661	0.15	7.56	38.43	41.75	12.10	7.71	38.43	53.85	3.58
	여성	667	0.15	8.55	42.58	34.93	13.79	8.70	42.58	48.72	3.54
연령	~29세	209	0.00	8.61	35.89	43.06	12.44	8.61	35.89	55.50	3.59
	30~64세	1,001	0.20	7.89	41.76	36.96	13.19	8.09	41.76	50.15	3.55
	65세 이상	118	0.00	8.47	38.14	41.53	11.86	8.47	38.14	53.39	3.57

■ 다문화 여성 마을 의사결정 참여 어려움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반상회 등 마을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힘들다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은 반상회 등 마을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힘들다'라는 문항에 긍정(45.41%)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10.39%)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군 지역(46.52%)이 시 지역(44.93%)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48.41%로 여성(42.43%)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30~65세(45.75%), 29세 이하(44.98%), 65세 이상(43.22%) 순임

■ 다문화 여성 마을 의사결정 참여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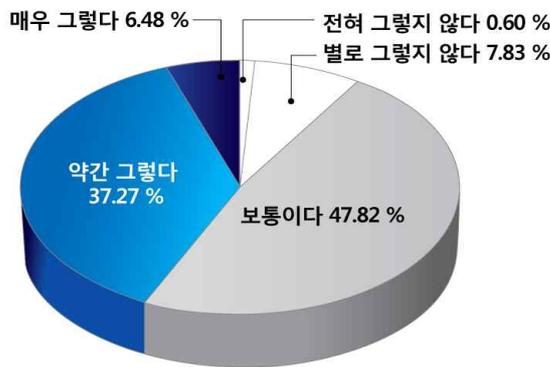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60	9.79	44.20	38.18	7.23	10.39	44.20	45.41	3.42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54	9.72	44.82	38.23	6.70	10.26	44.82	44.93	3.41
	군 지역	402	0.75	9.95	42.79	38.06	8.46	10.70	42.79	46.52	3.44
성별	남성	661	0.61	9.08	41.91	40.85	7.56	9.69	41.91	48.41	3.46
	여성	667	0.60	10.49	46.48	35.53	6.90	11.09	46.48	42.43	3.38
연령	~29세	209	0.96	13.40	40.67	38.76	6.22	14.36	40.67	44.98	3.36
	30~64세	1,001	0.60	8.99	44.66	38.16	7.59	9.59	44.66	45.75	3.43
	65세 이상	118	0.00	10.17	46.61	37.29	5.93	10.17	46.61	43.22	3.39

■ 다문화 여성 선거참여 어려움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언어 등의 이유를 투표권이 있음에도 선거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은 언어 등의 이유를 투표권이 있음에도 선거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라는 문항에 긍정(43.75%)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8.43%)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시 지역(45.25%)이 군 지역(40.30%)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47.96%로 여성(39.58%)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49.15%), 29세 이하(47.85%), 30~65세(42.25%) 순임

■ 다문화 여성 선거참여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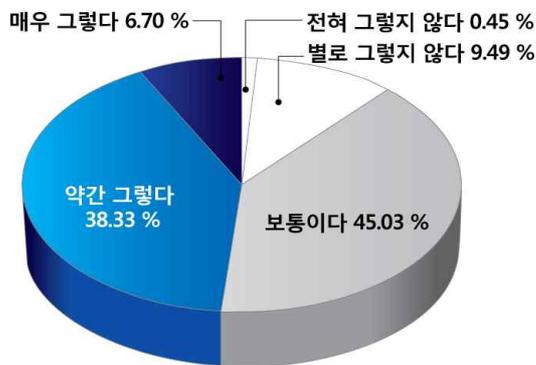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60	7.83	47.82	37.27	6.48	8.43	47.82	43.75	3.41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54	7.56	46.65	39.42	5.83	8.10	46.65	45.25	3.42
	군 지역	402	0.75	8.46	50.50	32.34	7.96	9.21	50.50	40.30	3.38
성별	남성	661	0.45	5.45	46.14	42.06	5.90	5.90	46.14	47.96	3.48
	여성	667	0.75	10.19	49.48	32.53	7.05	10.94	49.48	39.58	3.35
연령	~29세	209	0.48	7.66	44.02	42.11	5.74	8.14	44.02	47.85	3.45
	30~64세	1,001	0.60	8.19	48.95	35.96	6.29	8.79	48.95	42.25	3.39
	65세 이상	118	0.85	5.08	44.92	39.83	9.32	5.93	44.92	49.15	3.52

■ 다문화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종교 무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과의 외국인 노동자의 종교는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다.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과의 외국인 노동자의 종교는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문항에 긍정(45.03%)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9.94%)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시 지역(45.79%)이 군 지역(43.28%)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47.66%로 여성(42.43%)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55.09%), 29세 이하(48.80%), 30~65세(43.05%) 순임

■ 다문화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종교 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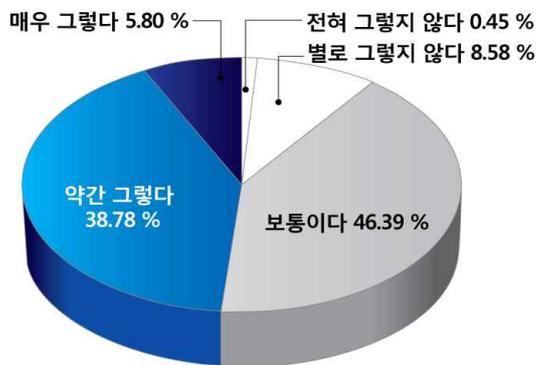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45	9.49	45.03	38.33	6.70	9.94	45.03	45.03	3.41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54	8.64	45.03	38.88	6.91	9.18	45.03	45.79	3.43
	군 지역	402	0.25	11.44	45.02	37.06	6.22	11.69	45.02	43.28	3.38
성별	남성	661	0.76	8.02	43.57	41.15	6.51	8.78	43.57	47.66	3.45
	여성	667	0.15	10.94	46.48	35.53	6.90	11.09	46.48	42.43	3.38
연령	~29세	209	0.00	10.05	41.15	43.06	5.74	10.05	41.15	48.80	3.44
	30~64세	1,001	0.60	9.99	46.35	36.56	6.49	10.59	46.35	43.05	3.38
	65세 이상	118	0.00	4.24	40.68	44.92	10.17	4.24	40.68	55.09	3.61

■ 다문화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불심검문 경험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은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한 불심검문을 등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 '다문화당한 불심검문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문가족 이주여성들과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항에 긍정(44.58%)으로 답한 응답자가 부정(9.03%)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음



- 시 지역(46.76%)이 군 지역(39.55%)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48.11%로 여성(41.08%)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48.81%), 30~65세(43.85%), 65세 이상(43.22%) 순임

■ 다문화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불심검문 경험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45	8.58	46.39	38.78	5.80	9.03	46.39	44.58	3.41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43	7.13	45.68	40.71	6.05	7.56	45.68	46.76	3.45
	군 지역	402	0.50	11.94	48.01	34.33	5.22	12.44	48.01	39.55	3.32
성별	남성	661	0.30	9.23	42.36	42.97	5.14	9.53	42.36	48.11	3.43
	여성	667	0.60	7.95	50.37	34.63	6.45	8.55	50.37	41.08	3.38
연령	~29세	209	0.48	12.44	38.28	41.15	7.66	12.92	38.28	48.81	3.43
	30~64세	1,001	0.50	8.59	47.05	38.06	5.79	9.09	47.05	43.85	3.40
	65세 이상	118	0.00	1.69	55.08	40.68	2.54	1.69	55.08	43.22	3.44

4. 충남의 인권 교육 및 행정

1) 인권교육

■ 인권교육과 의향

귀하는 지금까지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귀하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95%에 불과한 반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7.05%로 매우 높음
- 거주 지역별로는 시 지역의 경험이 15.77%로 군 지역(6.47%) 보다 높음
- 성별로는 비슷한 수준이나 남성이 13.92%로 여성(11.99%) 보다 약간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28.71%로 가장 높고, 65세 이상(6.78%)이 가장 낮음
- 인권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5.14%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34.8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인권교육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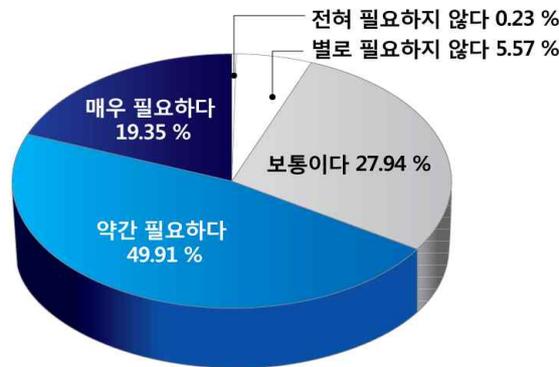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인권교육 경험		인권교육 의향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전 체		1,328	12.95	87.05	65.14	34.86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5.77	84.23	64.36	35.64
	군 지역	402	6.47	93.53	66.92	33.08
성별	남성	661	13.92	86.08	65.20	34.80
	여성	667	11.99	88.01	65.07	34.93
연령	~29세	209	28.71	71.29	69.86	30.14
	30~64세	1,001	10.39	89.61	65.93	34.07
	65세 이상	118	6.78	93.22	50.00	50.00

■ 인권교육의 필요성

귀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평균 3.80으로 긍정적인 견해가 66.26%로 부정적인 견해 5.80% 보다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군 지역이 평균 3.84로 시 지역보다 약간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인권교육의 필요성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필요 하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23	5.57	27.94	46.91	19.35	5.80	27.94	66.26	3.80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22	6.37	28.62	45.03	19.76	6.59	28.62	64.79	3.78
	군 지역	402	0.25	3.73	26.37	51.24	18.41	3.98	26.37	69.65	3.84
성별	남성	661	0.15	5.60	27.84	45.54	20.88	5.75	27.84	66.42	3.81
	여성	667	0.30	5.55	28.04	48.28	17.84	5.85	28.04	66.12	3.78
연령	~29세	209	0.00	4.78	22.97	50.24	22.01	4.78	22.97	72.25	3.89
	30~64세	1,001	0.20	5.49	28.47	46.15	19.68	5.69	28.47	65.83	3.80
	65세 이상	118	0.85	7.63	32.20	47.46	11.86	8.48	32.20	59.32	3.62

■ 인권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귀하는 충청남도에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충청남도에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사람으로는 도지사(15.5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충남 국회의원(13.86), 도 및 시군의원(11.67%), 경찰(9.19%), 고위공무원(9.11%) 순으로 나타났음
- 인권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1순위와 2순위의 합으로는 충남국회의원(15.71), 단체장(13.13%), 도 및 시군의원(11.52%), 고위공무원(8.68%) 순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인권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1순위) (단위: %)

		사래수 (명)	도지사 시장 군수	충남도 국회의 원	도의원 시군의 원	관검사	변호사	경찰	실국장 고위 공무원	교사 교수	군 지휘관	기업 CEO	언론인	시민단 체 활동가	교도관	복지시 설 종사자	일반 충남 도민
전 체		1,328	15.51	13.86	11.67	8.28	2.71	9.19	9.11	4.59	1.13	6.10	3.61	3.92	0.75	3.16	6.40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2.42	15.12	10.91	9.07	2.48	9.83	10.04	4.75	1.19	6.59	3.56	3.89	0.65	3.02	6.48
	군 지역	402	22.64	10.95	13.43	6.47	3.23	7.71	6.97	4.23	1.00	4.98	3.73	3.98	1.00	3.48	6.22
성별	남성	661	15.28	13.31	11.20	10.89	3.03	9.38	10.29	4.08	1.21	5.30	3.03	3.48	0.76	2.87	5.90
	여성	667	15.74	14.39	12.14	5.70	2.40	9.00	7.95	5.10	1.05	6.90	4.20	4.35	0.75	3.45	6.90
연령	~29세	209	8.61	17.70	14.35	7.66	3.35	14.35	10.05	4.31	0.00	5.74	3.35	1.91	0.48	4.78	3.35
	30~64세	1,001	15.38	13.09	11.19	8.49	2.80	7.89	9.09	4.80	1.50	6.69	3.70	4.20	0.90	2.80	7.49
	65세 이상	118	28.81	13.56	11.02	7.63	0.85	11.02	7.63	3.39	0.00	1.69	3.39	5.08	0.00	3.39	2.54

■ 인권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1순위+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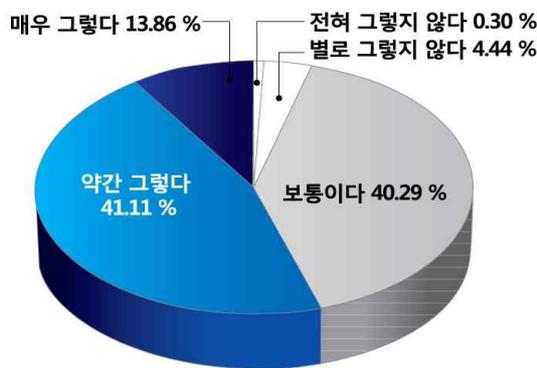
		사래수 (명)	도지사 시장 군수	충남도 국회의 원	도의원 시군의 원	관검사	변호사	경찰	실국장 고위 공무원	교사 교수	군 지휘관	기업 CEO	언론인	시민단 체 활동가	교도관	복지시 설 종사자	일반 충남 도민
전 체		1,328	13.13	15.71	11.52	8.01	2.74	8.58	8.68	4.24	1.41	5.60	4.27	4.59	1.28	3.31	6.93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1.56	16.56	10.66	8.89	2.56	9.11	9.40	4.21	1.55	6.05	4.21	4.21	1.22	3.17	6.66
	군 지역	402	16.75	13.76	13.52	5.97	3.15	7.38	7.05	4.31	1.08	4.56	4.39	5.47	1.41	3.65	7.55
성별	남성	661	13.01	15.03	10.84	10.09	2.87	8.72	9.48	4.08	1.77	5.14	3.88	4.29	1.36	3.18	6.25
	여성	667	13.24	16.39	12.19	5.95	2.60	8.45	7.90	4.40	1.05	6.05	4.65	4.90	1.20	3.45	7.60
연령	~29세	209	8.93	18.98	14.19	7.02	2.87	11.64	8.93	4.15	0.96	5.9	4.47	1.91	0.80	4.94	4.31
	30~64세	1,001	13.09	15.02	11.22	8.26	2.76	7.83	8.62	4.26	1.67	5.89	4.23	4.96	1.53	2.96	7.69
	65세 이상	118	20.9	15.82	9.32	7.63	2.26	9.6	8.76	4.24	0.00	2.54	4.24	6.21	0.00	3.39	5.08

2) 인권교육의 주체와 프로그램

■ 정규교과과정 포함

인권교육은 공교육의 정규교과과정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 인권교육은 공교육의 정규교과과정에서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평균 3.64이며 긍정적인 응답은 54.97%로 부정적인 견해 4.74% 보다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과 성별에서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3.73으로 가장 긍정적이었음



■ 인권교육의 정규교과과정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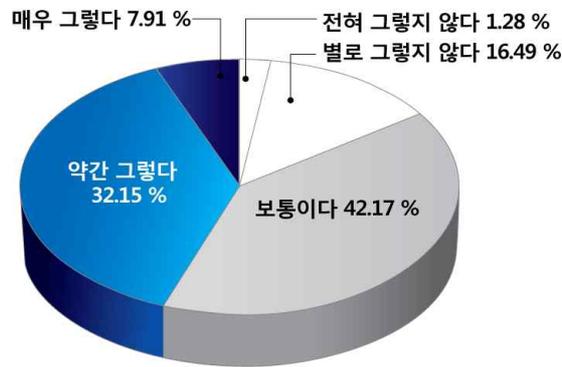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30	4.44	40.29	41.11	13.86	4.74	40.29	54.97	3.64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32	5.94	36.93	43.20	13.61	6.26	36.93	56.81	3.64
	군 지역	402	0.25	1.00	48.01	36.32	14.43	1.25	48.01	50.75	3.64
성별	남성	661	0.30	4.84	40.24	39.64	14.98	5.14	40.24	54.62	3.64
	여성	667	0.30	4.05	40.33	42.58	12.74	4.35	40.33	55.32	3.63
연령	~29세	209	0.00	2.87	36.36	45.45	15.31	2.87	36.36	60.76	3.73
	30~64세	1,001	0.40	4.60	41.06	40.16	13.79	5.00	41.06	53.95	3.62
	65세 이상	118	0.00	5.93	40.68	41.53	11.86	5.93	40.68	53.39	3.59

■ 시민단체의 인권교육 담당

인권교육은 시민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좋다

- 인권교육을 시민단체가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균 3.29이며 긍정적인 응답은 40.06%로 부정적인 견해 17.77%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거주지역과 성별에서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29세 이하가 3.47로 가장 긍정적이었음



■ 시민단체의 인권교육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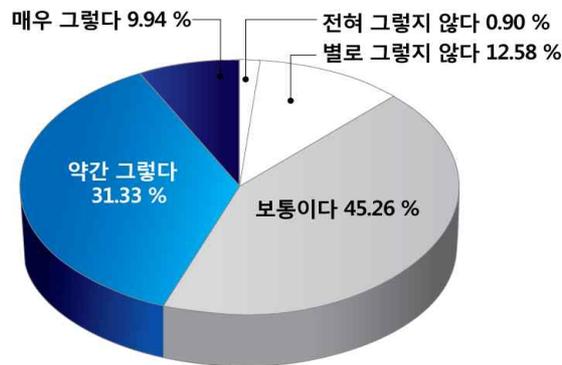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1.28	16.49	42.17	32.15	7.91	17.77	42.17	40.06	3.29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08	16.95	40.93	33.26	7.78	18.03	40.93	41.04	3.30
	군 지역	402	1.74	15.42	45.02	29.60	8.21	17.16	45.02	37.81	3.27
성별	남성	661	1.66	17.10	40.70	33.28	7.26	18.76	40.70	40.54	3.27
	여성	667	0.90	15.89	43.63	31.03	8.55	16.79	43.63	39.58	3.30
연령	~29세	209	0.48	11.48	39.71	37.32	11.00	11.96	39.71	48.32	3.47
	30~64세	1,001	1.50	17.58	41.36	31.67	7.89	19.08	41.36	39.56	3.27
	65세 이상	118	0.85	16.10	53.39	27.12	2.54	16.95	53.39	29.66	3.14

■ 지방정부의 인권교육 담당

인권교육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좋다

- 인권교육을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균 3.37이었으며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41.27%로 부정적인 견해 13.48% 보다 높게 나타남
- 거주 지역별로는 시 지역이 3.43으로 군 지역 보다 긍정적이었으며 남성이 3.41로 여성 보다 긍정적이었음.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3.63으로 가장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



■ 지방정부의 인권교육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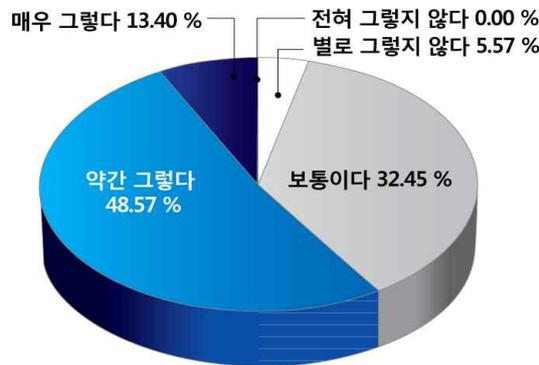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90	12.58	45.26	31.33	9.94	13.48	45.26	41.27	3.37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65	10.80	43.95	34.45	10.15	11.45	43.95	44.60	3.43
	군 지역	402	1.49	16.67	48.26	24.13	9.45	18.16	48.26	33.58	3.23
성별	남성	661	1.06	10.59	44.48	34.19	9.68	11.65	44.48	43.87	3.41
	여성	667	0.75	14.54	46.03	28.49	10.19	15.29	46.03	38.68	3.33
연령	~29세	209	0.48	11.00	30.62	41.15	16.75	11.48	30.62	57.90	3.63
	30~64세	1,001	0.90	11.39	47.85	30.57	9.29	12.29	47.85	39.86	3.36
	65세 이상	118	1.69	25.42	49.15	20.34	3.39	27.11	49.15	23.73	2.98

■ 모든 도민대상 인권교육 시행

모든 도민에게 인권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3.7로 긍정적인 응답이 61.97%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정적인 견해는 5.57%에 불과함
- 이러한 응답수준은 거주지역과 성별, 연령별에서 모두 비슷하게 나타남



■ 모든 도민대상 인권교육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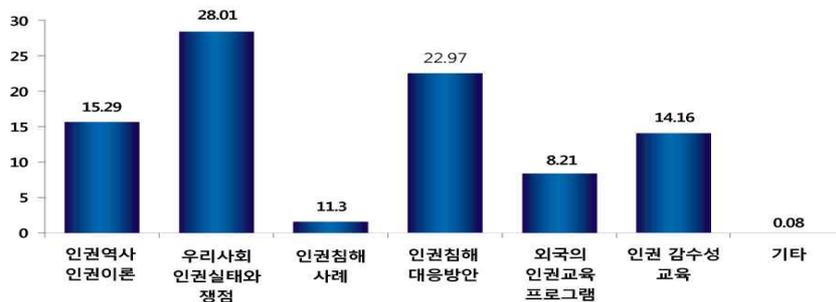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00	5.57	32.45	48.57	13.40	5.57	32.45	61.97	3.70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00	5.94	34.02	45.57	14.47	5.94	34.02	60.04	3.69
	군 지역	402	0.00	4.73	28.86	55.47	10.95	4.73	28.86	66.42	3.73
성별	남성	661	0.00	5.14	33.13	49.77	11.95	5.14	33.13	61.72	3.69
	여성	667	0.00	6.00	31.78	47.38	14.84	6.00	31.78	62.22	3.71
연령	~29세	209	0.00	2.87	23.92	56.94	16.27	2.87	23.92	73.21	3.87
	30~64세	1,001	0.00	5.00	35.46	46.65	12.89	5.00	35.46	59.54	3.67
	65세 이상	118	0.00	15.25	22.03	50.00	12.71	15.25	22.03	62.71	3.60

■ 인권교육 프로그램 선호

귀하는 인권교육이 실행된다면 다음의 교육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인권교육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우리사회의 인권 실태와 쟁점’이 28.01%로 가장 많았으며 ‘인권침해 대응방안’ 22.97%, ‘인권역사 및 인권이론’ 15.29%,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 14.16% 순으로 나타났음



■ 인권교육 프로그램 선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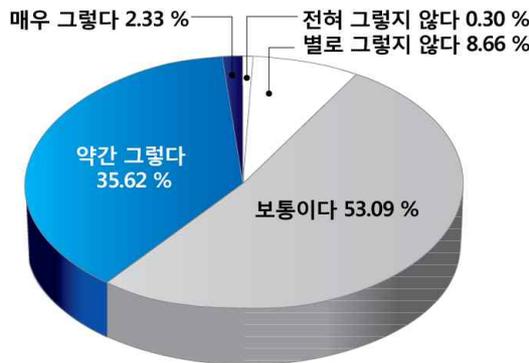
		사례수 (명)	인권역사 인권이론	우리사회 인권실태와 쟁점	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 대응방안	외국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	기타
전 체		1,328	15.29	28.01	11.30	22.97	8.21	14.16	0.08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5.33	27.11	12.42	24.84	7.24	12.96	0.11
	군 지역	402	15.17	30.10	8.71	18.66	10.45	16.92	0.00
성별	남성	661	15.28	28.29	10.14	24.51	8.77	12.86	0.15
	여성	667	15.29	27.74	12.44	21.44	7.65	15.44	0.00
연령	~29세	209	16.27	23.92	14.35	20.57	6.22	18.66	0.00
	30~64세	1,001	14.79	27.87	10.79	24.28	8.49	13.69	0.10
	65세 이상	118	17.80	36.44	10.17	16.10	9.32	10.17	0.00

2) 충청남도의 인권 행정과 보장

■ 충남의 인권보장 수준

충청남도의 행정은 시민의 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다

- 충남의 행정은 시민의 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균 3.31로 긍정적인 견해가 37.95%로 부정적인 견해 8.96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09%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군지역이 3.44로 시지역보다 긍정적이었으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



■ 충남의 인권보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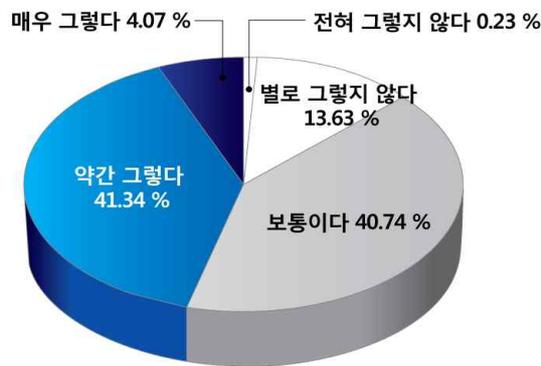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30	8.66	53.09	35.62	2.33	8.96	53.09	37.95	3.31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43	10.48	54.00	33.37	1.73	10.91	54.00	35.10	3.25
	군 지역	402	0.00	4.48	51.00	40.80	3.73	4.48	51.00	44.53	3.44
성별	남성	661	0.45	9.38	54.01	33.89	2.27	9.83	54.01	36.16	3.28
	여성	667	0.15	7.95	52.17	37.33	2.40	8.10	52.17	39.73	3.34
연령	~29세	209	0.48	11.96	49.76	33.97	3.83	12.44	49.76	37.80	3.29
	30~64세	1,001	0.30	8.39	54.25	34.87	2.20	8.69	54.25	37.07	3.30
	65세 이상	118	0.00	5.08	49.15	44.92	0.85	5.08	49.15	45.77	3.42

■ 충남의 인권증진 노력

충청남도는 도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충청남도는 도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균 3.35로 긍정적인 견해가 45.41%로 부정적인 견해 13.86%보다 높게 나타남
- 거주 지역별로는 군지역이 3.42로 시지역보다 긍정적이었으며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이 3.39로 남성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



■ 충남의 인권증진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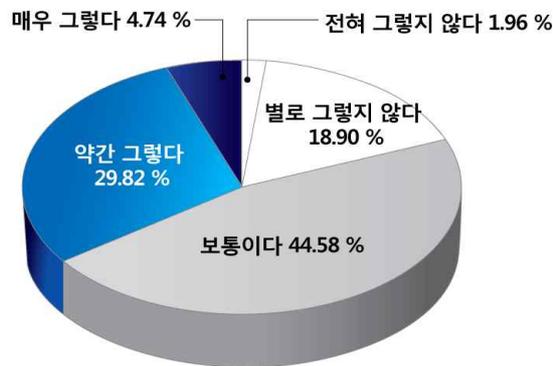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23	13.63	40.74	41.34	4.07	13.86	40.74	45.41	3.35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22	14.36	40.93	41.68	2.81	14.58	40.93	44.49	3.33
	군 지역	402	0.25	11.94	40.30	40.55	6.97	12.19	40.30	47.52	3.42
성별	남성	661	0.30	14.83	41.60	39.79	3.48	15.13	41.60	43.27	3.31
	여성	667	0.15	12.44	39.88	42.88	4.65	12.59	39.88	47.53	3.39
연령	~29세	209	0.00	15.31	44.50	34.93	5.26	15.31	44.50	40.19	3.30
	30~64세	1,001	0.30	12.99	39.86	43.46	3.40	13.29	39.86	46.86	3.37
	65세 이상	118	0.00	16.10	41.53	34.75	7.63	16.10	41.53	42.38	3.34

■ 충남의 인권증진 제도 수준

충청남도는 도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법과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 충남은 도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법과 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균 3.16으로 긍정적인 견해가 34.56%로 부정적 견해 20.86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문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 견해가 높게 나타남
- 군 지역이 3.31로 시 지역보다 긍정적이었으며 여성과 65세 이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



■ 충남의 인권증진 제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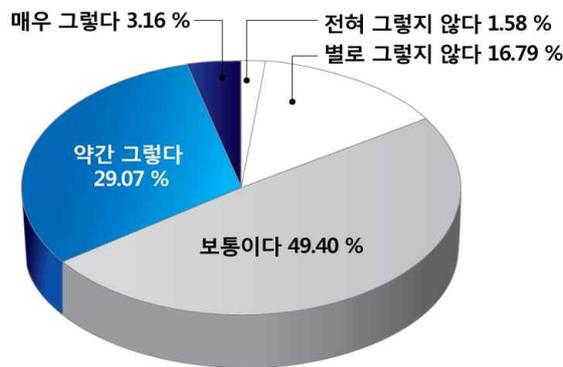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1.96	18.90	44.58	29.82	4.74	20.86	44.58	34.56	3.16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2.59	20.30	45.25	27.97	3.89	22.89	45.25	31.86	3.10
	군 지역	402	0.50	15.67	43.03	34.08	6.72	16.17	43.03	40.80	3.31
성별	남성	661	3.03	19.52	44.78	27.38	5.30	22.55	44.78	32.68	3.12
	여성	667	0.90	18.29	44.38	32.23	4.20	19.19	44.38	36.43	3.21
연령	~29세	209	2.87	25.36	37.32	26.32	8.13	28.23	37.32	34.45	3.11
	30~64세	1,001	1.90	17.68	46.05	30.17	4.20	19.58	46.05	34.37	3.17
	65세 이상	118	0.85	17.80	44.92	33.05	3.39	18.65	44.92	36.44	3.20

■ 인권증진을 위한 도민/시민단체 협력

충청남도는 도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도민 및 시민단체들과 협력을 잘 하고 있다.

- 충청남도가 도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잘 이루어내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균 3.15로 긍정적인 견해가 32.23%로 부정적인 견해 18.37% 보다는 높았으나 부정적 견해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군 지역이 3.27로 시 지역보다 긍정적이었으며 65세 이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



■ 충청도청의 인권증진을 위한 도민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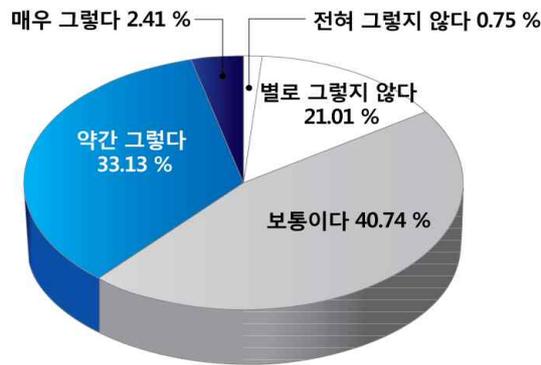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1.58	16.79	49.40	29.07	3.16	18.37	49.40	32.23	3.15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62	19.22	48.60	28.29	2.27	20.84	48.60	30.56	3.10
	군 지역	402	1.49	11.19	51.24	30.85	5.22	12.68	51.24	36.07	3.27
성별	남성	661	1.66	17.25	49.02	28.74	3.33	18.91	49.02	32.07	3.15
	여성	667	1.50	16.34	49.78	29.39	3.00	17.84	49.78	32.39	3.16
연령	~29세	209	0.00	23.92	39.23	33.97	2.87	23.92	39.23	36.84	3.16
	30~64세	1,001	2.10	15.58	51.75	27.17	3.40	17.68	51.75	30.57	3.14
	65세 이상	118	0.00	14.41	47.46	36.44	1.69	14.41	47.46	38.13	3.25

■ 인권증진을 위한 타시도와 협력

충청남도는 도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다른 시도와 잘 협력하고 있다.

- 충청남도가 도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다른 시도와 협력을 잘 이루어내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균 3.15로 긍정적인 견해가 35.54%로 부정적인 견해 21.76% 보다는 높았으나 부정적 견해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군 지역이 3.28로 시 지역보다 긍정적이었으며 비슷한 수준이지만 65세 이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



■ 인권증진을 위한 타시도와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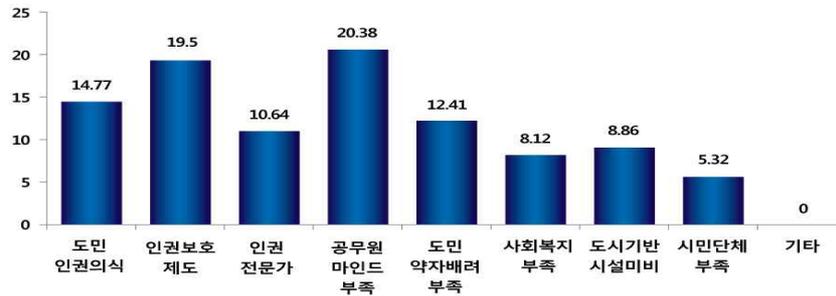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75	21.01	42.70	33.13	2.41	21.76	42.70	35.54	3.15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86	23.65	41.68	32.29	1.51	24.51	41.68	33.80	3.10
	군 지역	402	0.50	14.93	45.02	35.07	4.48	15.43	45.02	39.55	3.28
성별	남성	661	0.91	21.18	42.81	32.68	2.42	22.09	42.81	35.10	3.15
	여성	667	0.60	20.84	42.58	33.58	2.40	21.44	42.58	35.98	3.16
연령	~29세	209	0.00	22.97	38.28	37.32	1.44	22.97	38.28	38.76	3.17
	30~64세	1,001	0.80	20.98	43.46	32.37	2.40	21.78	43.46	34.77	3.15
	65세 이상	118	1.69	17.80	44.07	32.20	4.24	19.49	44.07	36.44	3.19

■ 충남 행정의 인권보장 수준과 부족한 점

충청남도의 행정은 시민의 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다

- 충남의 행정은 도민의 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가 49.32%, 부정적 견해 50.68%로 나타남
- 충청남도가 인권보장을 위해 부족한 점으로는 '공무원의 마인드 부족'이 20.38로 가장 많았으며 '인권보호제도' 19.50%, '도민 인권의식' 14.77%, '도민 약자배려 부족' 12.41% 순으로 나타남



■ 인권 보장 수준 및 부족한 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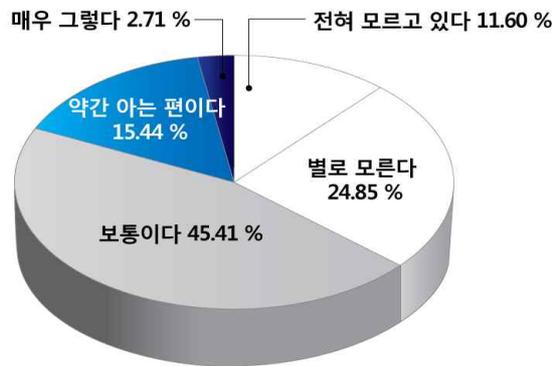
	사례수 (명)	인권보장		(부정일 경우) 부족한 점									
		긍정	부정	도민 인권의식	인권보호 제도	인권 전문가	공무원 마인드 부족	도민 약자배려 부족	사회복지 부족	도시기반 시설미비	시민단체 부족	기타	
전 체	1,328	49.32	50.68	14.77	19.50	10.64	20.38	12.41	8.12	8.86	5.32	0.00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47.95	52.05	15.43	20.58	10.49	19.96	13.79	7.20	7.41	5.14	0.00
	군 지역	402	52.49	47.51	13.09	16.75	10.99	21.47	8.90	10.47	12.57	5.76	0.00
성별	남성	661	45.23	54.77	13.50	20.66	10.19	23.42	10.74	7.99	9.37	4.13	0.00
	여성	667	53.37	46.63	16.24	18.15	11.15	16.88	14.33	8.28	8.28	6.69	0.00
연령	~29세	209	33.01	66.99	20.71	26.43	10.71	15.71	10.00	6.43	5.00	5.00	0.00
	30~64세	1,001	51.65	48.35	13.93	17.83	10.86	22.34	11.68	7.58	10.04	5.74	0.00
	65세 이상	118	58.47	41.53	6.12	16.33	8.16	14.29	26.53	18.37	8.16	2.04	0.00

2) 충청남도의 인권제도 인식과 협력

■ 인권조례제정

인권조례 제정 인식

- 인권조례 제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균 2.73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45%인 반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15%에 불과하였음
- 지역별로는 시 지역이 2.61로 군 지역 보다 낮았으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인지율이 가장 낮았음



■ 인권조례제정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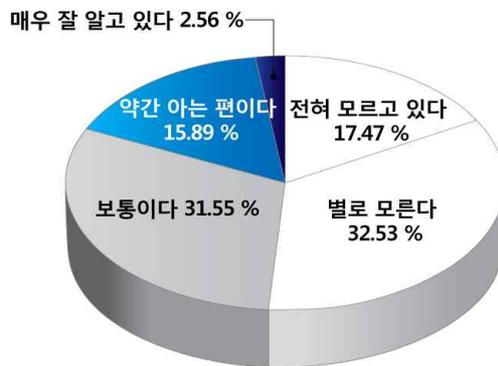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모르고 있다	별로 모른다	보통이다	약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총 합			5점 평균 (점)	
							인지 못하는 편	보통	잘 인지 하는 편		
전 체	1,328	11.60	24.85	45.41	15.44	2.71	36.45	45.41	18.15	2.73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3.28	29.05	43.20	12.31	2.16	42.33	43.20	14.47	2.61
	군 지역	402	7.71	15.17	50.50	22.64	3.98	22.88	50.50	26.62	3.00
성별	남성	661	11.35	24.21	48.56	14.22	1.66	35.56	48.56	15.88	2.71
	여성	667	11.84	25.49	42.28	16.64	3.75	37.33	42.28	20.39	2.75
연령	~29세	209	8.61	22.01	44.02	21.05	4.31	30.62	44.02	25.36	2.90
	30~64세	1,001	10.69	25.07	47.05	14.49	2.70	35.76	47.05	17.19	2.73
	65세 이상	118	24.58	27.97	33.90	13.56	0.00	52.55	33.90	13.56	2.36

■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인식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인식

- 도민인권증진위원회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는 평균 2.54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00%로 매우 높은 반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45% 수준에 불과함
- 지역별로는 시 지역이 2.40으로 군 지역보다 인지율이 낮았으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가장 낮았음



■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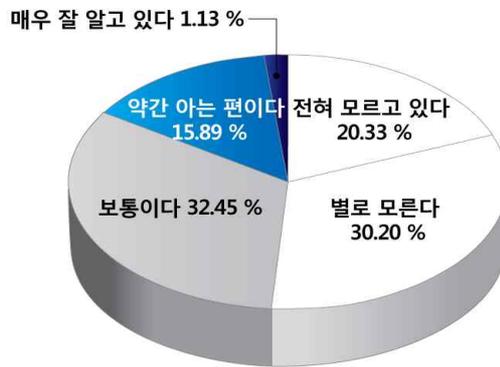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모르고 있다	별로 모른다	보통이다	약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종 합			5점 평균 (점)	
							인지 못하는 편	보통	잘 인지 하는 편		
전 체	1,328	17.47	32.53	31.55	15.89	2.56	50.00	31.55	18.45	2.54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20.09	36.72	28.62	12.63	1.94	56.81	28.62	14.57	2.40
	군 지역	402	11.44	22.89	38.31	23.38	3.98	34.33	38.31	27.36	2.86
성별	남성	661	17.85	31.32	32.07	16.64	2.12	49.17	32.07	18.76	2.54
	여성	667	17.09	33.73	31.03	15.14	3.00	50.82	31.03	18.14	2.53
연령	~29세	209	10.53	35.41	33.49	16.27	4.31	45.94	33.49	20.58	2.68
	30~64세	1,001	17.68	31.87	30.97	17.08	2.40	49.55	30.97	19.48	2.55
	65세 이상	118	27.97	33.05	33.05	5.08	0.85	61.02	33.05	5.93	2.18

■ 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인식

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등 인식

- 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균 2.47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53%인 반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02%에 불과함
- 시 지역의 인지율이 평균 2.34로 군 지역 보다 낮았으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2.1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인식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모르고 있다	별로 모른다	보통이다	약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총 합			5점 평균 (점)	
							인지 못하는 편	보통	잘 인지 하는 편		
전 체	1,328	20.33	30.20	32.45	15.89	1.13	50.53	32.45	17.02	2.47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23.00	33.05	30.99	12.42	0.54	56.05	30.99	12.96	2.34
	군 지역	402	14.18	23.63	35.82	23.88	2.49	37.81	35.82	26.37	2.77
성별	남성	661	18.91	29.95	36.61	13.46	1.06	48.86	36.61	14.52	2.48
	여성	667	21.74	30.43	28.34	18.29	1.20	52.17	28.34	19.49	2.47
연령	~29세	209	15.79	33.49	31.10	16.27	3.35	49.28	31.10	19.62	2.58
	30~64세	1,001	19.88	29.07	33.87	16.38	0.80	48.95	33.87	17.18	2.49
	65세 이상	118	32.20	33.90	22.88	11.02	0.00	66.10	22.88	11.02	2.13

■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

충청남도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여러 단체, 기관, 도민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기관이나 단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충남이 인권증진을 위해 협력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기관의 1순위로는 '도민' 23.87%로 가장 많았으며 '인권 및 시민단체' 23.12%, '도 및 시군청' 22.52%, '대학 및 학계' 13.48% 순으로 나타남
- 인권증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 수행기관으로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에서는 '도 및 시군청'이 70.41%로 가장 많았으며 '도민' 62.35%, '인권 및 시민단체' 62.27%, '대학 및 학계' 36.60% 순으로 나타남

■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1순위)

(단위: %)

		사례수 (명)	도민	충남도청 (시군청)	인권단체 시민단체	대학 학계	검찰	경찰	교육청	소외 계층	기업
전 체		1,328	23.87	22.52	23.12	13.48	3.16	6.78	3.77	1.88	1.43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21.27	24.62	23.54	14.15	2.48	6.59	4.00	1.73	1.62
	군 지역	402	29.85	17.66	22.14	11.94	4.73	7.21	3.23	2.24	1.00
성별	남성	661	22.84	21.18	23.45	15.43	3.18	6.20	4.24	2.12	1.36
	여성	667	24.89	23.84	22.79	11.54	3.15	7.35	3.30	1.65	1.50
연령	~29세	209	17.70	27.27	25.36	14.35	2.87	7.66	2.39	0.96	1.44
	30~64세	1,001	24.28	21.78	22.68	13.79	3.40	6.69	4.10	1.80	1.50
	65세 이상	118	31.36	20.34	22.88	9.32	1.69	5.93	3.39	4.24	0.85

■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1순위+2순위)

(단위: %)

		사례수 (명)	도민	충남도청 (시군청)	인권단체 시민단체	대학 학계	검찰	경찰	교육청	소외 계층	기업
전 체		1,328	62.35	70.41	62.27	36.60	10.84	22.29	14.76	13.25	7.23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57.99	73.33	63.82	38.01	9.40	22.35	15.87	11.99	7.24
	군 지역	402	72.39	63.68	58.71	33.33	14.18	22.14	12.19	16.17	7.21
성별	남성	661	60.51	68.53	62.33	40.09	11.65	20.42	16.34	13.46	6.66
	여성	667	64.17	72.26	62.22	33.13	10.04	24.14	13.19	13.04	7.80
연령	~29세	209	52.15	79.43	63.16	37.32	12.44	24.40	12.92	9.57	8.61
	30~64세	1,001	62.04	69.93	61.94	36.96	11.09	22.18	15.78	13.49	6.59
	65세 이상	118	83.05	58.47	63.56	32.20	5.93	19.49	9.32	17.80	1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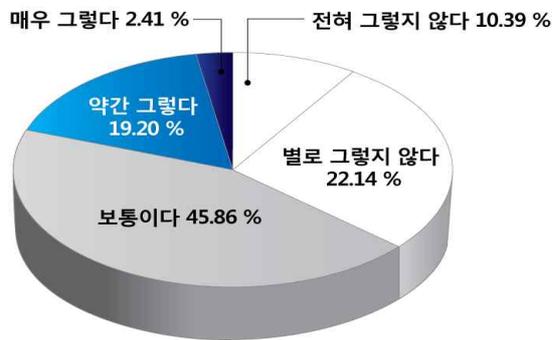
5. 인권 현안과 정책

1) 자유권적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

■ 인권의 제한

경제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인권은 제한될 수 있다

- 경제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인권의 제한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32.53%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21.6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거주 지역별로는 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보다 많음
- 성별로는 남성(18.31%)에 비해 여성(24.89%)에서 긍정적인 응답 비율 높음
- 연령대별로는 상대적으로 고령층에서 긍정의 비율이 높음

■ 인권의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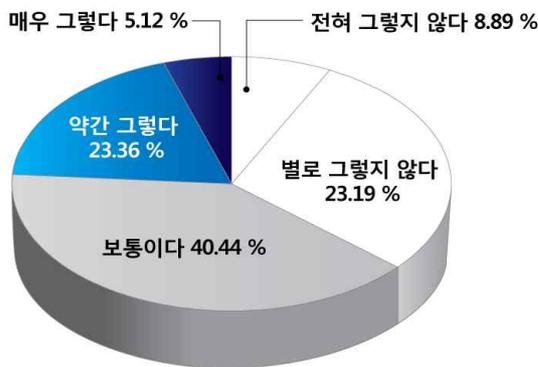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10.39	22.14	45.86	19.20	2.41	32.53	45.86	21.61	2.81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0.80	25.59	44.82	17.39	1.40	36.39	44.82	18.79	2.73
	군 지역	402	9.45	14.18	48.26	23.38	4.73	23.63	48.26	28.11	3.00
성별	남성	661	11.80	23.15	46.75	16.19	2.12	34.95	46.75	18.31	2.74
	여성	667	9.00	21.14	44.98	22.19	2.70	30.14	44.98	24.89	2.88
연령	~29세	209	12.44	23.44	43.06	17.70	3.35	35.88	43.06	21.05	2.76
	30~64세	1,001	10.29	21.68	46.95	18.68	2.40	31.97	46.95	21.08	2.81
	65세 이상	118	7.63	23.73	41.53	26.27	0.85	31.36	41.53	27.12	2.89

■ 사형제도의 폐지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7.48%로 그렇지 않은 경우 (32.08%)에 비해 높음



- 거주 지역별로는 군 지역에서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찬성의 비율이 시 지역에 비해 높음
- 성별로는 여성의 찬성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대별로는 보다 젊은 세대에서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찬성의 비율이 높음

■ 사형제도의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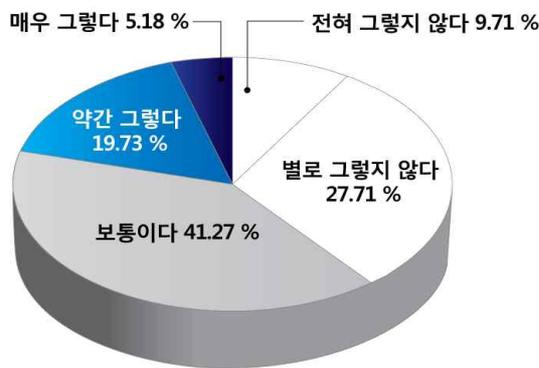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8.89	23.19	40.44	22.36	5.12	32.08	40.44	27.48	2.92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9.29	24.30	40.71	21.92	3.78	33.59	40.71	25.70	2.87
	군 지역	402	7.96	20.65	39.80	23.38	8.21	28.61	39.80	31.59	3.03
성별	남성	661	10.14	24.81	39.49	21.18	4.39	34.95	39.49	25.57	2.85
	여성	667	7.65	21.59	41.38	23.54	5.85	29.24	41.38	29.39	2.98
연령	~29세	209	7.66	22.01	40.67	19.14	10.53	29.67	40.67	29.67	3.03
	30~64세	1,001	9.19	22.88	40.36	23.08	4.50	32.07	40.36	27.58	2.91
	65세 이상	118	8.47	27.97	40.68	22.03	0.85	36.44	40.68	22.88	2.79

■ 개인정보의 수집·열람의 허용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열람하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

-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열람하는 것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1.31%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37.42%)에 비해 매우 낮음



- 거주 지역별로는 군 지역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에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보다 많은 경우에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 높음

■ 개인정보의 수집·열람의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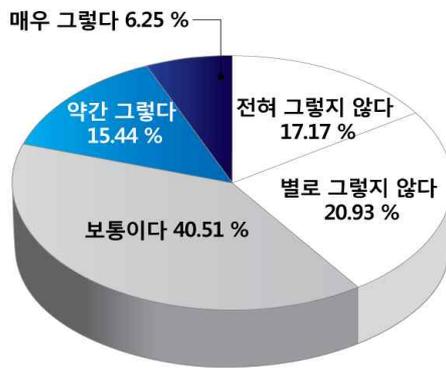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9.71	27.71	41.27	19.73	1.58	37.42	41.27	21.31	2.76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0.15	30.56	41.14	16.85	1.30	40.71	41.14	18.15	2.69
	군 지역	402	8.71	21.14	41.54	26.37	2.24	29.85	41.54	28.61	2.92
성별	남성	661	10.89	29.20	39.94	18.46	1.51	40.09	39.94	19.97	2.70
	여성	667	8.55	26.24	42.58	20.99	1.65	34.79	42.58	22.64	2.81
연령	~29세	209	13.88	30.14	32.06	22.49	1.44	44.02	32.06	23.93	2.67
	30~64세	1,001	8.89	28.37	42.46	18.58	1.70	37.26	42.46	20.28	2.76
	65세 이상	118	9.32	17.80	47.46	24.58	0.85	27.12	47.46	25.43	2.90

■ 군복무의 거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1.39%로 그렇지 않은 경우(38.10%)에 비해 낮음



- 거주 지역별로는 군 지역에서 긍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가 남성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대별로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29세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23.93%), 이들 가운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 역시 제일 높음(41.63%)

■ 군복무의 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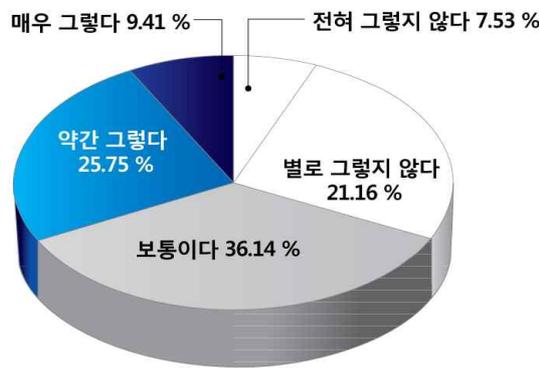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17.17	20.93	40.51	15.14	6.25	38.10	40.51	21.39	2.72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9.01	22.89	38.55	15.66	3.89	41.90	38.55	19.55	2.63
	군 지역	402	12.94	16.42	45.02	13.93	11.69	29.36	45.02	25.62	2.95
성별	남성	661	19.67	21.03	39.94	13.46	5.90	40.70	39.94	19.36	2.65
	여성	667	14.69	20.84	41.08	16.79	6.60	35.53	41.08	23.39	2.80
연령	~29세	209	16.27	25.36	34.45	16.27	7.66	41.63	34.45	23.93	2.74
	30~64세	1,001	17.88	20.28	41.16	14.89	5.79	38.16	41.16	20.68	2.70
	65세 이상	118	12.71	18.64	45.76	15.25	7.63	31.35	45.76	22.88	2.86

■ 국가보안법의 폐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비율은 35.16%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비율(28.69%)에 비해 높음



- 거주 지역별로는 시 지역과 군 지역 간 의견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남
- 성별로는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대별로는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29세 이하, 30~64세, 65세 이상의 순으로 높으나, 65세 이상에서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52.54%로 매우 높음

■ 국가보안법의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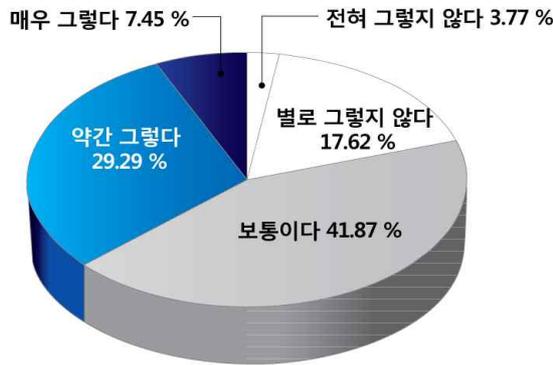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7.53	21.16	36.14	25.75	9.41	28.69	36.14	35.16	3.08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5.62	22.68	36.72	25.92	9.07	28.30	36.72	34.99	3.10
	군 지역	402	11.94	17.66	34.83	25.37	10.20	29.60	34.83	35.57	3.04
성별	남성	661	8.62	19.97	33.59	27.08	10.74	28.59	33.59	37.82	3.11
	여성	667	6.45	22.34	38.68	24.44	8.10	28.79	38.68	32.54	3.05
연령	~29세	209	3.35	16.27	41.15	26.79	12.44	19.62	41.15	39.23	3.29
	30~64세	1,001	7.09	20.68	35.86	26.97	9.39	27.77	35.86	36.36	3.11
	65세 이상	118	18.64	33.90	29.66	13.56	4.24	52.54	29.66	17.80	2.51

■ 시위나 집회의 자유

교통 혼잡이나 소음 등이 발생하더라도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교통 혼잡이나 소음 등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시위나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36.74%로 그렇지 않은 경우(21.39%)에 비해 매우 높음



- 거주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군 지역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고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낮음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에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 모두에서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음
- 연령대별로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서 찬성의 비율이 높음

■ 시위나 집회의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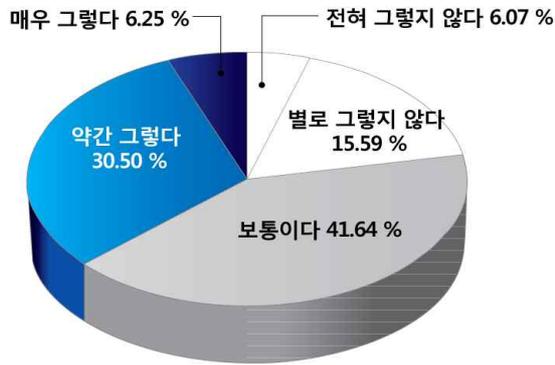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3.77	17.62	41.87	29.29	7.45	21.39	41.87	36.74	3.19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3.78	18.36	42.22	28.29	7.34	22.14	42.22	35.63	3.17
	군 지역	402	3.73	15.92	41.04	31.59	7.71	19.65	41.04	39.30	3.24
성별	남성	661	4.84	18.15	38.43	30.86	7.72	22.99	38.43	38.58	3.18
	여성	667	2.70	17.09	45.28	27.74	7.20	19.79	45.28	34.94	3.20
연령	~29세	209	2.87	21.05	36.36	31.10	8.61	23.92	36.36	39.71	3.22
	30~64세	1,001	4.00	16.48	42.46	29.07	7.99	20.48	42.46	37.06	3.21
	65세 이상	118	3.39	21.19	46.61	27.97	0.85	24.58	46.61	28.82	3.02

■ 표현의 자유

인터넷에 정부정책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 정부정책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표현의 자유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의 비율은 36.75%로 그렇지 않은 경우 (21.61%)에 비해 상당히 높음



- 거주 지역별로는 군 지역에서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다소 높음
- 성별로는 긍정적인 응답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음
- 연령대별로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고,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낮음

■ 표현의 자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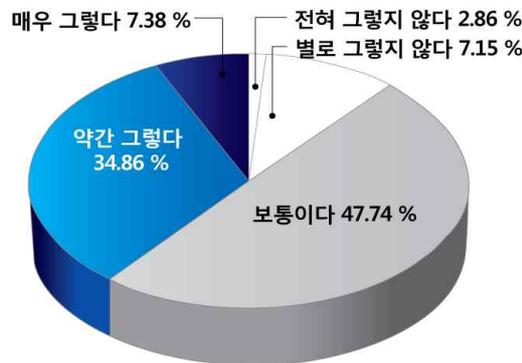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6.02	15.59	41.64	30.50	6.25	21.61	41.64	36.75	3.15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6.70	16.74	40.50	30.45	5.62	23.44	40.50	36.07	3.12
	군 지역	402	4.48	12.94	44.28	30.60	7.71	17.42	44.28	38.31	3.24
성별	남성	661	6.20	16.34	39.33	32.07	6.05	22.54	39.33	38.12	3.15
	여성	667	5.85	14.84	43.93	28.94	6.45	20.69	43.93	35.39	3.15
연령	~29세	209	3.83	15.79	41.15	33.97	5.26	19.62	41.15	39.23	3.21
	30~64세	1,001	6.49	15.28	41.66	30.07	6.49	21.77	41.66	36.56	3.15
	65세 이상	118	5.93	17.80	42.37	27.97	5.93	23.73	42.37	33.90	3.10

2) 사회권적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

■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의 확대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은 확대해야 한다

-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은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의 비율은 42.24%로 그렇지 않은 경우(10.01%)에 비해 훨씬 높음



- 거주 지역별로는 시 지역(46.22%)이 군 지역(33.08%)에 비해 긍정 비율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음
- 연령대별로는 세대 간 큰 차이를 보이며, 젊은 세대에서 찬성의 비율이 높음

■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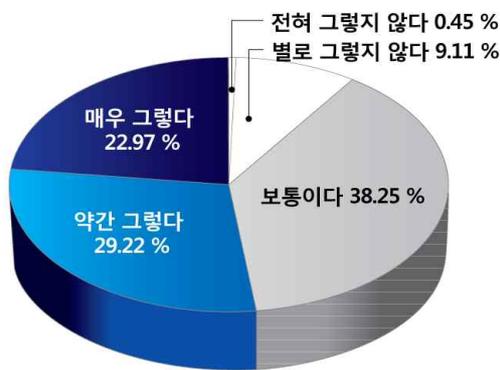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2.86	7.15	47.74	34.86	7.38	10.01	47.74	42.24	3.37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97	5.72	47.08	37.26	8.96	6.69	47.08	46.22	3.48
	군 지역	402	7.21	10.45	49.25	29.35	3.73	17.66	49.25	33.08	3.12
성별	남성	661	2.72	6.81	47.20	34.49	8.77	9.53	47.20	43.26	3.40
	여성	667	3.00	7.50	48.28	35.23	6.00	10.50	48.28	41.23	3.34
연령	~29세	209	0.96	6.70	40.67	40.67	11.00	7.66	40.67	51.67	3.54
	30~64세	1,001	2.90	6.59	49.75	33.47	7.29	9.49	49.75	40.76	3.36
	65세 이상	118	5.93	12.71	43.22	36.44	1.69	18.64	43.22	38.13	3.15

■ 국가에 의한 무상교육

유아교육 및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에 의한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국가에 의해 유아교육 및 고등학교 교육까지 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의 비율은 52.19%로 그렇지 않은 경우(9.56%)에 비해 월등히 높음



- 거주 지역별로는 군 지역(49.50%)이 시 지역(53.34%)보다 높은 긍정
- 성별로는 남성의 찬성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음
- 연령대별로는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29세 이하(54.06%), 65세 이상(53.39%), 30~64세(51.65%)의 순으로 높음

■ 국가에 의한 무상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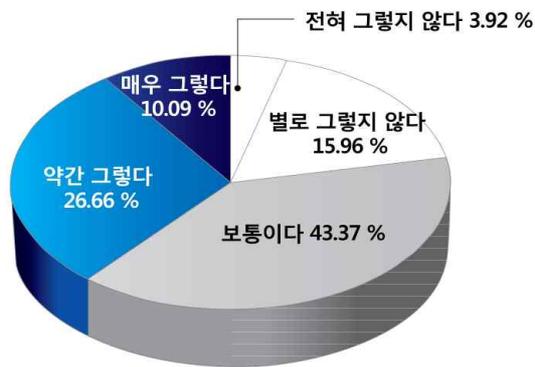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0.45	9.11	38.25	29.22	22.97	9.56	38.25	52.19	3.65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54	8.10	38.01	30.45	22.89	8.64	38.01	53.34	3.67
	군 지역	402	0.25	11.44	38.81	26.37	23.13	11.69	38.81	49.50	3.61
성별	남성	661	0.61	9.53	36.46	28.44	24.96	10.14	36.46	53.40	3.68
	여성	667	0.30	8.70	40.03	29.99	20.99	9.00	40.03	50.98	3.63
연령	~29세	209	0.48	4.31	41.15	23.44	30.62	4.79	41.15	54.06	3.79
	30~64세	1,001	0.50	9.79	38.06	30.87	20.78	10.29	38.06	51.65	3.62
	65세 이상	118	0.00	11.86	34.75	25.42	27.97	11.86	34.75	53.39	3.69

■ 사회복지의 확대

세금을 인상하더라도 사회복지 확대되어야 한다

- 세금을 인상하더라도 사회복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비율은 36.75%로 그렇지 않은 경우(19.88%)에 비해 매우 높음



- 거주 지역별로는 시 지역이 군 지역보다 긍정적인 응답 비율 높음
- 성별로는 찬성하는 경우의 비율에서 남성이 높고, 반대하는 경우의 비율에서는 여성이 높음
- 연령대별로는 젊은 세대일수록 찬성의 비율이 높은 반면, 고령일수록 반대의 비율이 높음

■ 사회복지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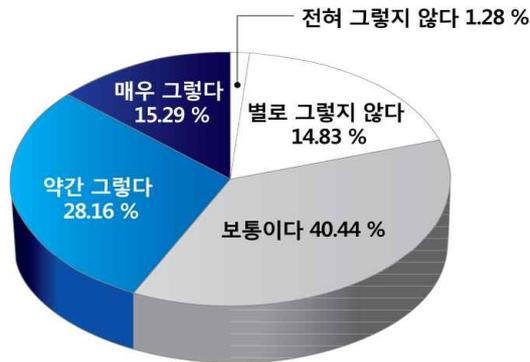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3.92	15.96	43.37	26.66	10.09	19.88	43.37	36.75	3.23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2.27	16.20	44.28	27.65	9.61	18.47	44.28	37.26	3.26
	군 지역	402	7.71	15.42	41.29	24.38	11.19	23.13	41.29	35.57	3.16
성별	남성	661	4.54	13.31	42.97	27.53	11.65	17.85	42.97	39.18	3.28
	여성	667	3.30	18.59	43.78	25.79	8.55	21.89	43.78	34.34	3.18
연령	~29세	209	1.91	14.83	37.32	31.58	14.35	16.74	37.32	45.93	3.42
	30~64세	1,001	3.60	15.28	45.15	25.97	9.99	18.88	45.15	35.96	3.23
	65세 이상	118	10.17	23.73	38.98	23.73	3.39	33.90	38.98	27.12	2.86

■ 개발의 자제

경제적 손해가 되더라도 환경이 중요하므로 생태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

-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해도 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해 생태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비율은 43.45%로 그렇지 않은 경우(16.11%)에 비해 월등히 높음



- 거주 지역별로는 시 지역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 높음
- 연령대별로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에서 세대 간에 큰 차이를 보임

■ 개발의 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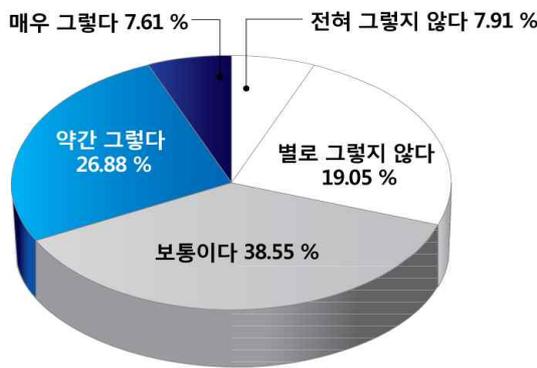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1.28	14.83	40.44	28.16	15.29	16.11	40.44	43.45	3.41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0.54	13.82	40.60	29.70	15.33	14.36	40.60	45.03	3.45
	군 지역	402	2.99	17.16	40.05	24.63	15.17	20.15	40.05	39.80	3.32
성별	남성	661	1.51	14.67	39.18	27.84	16.79	16.18	39.18	44.63	3.44
	여성	667	1.05	14.99	41.68	28.49	13.79	16.04	41.68	42.28	3.39
연령	~29세	209	0.00	11.96	36.36	27.75	23.92	11.96	36.36	51.67	3.64
	30~64세	1,001	1.40	15.48	39.56	29.17	14.39	16.88	39.56	43.56	3.40
	65세 이상	118	2.54	14.41	55.08	20.34	7.63	16.95	55.08	27.97	3.16

■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비율은 34.49%로 그렇지 않은 경우(26.96%)에 비해 다소 높음



- 거주 지역별로는 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시 지역에서 보다 다소 높음
- 성별로는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당히 높음
- 연령대별로는 젊은 세대일수록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고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낮으며, 세대 간의 차이는 상당히 큼

■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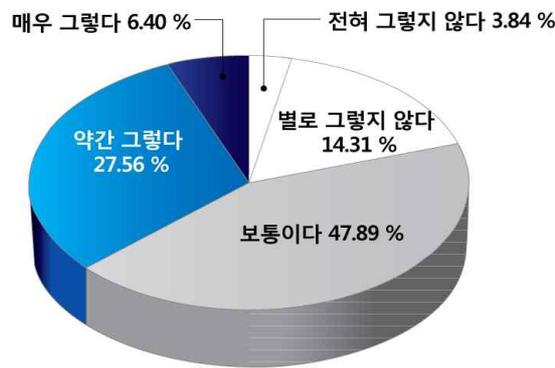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7.91	19.05	38.55	26.88	7.61	26.96	38.55	34.49	3.07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8.53	19.87	38.12	27.11	6.37	28.40	38.12	33.48	3.03
	군 지역	402	6.47	17.16	39.55	26.37	10.45	23.63	39.55	36.82	3.17
성별	남성	661	7.56	18.00	35.40	29.80	9.23	25.56	35.40	39.03	3.15
	여성	667	8.25	20.09	41.68	23.99	6.00	28.34	41.68	29.99	2.99
연령	~29세	209	1.91	13.40	37.32	35.41	11.96	15.31	37.32	47.37	3.42
	30~64세	1,001	8.79	18.68	39.66	26.17	6.69	27.47	39.66	32.86	3.03
	65세 이상	118	11.02	32.20	31.36	17.80	7.63	43.22	31.36	25.43	2.79

■ 문화향유를 위한 개인 지출의 보조

문화향유를 위한 개인 지출을 국가가 보조해야 한다

- 문화향유를 위한 개인 지출을 국가가 보조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율은 33.96%로 그렇지 않은 경우(18.15%)에 비해 상당히 높음



- 거주 지역별로는 시 지역에서 찬성의 비율이 다소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과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 모두에서 다소 높음
- 연령대별로는 세대 간 차이가 확연하여, 젊은 세대일수록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음

■ 문화향유를 위한 개인 지출의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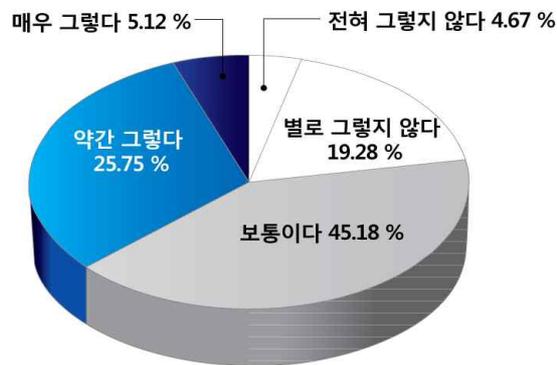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3.84	14.31	47.89	27.56	6.40	18.15	47.89	33.96	3.18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3.67	13.71	48.49	27.65	6.48	17.38	48.49	34.13	3.20
	군 지역	402	4.23	15.67	46.52	27.36	6.22	19.90	46.52	33.58	3.16
성별	남성	661	4.24	14.52	46.29	28.29	6.66	18.76	46.29	34.95	3.19
	여성	667	3.45	14.09	49.48	26.84	6.15	17.54	49.48	32.99	3.18
연령	~29세	209	2.87	9.57	46.89	31.10	9.57	12.44	46.89	40.67	3.35
	30~64세	1,001	3.70	14.89	47.55	27.87	5.99	18.59	47.55	33.86	3.18
	65세 이상	118	6.78	17.80	52.54	18.64	4.24	24.58	52.54	22.88	2.96

■ 장애인 편의시설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비율은 30.87%로 그렇지 않은 경우(23.9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거주 지역별로는 시 지역과 군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에서 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이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에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대별로는 젊은 세대일수록 찬성의 비율이 높으며, 반대의 비율이 낮음

■ 장애인 편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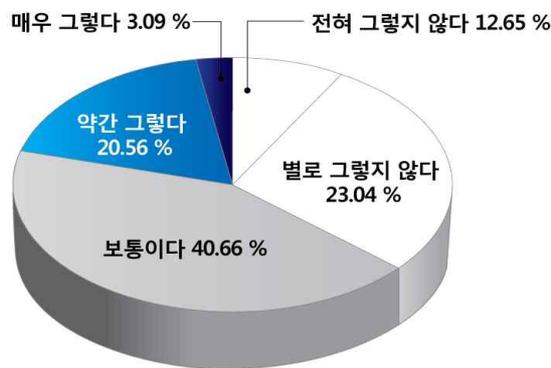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4.67	19.28	45.18	25.75	5.12	23.95	45.18	30.87	3.07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4.64	19.87	44.28	25.92	5.29	24.51	44.28	31.21	3.07
	군 지역	402	4.73	17.91	47.26	25.37	4.73	22.64	47.26	30.10	3.07
성별	남성	661	4.39	18.76	42.81	27.53	6.51	23.15	42.81	34.04	3.13
	여성	667	4.95	19.79	47.53	23.99	3.75	24.74	47.53	27.74	3.02
연령	~29세	209	3.35	12.44	46.41	30.14	7.66	15.79	46.41	37.80	3.26
	30~64세	1,001	4.20	19.08	46.15	25.77	4.80	23.28	46.15	30.57	3.08
	65세 이상	118	11.02	33.05	34.75	17.80	3.39	44.07	34.75	21.19	2.69

■ 동성애의 존중

동성애는 개별적 성적 지향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 동성애는 개별적 성적 지향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비율은 23.65%로 그렇지 않은 경우(35.69%)에 비해 상당히 낮음



- 거주 지역별로는 군 지역이 시 지역에서보다 긍정적 응답 비율 높음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간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 모두에서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전자에서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음
-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19.49%로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동성애의 존중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12.65	23.04	40.66	20.56	3.09	35.69	40.66	23.65	2.78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13.93	24.95	40.17	18.47	2.48	38.88	40.17	20.95	2.71
	군 지역	402	9.70	18.66	41.79	25.37	4.48	28.36	41.79	29.85	2.96
성별	남성	661	11.65	23.75	39.64	21.79	3.18	35.40	39.64	24.97	2.81
	여성	667	13.64	22.34	41.68	19.34	3.00	35.98	41.68	22.34	2.76
연령	~29세	209	4.78	19.14	43.54	29.19	3.35	23.92	43.54	32.54	3.07
	30~64세	1,001	13.39	22.58	41.76	19.18	3.10	35.97	41.76	22.28	2.76
	65세 이상	118	20.34	33.90	26.27	16.95	2.54	54.24	26.27	19.49	2.47

■ 부록: 설문지

충청남도 인권의식 실태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은 충청도민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충청도민의 인권의식을 파악하고, 차별 및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 및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인권정책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충청도민의 인권의식 및 감수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오직 학문적·정책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귀하가 답변한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귀하의 답변은 충청남도의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5월
(재)충남발전연구원

*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조사기관 : 충남발전연구원 (담당 이수철 책임연구원: 041-840-1124 sclee@cdi.re.kr)

조사대행기관 : 대전리서치(담당 왕소연 실장 : , wsye1234@hanmail.net)

I. 충청남도의 전반적인 인권 의식 평가

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본적 인권의 보호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충청남도는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에서 인권은 존중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충청남도에서 인권은 존중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3년 전에 비해서 한국의 인권은 나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6) 3년 전에 비해서 충청남도의 인권은 나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7) 한국사회에서 인권약자(노인,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가족, 외국인 노동자 등)의 인권은 존중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충청남도에서 인권약자(노인,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가족, 외국인 노동자 등)의 인권은 존중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인권의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 ①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보호 등
- ②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의 보장 등
- ③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보장 등
- ④ 공평한 교육과 문화예술의 향유 등
- ⑤ 노인,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가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보호 등

II. 충청남도의 인권 침해와 차별

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충청남도에서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심각하 지 않다	별로 심각하 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경찰, 검찰이 불법적으로 불심검문, 연행, 구금, 심문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본인 모르게 신문, 방송,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자신의 종교, 신념,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당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4) 시위, 집회 등의 자유가 제한받는 것	①	②	③	④	⑤
5) 직장 등에서 개인이 노조 등 가입 등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6)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7) 경제적 이유 등으로 공평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8)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9) 경제적인 이유로 질병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0)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위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4. 충청남도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존중 안됨	별로 존중 안됨	보통	다소 존중 됨	매우 존중됨
1) 여성	①	②	③	④	⑤
2) 노인	①	②	③	④	⑤
3)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4) 아동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6)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정)	①	②	③	④	⑤
7) 노동자	①	②	③	④	⑤
8) 이주(외국인)노동자	①	②	③	④	⑤
9) 비정규직 노동자	①	②	③	④	⑤
10) 요양원 등 사회복지 시설 생활자	①	②	③	④	⑤
11) 교도소 등 구금시설 수감자	①	②	③	④	⑤
12) 전과자	①	②	③	④	⑤
13) 일반 충남도민	①	②	③	④	⑤

8. 최근 3년 동안 충청남도에 살면서 귀하나 귀하 가족, 혹은 주변 지인들이 다음과 같은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표시)

문항	내가 경험하였다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아는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1)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이가 많거나 어리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출신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국적(인종,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키, 몸무게, 외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결혼/미혼/이혼 등 혼인상황으로 인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정치적 성향, 사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성적 지향(동성애, 양성애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종교적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가난하다는 이유로 불공정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간염, 우울증 등 질병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1. 귀하는 위와 같은 인권 침해나 차별을 경험하였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주시시오

- ① 해당기관이나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했다
- ② 청와대, 충남도청, 시·군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했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 ④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 ⑥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했다
- ⑦ 인터넷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 ⑧ 기타 (취한 행동: _____)
- ⑨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9-2. 만약 귀하가 인권침해를 당한다면 어떤 행위를 취하시겠습니까? **우선순위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 __, 2순위 : __)

- ① 해당기관이나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다
- ② 청와대, 충남도청, 시·군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한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 ④ 시민단체에 도움을 청한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 ⑥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한다
- ⑦ 인터넷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올린다
- ⑧ 기타 (취할 행동: _____)
- ⑨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10. 다음은 충청남도의 각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노인들은 가족 간의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노인들은 여가와 문화 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노인들은 대중교통의 이용 등에 불편을 겪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노인들은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들은 키, 몸무게, 생김새 등 외모로 차별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들은 가정형편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들은 학교, 친구, 선후배 등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 및 문화 시설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장애인들은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1)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언어폭력이 많이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언어 때문에 일상의 불편함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3)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외모의 차이로 차별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모국의 가족들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을 겪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외국인노동자들은 자신의 출신국이나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외국인노동자들은 서툰 한국말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음은 충청남도의 각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노인들은 일이나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 지급 등 부당한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5) 장애인들은 승진이나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6)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집이나 방을 구하는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경제적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일자리나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승진이나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외국인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해도 한국인과 심한 임금차별이 존재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외국인노동자들은 직장 내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은 충청남도의 각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노인들은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노인들의 위한 사회복지관 시설은 부족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노인들의 생활을 위한 주거 편의시설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장애인 복지기관은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장애인들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장애인들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장애인 복지기관은 장애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인들의 생활을 위한 주거 편의시설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본인과 자녀들의 의료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외국인 노동자들도 의료보험과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다음은 충청남도의 각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노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들은 정규과목 이외의 특별활동을 제한당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들은 학업성적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보충학습·야간자율학습을 강요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들은 학교 외부활동을 제한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의 운영은 청소년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 교육시설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8)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학업을 수행하는데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음은 충청남도의 각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참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경로당 같이 노인들이 모여 사회현안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노인들의 이동거리 등의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노인들은 공공시설, 공공기관의 입장 및 이용에 차별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들은 외부 집회나 행사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들은 학교 측에서 정한 종교행사를 종종 강요당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장애인들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장애인들은 종종 식당이나 목욕탕의 출입을 거절당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장애인들은 이동편의시설의 부족으로 공무를 처리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반사회 등 마을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언어 등의 이유를 투표권이 있음에도 선거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과의 외국인 노동자의 종교는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문화가족 이주성과 외국인 노동자들은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한 불심검문 등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충청남도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여러 단체, 기관, 도민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기관이나 단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우선순위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__, 2순위 : __)

- ① 도민 ② 충청도청(시·군청) ③ 인권단체 등 시민단체 ④ 대학 등 학계 ⑤ 검찰
 ⑥ 경찰 ⑦ 교육청 ⑧ 소외계층 ⑨ 기업 ⑩ 기타_____

IV. 인권 현안과 정책

24. 다음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경제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인권은 제한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열람하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교통 혼잡이나 소음 등이 발생하더라도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인터넷에 정부정책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다음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권리(사회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은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유아교육 및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에 의한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세금을 인상하더라도 사회복지에 확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경제적 손해가 되더라도 환경이 중요하므로 생태계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문화향유를 위한 개인 지출을 국가가 보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동성애는 개별적 성적 지향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귀하의 개인적 배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_____ ② 남성 _____

2.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19 ()년생

3. 귀하의 결혼상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 사별 · 기타

4.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무학력 ② 초등학교 졸업(중학교 중퇴 포함)
 ③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포함) ④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 포함)
 ⑤ 대학 졸업 ⑥ 대학원 졸업 이상

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무직
- ②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사 등)
- ③ 관리직(기업체 간부, 고위공무원 등)
- ④ 사무직(회사원, 은행원 등)
- ⑤ 판매직(영업사원, 회사홍보사원 등)
- ⑥ 서비스직(가게주인, 음식점 주인 등)
- ⑦ 생산직(공장근로자, 단순노동자 등)
- ⑧ 농업·어업
- ⑨ 주부·학생
- ⑩ 기타 ()

6. 귀하의 1년간 평균 가족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

본인 소득을 포함한 전체 가족소득 : 1년에 ()만원

7. 귀하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도(특별시/광역시) ()시(군/구)

8. 귀하는 언제부터 충청남도에 살았습니까? ()

년부터

9. 현재 귀하께서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충청남도 ()시/군 ()읍/면/동

참여연구진

- 연구 책임

이수철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참여 연구진

고승희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용현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홍성호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